

2011학년도 동계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대구 연수 교재

-
- 연수일정 및 장소
 - 2011년 1월 24일(월)~1월 28일(금)
 - 연수장소 : 대구은행연수원
 - 연수대상 : 대구 경북지역 역사과 교원
 - 주 최 : 동북아역사재단
-

2010학년도 동계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일정표

o 대구연수 : 2011년 1월 24일~1월 28일

날짜 \ 교시	0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점심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09:00 ~09:20	09:30 ~10:20	10:30 ~11:20	11:30 ~12:20	12:30 ~13:20	13:30 ~14:20	14:30 ~15:20	15:30 ~16:20	16:30 ~17:20
제1일 (1월 24일)	등록 / 개강식	'동아시아사' 왜 가르치나? (1강)			과목	한일교류사의 시각 (2강)			
	담당자	박덕호(교육과학기술부)			강사	손승철(강원대)			
제2일 (1월 25일)	과목	서구와 동아시아의 만남(3강)			과목	17·18세기 동아시아 국제무역과 경제변동 (4강)			
	강사	김정인(춘천교대)			강사	민경준(경성대)			
제3일 (1월 26일)	과목	중원왕조와 국제관계, 울령(5강)			과목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소농민경영 (6강)			
	강사	김택민(고려대)			강사	안병우(한신대)			
제4일 (1월 27일)	과목	근세 일본의 전개와 동아시아(7강)			과목	일본의 불교 (8강)			
	강사	윤병남(서강대)			강사	이근우(부경대)			
제5일 (1월 28일)	과목	베트남 근현대사와 동아시아 (9강)			과목	'동아시아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10강)			수료식
	강사	노영순(한국해양대)			강사	신선호(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

◆ 목 차

제 1 강 ‘동아시아사’ 왜 가르치나?	박덕호(교과부)/ 1
제 2 강 한일교류사의 시각	손승철(강원대)/ 23
제 3 강 서구와 동아시아의 만남	김정인(춘천교대)/ 37
제 4 강 17·18세기 동아시아 국제무역과 경제변동	민경준(경성대)/ 55
제 5 강 중원왕조와 국제관계, 율령	김택민(고려대)/ 71
제 6 강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소농민경영	안병우(한신대)/ 83

제 7 강 근세 일본의 전개와 동아시아	윤병남(서강대)/ 99
제 8 강 일본의 불교	이근우(부경대)/ 107
제 9 강 베트남 근현대사와 동아시아	노영순(한국해양대)/ 127
제 10 강 ‘동아시아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신선호(교과부)/ 139

※ 본 교재는 교원연수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동아시아사’ 왜 가르치나?

박덕호(교육과학기술부)

- I. 전쟁과 교육
- II.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
- III. ‘동아시아사’와 역사교사

I. 전쟁과 교육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가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끔직한 전쟁이었다. 미국 육군성의 발표에 따르면 약 6,500만 명이 전쟁에 동원되었는데 이는 주요 교전국의 15세 이상 49세 이하 남성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사상자의 비율은 51.7%에 이르렀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세계대전은 이전의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파괴와 재앙을 가져왔다. 많은 사람들과 지식인들은 세계가 공멸할 수 있는 끔직한 경험은 제1차 세계대전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보았다. 전쟁을 통해 치르는 희생과 피해가 너무나 컸으므로 누구도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은 서로가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한 세대가 채 지나기 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은 1차 세계대전을 능가하였다. 세계를 전장으로 하였고 전쟁에 참여한 국가는 연합국측이 49개국 동맹국측이 8개국이며 중립국은 스위스 등 6개국에 불과하였다. 동원병력은 1억 1000만 명이었으며 전사자가 2700만 명, 민간인 희생자도 2500만 명이나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과 비교해서는 동원 병력 수는 약 2배, 전사자는 5배, 민간인 희생자는 50배나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이어 또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학자들은 세계대전이 일어난 원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쟁의 요인 중 하나로 교과서 서술과 이에 따른 교육문제를 지적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한 번도 적과 마주쳐 본 적이 없는 세대들이 실제 전쟁터에서 적국의 군인을 대면한 사람보다 더 상대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실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것이 아니라 교과서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과서·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가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이다. 유네스코는 1945년 11월 44개국 정부 대표에 의하여 유네스코 헌장이 제정된 이래 국가와 국가 사이의 상호이해와 평화 공존 노력을 해 오고 있다.

II.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

1.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의 역사(1955~1981)

연합국군최고사령부(GHQ)의 지도로 1946년에 제작된 소·중·고교 및 사범 학교용 역사교과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하기 이전과 크게 다른 내용으로 기술되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책임을 일부 우익정치인과 군부에 전가한 역사관은 문제였지만, 1931년 일본의 만주침략, 1937년 중일전면전쟁, 동남아시아 점령 등을 모두 ‘일본의 침략’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53년 교과서 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당분간’ 문부성에서 교과서 검정을 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1955년에는 일본정부 스스로 내외적인 정책목표를 교육정책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검정을 전문으로 하는 조사관 인력을 확보하여 교과서검정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문부성령으로 교과용도서조사관제도를 상설화하고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 의 인원도 16명에서 80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들 가운데 사회과 교과서의 조사관은 황국사관을 소지한 사람들이었다. 더구나 1958년 「학습지도요령」 개정판이 일본정부의 기관지인 「관보」에 고시되면서 이 법령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검정에 필요한 인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자, 1961년도용 소학교 교과서의 82%를 제1차 검정에서 불합격 처리하는 등 교과서 검정제도를 사실상 국정제도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중·고교 역사교과서 가운데서도 검정에 불합격된 경우가 속출하였다. 가령 역사교과서에서는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

며 한국인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 1937년의 남경대학살 등 중국을 침략하고 중국인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서술, 그리고 한국인과 중국인의 저항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왜냐하면 일본정부가 검정 지도를 통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나쁜 것처럼 기술해서는 안되며 전쟁은 부득이했다고 취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진출’했으며 한국병합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처럼 언급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중국을 지배하고 불행하게 했다는 것은 부적당하며, 태평양전쟁이란 단어는 역사적 용어가 아니므로 대동아전쟁으로 표기하라는 등을 검정 지도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제1차 교과서 공격’이라고 한다.

일본의 침략을 은폐·옹호하고 황국사관을 조장하는 등 교과서에 대한 국가통제의 강화는 1965년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교수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재판이란 형태의 저항을 야기하였다. 흔히 이를 ‘이에나가 교과서 소송’이라고 하는데, 재판은 1965년부터 시작된 제1차 소송(손해배상), 1967년부터 시작된 제2차 소송(검정처분의 취소), 1984년부터 1997년까지 13년간 진행된 제3차 소송(손해배상) 등 32년간 진행되었다. 특히, 제2차 소송에 대한 1970년 7월 동경지방법재판소의 판결, 곧 스기모토(杉本) 판결은 1970년대 역사교과서 서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이에나가측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논쟁으로 교육이론과 법이론에서 명쾌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즉, 재판에서는 ① ‘국가의 교육권’과 ‘국민의 교육권’ 가운데 어떤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 것인가, ② 역사교육이 국가에 의해 국민을 교화시키는 수단으로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진리교육’이 되어야 하는가, ③ 검정이란 이름 아래 학설을 포함하는 교과서 집필자의 사상까지 심사하는 것은 올바른 검정기준인가 아닌가라는 쟁점 가운데 모두 후자의 의견이 지지를 얻었다.

이에 따라 자유서방(自由書房)이란 출판사의 1974년도판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에서부터 남경대학살에 관한 언급이 다시 등장하고, 1975년도판 중학교 역사교과서 가운데 2개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이를 언급하였다. 중국에 대한 침략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려는 경향은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197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도 요인의 하나였지만, 이에나가 교과서소송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관한 서술에도 영향을 끼쳤다. 즉, 조선에 대한 지배를 ‘식민지정책’이란 이름으로 언급하고 일본의 침략과 지배과정에서 의병운동과 3·1운동이 일어나는 등 한국인이 저항했으며 이를 일본군이 무력을 앞세워 진압했다는 사실을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나. 일본 역사교과서 1차 파동(1982년도)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이 모든 교과서에 기술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자민당과 일본정부는 반격을 시작하였다. 1979년 11월 이시이(石井一朝)는 「新憂うべき教科書の問題」이란 글에서 교과서 집필자 등을 실명 거론하며 공격하였고, 자민당은 『自由新報』에 1980년 1월부터 8월까지 19회에 걸쳐 「いま教科書は-教育正常化への提言」이란 글을 연재하였다. 일본정부와 자민당, 우익 인사 등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교과서 내용에 대해 공격할 수 있었던 바탕은 1980년 6월의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현실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더구나 1980년 7월 법무상인 奥野誠亮가 "현재의 교과서는 (나라를 사랑하자라는 말을 버리고 있다 등)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는 등 우익 정치인들의 우경적인 발언도 잇따랐다. 정치현장에서의 이와 같은 교과서 공격에 대해 우익 언론과 경제계도 호응하였다.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이 여세를 틈타 교과서 검정을 신청한 출판사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자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1980년 12월 자민당에 교과서문제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정을 강화하고, 교과서 채택지구를 광역화하며, 교과서통제법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教科書制度改革草案」을 확정하였다. 일본 문부성은 이것을 받아 1981년 11월에 발족한 제13기 중앙교육심의회에서 교과서문제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과서제도를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역사왜곡을 주도하는 일본 정부, 자민당, 우익 인사와 이에 저항하는 양심적인 학자, 변호사 및 교과서운동 관계자 등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문부성의 검정사례가 일본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교과서의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는 교과서에 8·15 해방을 "일본이 지배권을 상실했다"로 언급하였고, '침략'을 '출병'으로, '출병'을 '파견'으로, '수탈'을 '양도'로, '전제'를 '통치'로, '3·1운동'을 '데모와 폭동'으로, 강압적인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신사참배도 장려됐다'라는 식으로 문부성에서 검정을 지도했다고 보도하였다. 문부성의 검정지도가 '삭제하는 검정'에서 '지도를 통해 다시 쓰게 하는 검정'으로 바뀐 것이다. 이를 '제2차 교과서 공격'이라고 하고, 동시에 한국측에서는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첫 번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이었다.

일본 정부의 검정 지도 내용은 1982년 6월경부터 일본의 언론을 통해 국내에 전달되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7월 말경부터였다. 국내 언론은 이미 7월 하순경부터 한국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가 연일 1면에 게재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국민감정도 격앙되어 갔다. 정부와 국회는 언론이 선도하는 폭발적인 비판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한국 정부는 8월 3일에 ‘상당한 각오’로 역사왜곡 문제에 대처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비망록(備忘錄)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또 교과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실무자를 파견하겠다는 일본정부의 제의를 거부했다. 중국 정부도 주일 대사를 일시 소환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국회도 8월 5일 문교공보위원회를 열어 정부측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하며 정부측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해명도 분명한 시정의사가 아니면 해명 사절을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면담을 거부하였다.

8월 들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제협력자금을 빌리기 위해 그동안 벌여 왔던 외교교섭을 중단하는 한편, 왜곡내용에 대한 분석 작업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83년도부터 사용될 예정으로 검정된 고등학교용 일본사(10종), 세계사(10종), 현대사회(2종) 등을 대상으로 ① 즉각 시정이 필요한 사항, ② 조기 시정이 필요한 사항, ③ 기타 시정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한 결과, 24항목 167곳이 왜곡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이후 9월 27일에 ‘즉시 시정’ 항목 19개를 포함하여 모두 45개 항목의 수정·검토사항을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제출하고 수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의 수습을 위해 11월 16일 ‘근린제국 조항(近隣諸國條項)’, 즉 “인근 아시아 제국과의 관계에 관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에는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새로운 검정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한국정부에서 ‘즉각 시정’을 요구한 19개 항목 가운데 7개 항목의 왜곡된 표현을 수정하였다.

한편 한국에서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정을 거치면서, 더 이상 일본에 대한 분노와 감정만을 갖고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인식하에 ‘극일(克日) 문제’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상징이 8월 28일부터 본격화된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범국민모금운동이었다. 1982년 연말까지 모금된 성금액은 349억 여 원, 추진위가 해산하는 1986년 5월말까지 모금된 성금은 총 492억여 원이었고 이자가 188억여원이었다. 당초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해

목표로 세웠던 500억 원을 훨씬 상회하였다. 독립기념관에 ‘벽돌 한 개씩을’이란 구호 아래 진행된 이 운동을 계기로 정부와 일본을 향한 비판적인 국민 감정도 일단 수그러들기 시작하였으며, 역사교육과 관련해서는 ‘민족사관’을 재정립하여 국사교과서에 반영하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일제의 침략, 수탈의 역사와 항일투쟁사를 집중연구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다. 일본 역사교과서의 변화(1983~2000)

1982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문제 이후, 다시 일본 역사교과서가 양국간에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1986년에 『신편 일본사』(原書房) 교과서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2차 교과서 왜곡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교과서는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편집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로 일본의 아시아 침략 사실을 은폐하는 논지를 담고 있었다. 문부성은 주변국이 반발하자 검정 합격 상태에 있던 이 교과서를 이례적으로 재심사, 4차례에 걸쳐 문제된 기술을 수정시킨 후 최종 합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신편 일본사에 가해진 기술 재수정은 무려 350곳에 달했을 정도로 역사 편향 기술이 두드러졌다. 일본 정부는 당초 ‘통계자료 변경, 법률 개정 등 객관적 사실의 변경에 한해 재수정이 가능하며 역사인식 문제는 대상이 안된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관여해 바꾼 전례를 남긴 셈이다.

그러데 이 과정에서 문부상 후지오 마사유키의 다음과 같은 망언은 한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였다.

“... 당시 조선반도는 ... 다름 아닌 청국의 속령이다 ... 한일합방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양국의 합의 위에서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의 조선제국에는 독립 국가를 유지해갈 능력도 기개도 없어 ... 한일간의 불행한 역사를 낳은 책임의 절반은 조선 대한제국 측에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 병합된 한국에 대해 일본이 매우 악의를 가지고 있었을 리도 없는 것이 아닌가. 가령 기초적인 교육에 대해서도 일본은 많은 예산을 투입했던 만큼 ... 반드시 나쁜 짓만을 한 것은 아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한국측의 계속되는 항의에 못 이겨 후지오 문부상을 사임시키고 나카소네 총리가 중의원 본회의에서 후지오 발언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침략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 나카소네의 발언도 기본적으로 ‘외교전략상’의 필요성에 의

한 것이었다. 결국 1986년 교과서 왜곡 사건도 한국측의 공세에 일본이 일정 정도 응함으로써 일단락 될 수 있었다.

1989년 사회주의의 종주국 소련의 몰락과 함께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대일과거청산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심에 1990년 1월에 결성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11월에 조직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있었다. 새로운 움직임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은 사건은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의 자기고백이다. 김학순의 고백은 가해자로서 일본 정부를 뚜렷이 지목했고, 피해여성들로 하여금 자학과 침묵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발언을 하게 하였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상정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진상규명활동을 병행하였다. 또 1992년 1월 8일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를 시작하였다.

이에 1993년 8월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거 정부시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시인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5월과 6월에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그 결과 1993년에 검정한 9종의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와 1997년에 검정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모두에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서술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본내에서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갔다. 그 결과 1996년 12월에 극우 성향을 보이는 인사들이 대거 참가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이 결성되었다. 이 모임에는 교수·언론인·수필가·만화가·작가·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발족 당시 78명이, 2000년 3월에는 회원이 1만 여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전국의 여러 곳에 지부가 설치되었다.

‘새역모’는 “전쟁 후 일본의 역사 교육은 일본인이 계승해야 할 문화와 전통을 잊지 못하고 긍지를 잃게 하고 있다”면서 역사왜곡의 필요성을 은근히 역설하였다. “더욱이 자학적 경향은 냉전 종결 후에 한층 더 강해지면서 현행 역사 교과서가 한국, 중국 등 옛 적대국의 선전을 그대로 사실로서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모임은 새로운 교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전하고, 나아가 전체적인 교육의 틀로 만들어 가는 3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새역모’의 역사인식은 지금까지의 역사교과서 서술 자세는 이른바, 일본의 역사를 비하하는 ‘자학사관’이 깔려있다고 하며, 중학교 검정교과서에서

‘중군위안부’ 항목의 긴급 삭제를 요구하고,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일본국가 지상주의 역사관’에 입각할 것을 천명하고 있었다.

라. 왜곡된 우익 역사교과서(2001, 2005, 2009년도)

‘새역모’는 일본 중학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후소사(扶桑社)에서 제작하여 2000년에 문부성에 검정을 신청하였다. 2001년 이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자, 우리 정부는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을 구성하고 일본정부의 왜곡실태를 조목조목 분석한 「수정요구안」을 일본정부에 전달하는 등 강력히 항의하였다. 한일 양국간 관계가 악화되자 2001년 10월 15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일역사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2년 3월 5일 양국이 동시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반면, ‘새역모’측은 ‘새역모’ 역사교과서 채택률이 0.03%에 불과하자 2001년 9월 23일 제4회 총회에서 임원진을 대폭 개편하고, 교과서 채택의 참패원인을 분석하면서 2005년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선포하였다.

일본사회의 우경화가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있는 상황에서 2005년 ‘새역모’의 후소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였으며, 동 교과서 채택률 10% 달성을 위해 자민당 등 고위 인사들의 후원을 등에 업고 노골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가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동 회의(3.9)에서 2001년과 같이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반장으로 NSC,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책기구인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을 구성·운영하였다. 또한 한일 시민단체에서는 왜곡된 우익교과서의 불채택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왜곡된 교과서는 ‘새역모’측에서 목표한 10%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인 0.39%수준에서 채택되었다.

2001년과 2005년 중학교 역사 및 공민 교과서 왜곡 파동을 일으켰던 ‘새역모’는 교과서 채택률 저조로 인한 내부 갈등으로 ‘후소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지유사’를 선정하였으며, 동 출판사는 2008년 4월 ‘새로운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신청함에 따라 2009년에 검정을 통과한 왜곡된 우익교과서는 2종으로 증가하였으며, 채택율은 1.7%(후소사 0.6%, 지유사 1.1%)로 높아졌다.

2. 중국의 역사왜곡

가. 동북공정

중국은 1994년부터 우리의 고대사인 고구려 역사를 중국 변방의 역사로 왜곡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부터 5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동북공정¹⁾을 통해 우리나라 상고사의 왜곡을 추진하였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한 이유는 향후 한반도의 통일 등 정세변화가 중국 동북지역에 미칠 정치적·사회적 영향과 충격을 차단하려는 의도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국가주의 역사관, 즉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동북지역에 적용하여 중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완결하려고 한다. 동시에 조선족이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져 동요하거나 이탈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부여사·고구려사·발해사’는 중국사라는 논리를 일반화하여 ‘만주는 우리민족의 고토’,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사’는 한국사라는 한국의 역사인식에 대응하고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 사이의 역사적 관련성을 부정²⁾하려 하고 있다.

나. 단대공정³⁾(斷代工程)과 탐원공정⁴⁾(探源工程)

동북 공정과 관련된 중국의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최근 중국 정부가 국가주의 고양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역사 프로젝트인 ‘단대공정(斷代工程)과 탐원공정(探源工程)에 대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단대공정(斷代工程)은 1996년 5월~2000년 9월에 추진된 것으로 일종의 ‘중국 역사 늘이기 작업’이다. 이는 중국 고대 문명으로서 역사상 특수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夏, 商, 周의 연대를 확정하여 궁극적으로 중국 상고사의 뿌리를 위로 더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2003년에 시작된 또 다른 국가 차원의 역사 프로젝트인 탐원공정(探源工程)은 夏代 이전의 기원전 3000

1) ‘동북 공정’ : 중국 사회 과학원 산하 疆疆史地研究中心 (www.chinaborderland.com)이 동북 변방 지역(만주)의 역사와 현실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2002년 2월 28일부터 5년간 시행한 연구사업이다. 중국 동북 3성지역에서 일어난 과거 역사와 그로 인해 파생되어 나온 현대사와 미래사가 주요 연구대상이다.

2)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사는 한국사’라는 논리가 지속될 경우, 몽골이 元史를,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가 서역사를, 베트남이 진·한 시기 백월과 남월의 역사를 각각 자국사로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3) 그 결과 서주 이전의 시대를 하(夏)(BC2070-1600), 상(商)(전기 BC1600-1300년, 후기 BC 1300-1046년), 서주(西周)(BC1046-771년)으로 확정하였다.

4) “중국고대문명탐원공정”의 기본 목표는 용산시대(BC3000-BC2000년)의 고고문화와 문명의 발전 과정, 그리고 고대의 역사전설 가운데 오제(五帝)시대의 역사문화를 탐색하는 것이다. “용산시대”=“오제시대”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 프로젝트로, 엄황의 역사를 지금부터 약 5000년 전후로 인식하여, “5천년 중화 문명사”란 습관적 표현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년부터 기원전 2000년 사이의 ‘龍山 文化’시기를 연구 범위로 하고 있는데, 신화시대를 역사 시대로 전환시켜 중화문명의 유구함을 통하여 중국 인민의 자긍심과 중화주의 열정을 고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다. 요하문명론

동북공정 종료 후에도 중국은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의 역사적 관계 단절을 기도하고, 한반도 정세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학술적·현실적 차원의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1980년대부터 요하주변에서 본격적으로 출토되기 시작한 고대문명을 중국사의 일부로 주장하는 소위 ‘요하문명론’이다. 이러한 ‘요하문명론’이 수용될 경우 한국사의 독자성이 원천적으로 부정되고 한국의 역사문화는 중국의 방계문화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라. 중국의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왜곡

중국은 舊 소련 교육과정을 모델로 ‘역사교학대강’을 제정(1953)하여 중등학교 역사교육 지도문건으로 활용하였다. 그런데 1980년대 개혁·개방정책 실시이후 달라진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고, 학생중심의 소질교육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인 ‘역사과정표준’을 도입(2001)하고 있다. 동 교육과정은 중국현대사를 강조하면서 역사교육을 지나치게 現在主義的 관점에서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정치영역에서는 국정교육, 정치사상교육 일색이고, 개혁·개방의 당위성, 불가피성 설명에 치우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009년 현재 중국의 중학교에서는 ‘역사과정표준’에 의거 제작된 실험본 역사교과서가 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역사교학대강’과 ‘역사과정표준’에 의거 편찬된 교과서가 병용되고 있다.

2002년 이전까지는 모든 역사교과서들이 ‘역사교학대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한국사를 서술하되, 고구려사를 한국사의 삼국시대로 기술해 왔으나, ‘역사과정표준’에 따른 실험본 교과서는 한국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소략하여 기술하고 있다.⁵⁾

현재 중국의 역사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은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대폭적인 수정·보완이 예상된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채택된 다양한 역사서술 방향에서 국가의 통제 강화, 전통적 역사인식(혁명사관) 강조를 통한 혁명사와 근현대사 교육 비중을 강화 및 통일적

5) 14개 출판사가 출판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중 인민교육출판사 등 8개 출판사의 교과서가 한국관련 내용을 삭제함

다민족국가의 성립을 강조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따라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Ⅲ. ‘동아시아사’와 역사교사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 및 동북공정 등 주변국의 반복적인 역사왜곡은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동아시아사’ 과목이 신설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동 과목의 신설은 이웃 나라들의 민족주의 팽창에 대한 우리 나름의 대응 민족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의 역사 인식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즉 역사교육을 통해 아시아 역사 갈등을 주체적 입장에서 극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만들어진 것이다.

동 교과서의 신설에는 또한 역사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럽의 사례와 한·중·일 민간 차원의 사례가 크게 작용하였다. 유럽의 경우, 유네스코가 중재한 폴란드와 독일 교과서 분쟁 해결 사례는 교과서 개선을 통하여 국가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킨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폴란드와 독일간의 역사 교과서 협력은 1972년 7월 시작되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양국은 1972년 2월 ‘역사와 지리교과서 개정을 위한 폴란드·독일위원회’를 창립하여 9차례의 회의를 거친 다음 1977년에 ‘서독과 폴란드의 역사 및 지리 교과서를 위한 권고안’을 출판했다. 권고안이 완성된 후에도 1년에 1회씩 폴란드와 독일의 여러 도시를 번갈아 가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1980년대에는 그간의 성과를 10권의 책으로 출간했으며 2001년에도 《20세기 독일·폴란드 관계사에 대한 교사 안내서》를 출간했다. 우리의 경우, 민간차원에서 2005년 이후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표방하는 공동역사교재들이 발간되었다.⁶⁾ 그리하여 2007년 개정 고시된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역사’ 과목의 독립과 고교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가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2012년부터 학교현장에서 적용될 ‘동아시아사’ 과목은 교과서의 성격과 목표 및 성립 배경을 감안할 때 그 어떤 교과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교과에 비해 학술적 기반, 참고서적, 교수·학습자료 등 모든 면에서

6) 조선통신사(2005), 미래를 여는 역사(2005),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근현대사(2005), 마주보는 한일사(2006), 한일교류의 역사(2007)

부족하기 때문이다. 역사교육의 한 부분으로 동 교과가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역사교사의 전폭적인 후원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 문헌】

1. 교육인적자원부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지원단(2005). 일본의 역사왜곡 무엇이 문제인가?
2.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2005) 2005년 일본교과서 검정 채택을 대비한 교육자료집
3. 교육인적자원부(2005). 2005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활동백서

<붙임 1>

후소샤 역사 교과서 왜곡 내용(2001, 2005년판을 중심으로)

1) 한반도를 흉기로 묘사

새역모교과서는 한반도를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로 묘사하고 있다. 일본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조금 떨어져서 바다에 떠 있는 섬나라이다. 이 일본을 향하여 대륙에서 하나의 팔처럼 조선반도가 돌출되어 있다. 당시 조선반도가 일본에 적대적인 대국의 지배 하에 들어간다면 일본을 공격하는 절호의 기지가 되고, 배후지를 갖지 못하는 섬나라 일본은 자국 방위가 곤란해진다고 생각하였다(216쪽).



2005년 개정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일본은 조선의 개국 후, 조선의 근대화를 원조했다. 조선에서도 시찰단이 와서 메이지 유신의 성과를 배우려고 했다. 조선이 타국에 침범을 당하지 않는 국가가 되는 것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했다(163쪽).

한반도가 그 자체로 일본의 흉기가 되고 있다는 인식은 일본이 한반도를 대상으로 일으키는 전쟁은 언제나 정당할 수 있다는 합리화를 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제 임진왜란과 대한제국의 강제 점령에 대해서 일본을 자위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2) 침략전쟁을 미화

새역모교과서는 278쪽에는 일본의 여학생들이 출격하는 가미가제특공대를 전승하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고 그 옆에는 23세 때 오키나와에서 전사한 특공대원의 유서를 실고 있다.



출격에 즈음해서
 그리운 거리, 그리운 사람
 지금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에 맡기려 한다.
 유구한 대의에 살려고 하며
 지금 나는 여기서 돌격을 개시한다.
 혼백 나라에 돌아가고
 몸은 사꾸라꽃처럼 진다하더라도
 유구히 호국의 귀신이 되어...(279쪽)

2005년 개정판에는 특공대원의 유서가 삭제되었으나 여학생들이 특공대원을 환송하는 사진과 설명은 그대로 남아있다.

3) 가해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 사실을 과장

일본의 교과서는 일본이 전쟁 중에 행했던 범죄에 대하여 제대로 기술하지 않으면서 독일 등 다른 국가들이 행한 전쟁범죄는 기술하고 있다. 다음은 ‘전쟁의 비극’이라는 칼럼에 실린 글이다.

[전쟁의 비극] 전쟁에서는 많은 병사가 생명을 잃는다. 그러나 전쟁의 희생자는 무장한 병사 뿐만 아니다. 오히려 좀 더 큰 피해를 받는 자는 일반인이다. 비무장 민간인과 정식으로 항복한 포로 중 많은 사람이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된다. 또한 국제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독가스 등의 잔혹한 무기를 사용한 나라도 있다. 이것이 전쟁의 비참한 현실이다. 여태까지의 역사에서 전쟁을 통해 비무장한 사람들에 대한 살해와 학대를 전혀하지 않은 나라는 없고,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군도 전쟁 중에 진공한 지역에서 포로가 된 적국의 병사와 민간인에 대해서 부당한 살해와 학대를 했다. 한편 많은 일본 병사와 민간인도 희생되었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소련군은 만주에 침입하여 일본의 일반 시민을 살해, 약탈, 폭행을 거듭하였으며, 포로를 포함한 60만의 일본인을 시베리아로 강제 연행하여 가혹한 노동을 시켰으며 약 1할을 죽게 만들었다. 또 미군의 무차별 폭격과 원폭투하로도 방대한 수의 희생자가 나왔다

[나치스의 유대인 학살]나치스·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에 대한 대량학살을 자행했다. 이것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며 전장에 있어서의 전쟁 희생자와 구별된다. 이것은 나치스·독일이 국가 의사에 의해 계획적으로 실행한 범죄이며 전투에 의한 살해가 아니다. 나치스·독일은 독일 지배하의 일반시민 가운데 약600만 명의 유대인, 약200만 명의 폴란드 지식인과 그보다 더 많은 구소련인, 약50만의 집시들을 수용소에서 살해하고 자국의 장애자나 병자들을 주사 등으로 안락사 시켰다. 한편 일본은 독일과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일본인 중에는 유대인을 도운 사람들도 있었다. 육군소장 히구치 기이치로는 시베리아를 통해 도망쳐 온 유대난민의 만주국 입국을 인정하고 구원했다. 또 리투아니아 주재영사였던 스키하라 지우네는 6,000인의 유대인에게 비자를 발급하여 일본을 경유하여 도망갈 길을 열어 주었다 (288-289쪽).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는 일본인이 가해한 범죄는 은폐하면서 당한 피해를 자세히 서술하여 일본이 전쟁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임을 은연 중 내세우고 있다.

4) 한국 역사의 시작을 부정

새역모 교과서는 한국 역사의 시원을 부정하고 있다. 새역모 교과서 역사연표에는 우리나라 역사가 중국의 식민지인 낙랑군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 고조선의 건국은 아예 빠져있고 고구려의 건국을 기원 후 200년 경으로 신라와 백제의 건국도 4세기 초로 표시되어 있다.

고조선이 정확하게 언제 건국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기록이 조금씩 다르다. 《제왕운기》에는 단군 왕건이 기원전 2357년에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삼국유사》에는 기원전 2,308년에 건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 기록은 《동국통감》 《해동이적》 《동국역대총목》 등에 나와 있다.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 것은 《동국통감》 등의 기록에 따른 것이다.

朝鮮		中国	西洋	世
樂浪郡·高句麗	三韓	殷	原始時代	古
		周		
		春秋 770		
		戰國 403		
		秦 221		
		前漢 202		
		新 8		
		後漢 25		
		三国 220		
		晋 265		
高句麗·百濟·新羅	高句麗·百濟·新羅	五胡 316	代	代
		十六国 439		
		南北朝 589		
		隋 618		

삼국의 건국 연대에 대해서는 그 기록이 너무나 뚜렷하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는 신라가 기원전 57년, 고구려가 기원전 37년, 백제가 기원전 18년에 건국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 고대 시대에 국가가 성립되기 시작한 때는 3세기 이후이다. 새역모 교과서가 고조선 역사를 은폐하고 신라, 고구려, 백제의 건국연도를 몇 백년 뒤로 미룬 것은 일본의 고대 국가가 성립될 당시 한국의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였고 한반도 남부는 야마토 조정의 지배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과장하기 위하여 한국의 역사를 왜곡 부정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5) 검증되지 않은 학설을 역사적 사실인양 교과서에 기술

새역모 교과서는 임나일본부설에 근거하여 고대사를 서술하고 있다. 2001년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자 일본 정부는 「일본 학계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의 존재를 지지하고 있지 않으나 한반도 남부의 가야 제국

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왜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하였다.

임나일본부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공황후가 49년(서기369년)에 임나를 치고 이어서 신라를 공격하였다. 62년(서기 382년)에 또 신라를 격파하였다. 이후 서기 463년에 일본은 임나지역에 일본부를 두어 한국 남부의 상당부분이 식민지형태의 지배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고대 사서인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다.

일본의 고대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을 완곡하게 부인하는 것은 《일본서기》가 당시에 있었던 사실을 정반대로 기술했기 때문이다. ‘고대 일본이 한국의 남부지역을 식민통치했다’는 소위 임나일본부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론을 펴는 외국인 학자들이 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개리 레저드(Gari Ledyard) 교수는 가야가 바다 건너 일본을 정벌하고 369년부터 505년까지 100년 이상 일본의 왕위를 계승하였는데 이 가야를 지배한 것이 부여족이었다고 주장한다. 새역모 교과서 2005년 검정신청본에는 2001년의 서술을 달리하면서도 기본적인 입장은 바꾸지 않고 있다.

고대 조선반도의 나라들과 일본은 중국의 동향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다. 220년에 한나라가 멸망하고부터 6세기말까지 중국에서는 다수의 소국으로 나뉘거나 남북으로 갈려 싸우는 내란의 시대가 계속되어 주변 제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이 틈을 타서 조선반도 북부의 고구려가 급속하게 강대해졌다. 고구려는 4세기 후반에는 반도 남부의 백제까지 공격했다. 백제는 야마토 조정에 도움을 요청했다. 일본 열도의 사람들은 본래 귀중한 철 자원을 찾아 반도 남부와 깊은 교류를 갖고 있었으므로, 야마토 조정은 바다를 건너 조선에 출병했다. 이 때 야마토 조정은 반도 남부의 任那(가라)라는 지역에 거점을 구축했다고 생각한다.

야마토 조정의 군대는 백제를 도와 고구려와 격렬하게 싸웠다. 고구려의 광개토왕(호태왕) 비문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고구려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지만, 백제와 임나를 거점으로 한 야마토 조정의 군대의 저항에 봉착하여 반도 남부의 정복은 달성할 수 없었다(32쪽).

6) 한국사를 폄하하고 있는 일본 역사 교과서

새역모 교과서는 일본 역사의 우월함을 내세우기 위하여 한국의 역사를 폄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씨조선’이다. 이 표현은 일제 강점기에 한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기 위하여 조선왕조의 호칭을 비하한 표현이다. 이에 따라 ‘이씨조선’이라는 표현은 일본인 학자들 뿐 아니라 한국인 학자들도 사용하였다. 해방 이후 젊은 학자들이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한 결과 새로운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그래서 ‘이씨왕조’ 대신 ‘조선왕조’라는

정식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씨왕조’라는 표현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대신하여 일제 강점기에 사용된 부적절한 용어이므로 정식 국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일본 학계에서는 최근 ‘조선왕조’를 사용하는 경향도 있으나 이성계(태조)가 세운 왕조를 ‘이씨조선’ 등으로 부르기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설 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과거의 역사를 은폐하기 위한 사례의 하나가 왜구에 대한 표현이다. 왜구(倭寇)란 고려 중기 이후부터 조선 초기까지 한반도와 중국 연안에서 약탈행위를 일삼던 ‘일본 해적’을 말한다. 그러나 새역모 교과서에는 왜구에 조선인과 중국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술하여 왜구의 만행을 희석시켰다. 2005년 검정신청본에는 2001년 내용보다 더 악화되어 있다.

14세기 후반 중국에서는 한민족의 반란으로 원이 북방에서 쫓겨나고 명이 건국되었다. 명은 일본에게 왜국의 단속을 요구해 왔다. 왜구란 이 무렵 조선반도와 중국 연안에 출몰하고 있던 해적집단을 말한다. 그들 중에는 일본인외에 조선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요시미츠는 곧바로 이에 부응하여 왜구를 금지시키고 명과 무역(일명무역)을 시작했다. 이 무역은 왜구와 구별하기 위해 증명서(勘合)를 사용했기 때문에 감합무역이라고 불린다. 일본은 도검·동·유황·마키에 등을 수출하고, 동전·견직물·서화 등을 명으로부터 수입해서 무로마치막부의 중요한 재원으로 삼았다. 막부의 힘이 약해지자 슈고다이묘인 오우치씨가 무역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16세기 중반 무렵에 감합무역이 정지되자 다시 왜구가 활개를 쳤는데, 그 구성원들은 거의가 중국인이었다. 왜구가 조선반도로부터 중국 연안을 휩쓸고 다녔기 때문에 고려는 쇠약해지고 명도 멸망도 앞당기게 되었다(79쪽).

<붙임 2>

중국의 한국 상고사 왜곡 내용

1) 고조선사 왜곡 내용

① 고조선은 은나라 왕족인 기자가 조선을 세웠고 주의 제후국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자조선이 위만조선으로 교체되었고, 위만조선 멸망후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중국사로 규정하고 있다.

② 진 시황제의 장성이 북한의 청천강, 더 나아가 대동강 하구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중국 역사교과서와 지도집에는 대동강까지 장성 표

시를 하였다.

2) 부여사 왜곡

① 중국은 부여족이 산둥에서 발원하여 일찍부터 중국에 예속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지방문화 중 일부 또는 선비족의 문화라고 주장한다.

3) 고구려사 왜곡

① 중국은 고구려의 민족 기원을 예맥, 부여, 고이, 상인, 염제족에서 찾고 있으며, 이들은 한족과 결합하여 고구려를 구성했다고 주장한다. 즉 예맥을 포함한 고구려 구성원 모두가 중국의 고대민족이므로 고구려는 중국 고대의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이다.

② 고구려는 한 사군의 하나인 현도군 경내에서 건국되었고 여러번의 천도에도 불구하고 한사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이다.

③ 고대사회의 외교관계의 일환이었던 조공과 책봉관계를 들어 고구려를 독립국가가 아닌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한다.

④ 수·당과 고구려 전쟁을 중앙정부와 지방정권 간의 국내전쟁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의 고구려 침공은 침략이 아닌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다.

⑤ 고구려 멸망 후 유민 중 7분의 1만이 신라로 내려가 한국인의 선조가 되었고 그보다 많은 사람이 중국으로 들어가 한족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고구려사는 중국사라고 주장한다.

⑥ 고려는 이름만 고구려와 비슷할 뿐 계승관계가 없는 서로 다른 나라 역사라고 주장한다. 즉 고려는 오늘날 한국인의 선조인 신라 후손이 세운 나라에 불과하며 ‘宋史’에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기록한 것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오류라고 주장한다.

4) 발해사 왜곡

① 중국은 발해의 국호가 ‘말갈’이었다가 ‘발해’로 개칭했다고 강조하면서 고구려와의 계승관계를 끊으려고 한다.

② 발해왕이 중국으로부터 발해군왕으로 책봉되었고, 홀한주도독이 된 것을 근거로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이었다고 주장한다

<붙임 3>

한·중·일 시민들의 역사인식 현황('10.8)

1. 조사 개요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조 사 대 상	서울, 500명(남·녀)	베이징, 511명(남·녀)	도쿄, 500명(남·녀)
조 사 기 간	2009년 8월23일~8월 31일, (주)동서리서치		
조 사 방 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컴퓨터활용 전화면접조사 (CATI :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표 본 오 차	한국 일본 95% 신뢰수준에서 ±4.4%point 중국 95% 신뢰수준에서 ±4.3%point		

2. 한·중·일 역사쟁점 선결과제 및 인지도

○ “한국인에게 독도문제가 시급한 선결과제(35.2%)”

- 한국인 : ‘독도문제’ 해결 필요 의견이 '09년(23.5%)보다 11.6%나 증가

☞ 김병렬 국방대 교수, 독도 관련 이슈에 한국인들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 우려, “국제해양재판소로 의제를 올리기 위해 한국정부의 강경대응을 원하는 일본측 의도에 대한 경계 필요” 의견 제시

- 중국인 : ‘침략’ 인정 등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45.2%)

- 일본인 : ‘전쟁책임과 보상, 사후처리 문제’(19.2%)라고 응답

○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군‘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세 나라 모두에서 인지도가 높게 나옴

구 분		인지도				('10-'09년) 격차
		'07년	'08년	'09년	'10년	
동북공정	한국	70.1	68.2	62.5	74.8	12.3
	중국	35.2	42.2	39.6	25.8	-
	일본	10.8	15.2	14.1	16.0	1.9
야스쿠니 신사참배	한국	88.7	90.4	81.3	94.2	12.9
	중국	80.2	80.0	76.0	67.1	-8.9
	일본	96.0	91.6	83.5	98.2	14.7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국	89.7	92.2	92.7	98.6	5.9

	중국	68.4	53.6	75.8	69.3	-6.5
	일본	81.4	62.6	67.9	88.8	20.9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한국	91.5	94.6	86.4	96.8	10.4
	중국	79.6	77.0	79.3	70.3	-9.0
	일본	81.2	75.4	62.5	87.4	24.9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	한국	85.2	90.8	90.1	96.0	5.9
	중국	27.6	28.6	33.5	31.7	-1.8
	일본	32.6	36.0	33.9	58.2	24.3
독도 문제	한국	92.7	96.0	93.9	99.6	5.7
	중국	32.2	40.0	43.1	36.6	-6.5
	일본	75.2	67.8	70.1	93.2	23.1
쿠릴열도 영유권 문제	한국	-	42.6	42.7	60.8	18.1
	중국	-	32.2	37.5	29.9	-7.6
	일본	-	52.2	61.9	92.4	30.5
센카쿠/ 다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문제	한국	-	28.6	33.4	48.2	14.8
	중국	-	68.2	74.5	73.4	-1.1
	일본	-	62.6	58.9	75.6	16.7

3. 한·중·일 역사쟁점에 대한 인식

○ 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공식 사과의견은 지속 상승

- '07년 38.4% → '08년 40.8% → '09년 48.9% → 2010년 49.4%

☞ 일본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공감대가 형성되어가는 양상

○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 한국인(76.8%), 중국인(84.3%)은 대다수가 반대

- 일본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64.4%, ‘반대한다’ 28.6%

· (수용 이유) ‘희생 군인에 대한 추모’(30.1%), ‘국가의 전쟁책임’(24.5%), ‘개인차원의 참배’(17.7%)라는 응답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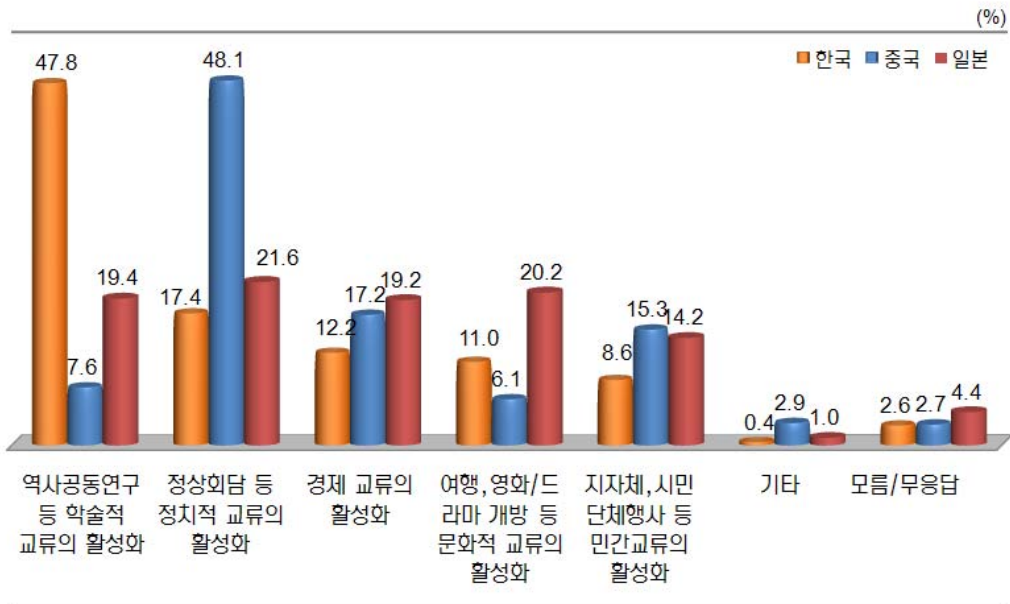
○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

- 한국과 일본에서 인지도 동시 상승

- 한국은 '09년: 90.1% → '10년: 96.0%로 소폭 상승
- 일본은 '09년: 33.9% → '10년: 58.2%로 대폭 상승

4. 한·중·일 역사 인식개선을 위한 과제

- 한국인은 역사 공동 연구 등 학술적 교류를 우선 과제로 꼽았고,
 - 중국인은 정상회담 등 정치교류를 선호했으며,
 - 일본인은 특정분야에 치우침 없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



한일교류사의 시각

-조선통신사, 왜 일본에 갔나-

손승철(강원대학교)

1. 오늘, 조선통신사가 우리에게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 시작은 일본 측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선언한 망언에서 비롯되었다. 게다가 2006년에는 동해의 해저 지명과 해양 조사 문제로 양국이 충돌 위기까지 직면했고,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 두 나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 이 뿌리 깊은 갈등의 진원지는 어디에 있을까. 또 그 갈등의 해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한일 양국이 서로 우호교린을 해야 하는 것은 역사적 명제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두 나라의 갈등이 서로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거 2,000년간의 역사적 경험은 말해 준다.

그런 면에서 조선시대 전·후기 500여년에 걸쳐 양국 사이를 오간 조선통신사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조선통신사를 통해 양국은 외교 문제를 해결했고, 물자와 문화를 교류했으며, 그 결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중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이라는 불행한 역사도 있었지만, 통신사를 통해 다시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통신사’는 조선과 일본 두 나라가 함께 연출한 성숙한 국제 의식의 표현이었다. 조선통신사가 원활하게 왕래할 때는 양국 사이에 우호·공존의 시대가 전개되었고, 조선통신사의 단절은 양국 사이의 불행한 역사의 시작을 뜻했다.

참고로 조선통신사의 명칭에 관한 문제인데, 『朝鮮王朝實錄』에는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라고 해서 「日本通信使」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朝鮮通信使」라고 하는 것은 일본쪽에서 볼 때, 조선에서 오는 통신사라는 의미로 부르던 것을 그대로 일반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朝鮮通信使」가 된 것이다.

2. 동아시아 해역의 약탈자, 왜구

한반도에 대한 왜구의 약탈은 1350년부터 시작되며, 이후 고려 말까지 해안 지방은 물론 내륙 깊숙이 약탈이 자행된다. 몽고가 약해지면서 중국대륙에서는 신홍제국 명이 건국되고, 한반도는 몽골로부터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혼란, 일본열도는 남북조시대로 모두 정치적으로 혼란기를 격게되며, 이때부터 양지역간에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倭寇의 활동이 극심해진다.

고려말기 왜구에 의한 피해는 엄청났다. 『高麗史』에는 1351년 왜구의 기록이 등장한 이래 1392년까지 총 495회의 침입기사가 나오며, 그 지역도 한반도 전역에 걸쳐있다. 그래서 고려에서는 한때 도읍인 개경까지 위협을 받아 개경천도론이 주장되기도 했고, 낙동강을 따라 대구·상주까지 왜구가 출현하자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더깊은 예천 보문사로 옮기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왜구들은 조창을 습격하여 경제적으로 노략질을 하는 한편 사람을 납치하여 노예로 팔거나 또는 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예를 들면 현재 알려져 있는 고려불화는 총 120여점인데, 한국에는 12점밖에 없고, 일본에 95점이 남아있다. 또 쓰시마와 이키에는 80여구의 신라·고려 불상과 동종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왜구의 침략에 대해 고려에서는 船軍을 확충하고, 崔茂宣으로 하여금 화약과 화포를 제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朴威로 하여금 대마도를 정벌하고, 鄭夢周 등을 5차례나 사절로 보내 왜구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시카가 장군에게는 왜구금압 능력이 없던 시기여서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 이즈음 한반도에는 이성계에 의해 朝鮮이 건국되고, 일본에는 아시카가 요시미즈(足利義滿)가 南北朝를 통일하여 무로마치(室町)막부를 열게 된다. 당시 朝鮮王朝와 무로마치막부에서는 倭寇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朝鮮通信使가 탄생되게 된다.

도쿄대학교에 소장된 『왜구도권』에는 왜구 약탈의 모습이 상세하다. 이들 왜구가 한반도에 출몰하여 무엇을 어떻게 약탈했는가. 『고려사』에는 왜구가 극심했던 1382년 기록에는 “서너살짜리의 여자아이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쌀을 넣고 고사를 지낸뒤 그 쌀로 밥을 해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에서는 왜구들의 약탈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우선 외교적인 방법을 써서 7차례나 사신을 파견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남북조시대의 혼란기여서 그다지 효과를 볼 수 없었다. 결국 고려는 군사적 방법을 택했고, 그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 등의 무인세력이 성장하여 조선 건국의 주역이 된다. 그런데, 현재 한일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후소샤관 『역사 교과서』에서는 “왜구

란 이 당시 조선반도 및 중국대륙 연안에 출몰했던 해적집단을 뜻한다. 그들 중에는 일본인외에 조선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고 기술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3. 공존의 시대 : 조선통신사의 시작

1392년 조선이 건국한 후에도 왜구의 약탈은 계속되었다. 일본도 같은 시기에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되면서 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조선과 일본은 왜구 문제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틀 안에서 해결하고자 했고, 양국이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책봉 체제에 편입된다. 이어 조선통신사와 일본국왕사가 왕래하면서 왜구 문제를 해결하고 교린 관계를 성립시키면서 공존의 시대를 열어간다.

이 과정에서 조선통신사는 믿음으로 통하는 통신(通信)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교린 관계를 이중 구조로 만들어 제도적 정비를 해 나간다. 하나는 조선국왕과 일본국왕(장군) 사이의 대등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장군 이외의 모든 세력을 각종 통교 규정에 의해 조정해 가는 기미 관계였다. 각종 통교 규정이 성립되면서, 왜인들이 약탈자에서 통교자로 바뀌고, 조선의 삼포에 와서 무역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와 같이 조선과 일본의 교린 관계의 밑바탕에는 믿음[信]이 전제되어야 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交隣의 용례를 보면, 信·道·義·禮라는 유교적 실천규범을 전제로 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交隣之信’ ‘交隣之道’ ‘交隣之義’ ‘交隣之禮’의 개념을 체계화했다. 즉 교린이란 信義·道理·義理·禮義라는 유교적 가치기준을 전제로 하는 외교이며, 通信使는 이러한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信義를 하는 사절’이다.

이와같이 조선과 일본의 중앙정부가 서로 사신을 왕래시키면서 왜구금지를 위한 교섭을 했지만, 왜구의 활동은 여전히 외교교섭이 한계에 부딪혔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막부장군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 변방에 있는 왜구를 통제할 수 없었고, 조선연안 및 조선사절단이 통과해야 하는 세토나이가이(瀬戸内海)에서는 여전히 해적의 활동이 활발하여 통신사의 왕래도 장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다시 왜구의 실제적인 우두머리들과 교섭을 벌였고, 신숙주의 『海東諸國紀』에 의하면, 당시 조선에 사신을 보낸 일본 중소영주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총126명에 달하고 있다.

조선은 이들과 다각적인 접촉을 벌여, 이들을 평화적인 통교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갔다. 그리하여 對馬島主를 중간자로 하여

倭寇를 평화로운 通交者로 전환시키는 貿易體制를 새로이 구축했고, 그결과 三浦開港(1426)과 癸亥約條(1443)에 의해 일본으로부터의 통교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들면 조선의 통제에 협조적인 왜인들에게 조선의 관직을 주는 受職人制度, 수직왜인에게는 년 1회 조선에 도항하여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이들이 받았던 임명장인 告身이 지금도 13장이 남아있다.

삼포개항의 시작은 1407년 무질서하게 내왕하는 왜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1407년부터 富(釜)山浦와 乃而浦(薺浦)를 항구로 지정하여 그 출입과 교역을 허가하면서부터이다.

4. 경상도의 재팬타운, 삼포

1426년 삼포제도가 정비되면서, 조선에 오는 모든 왜인들은 한반도 동남해안의 세 포구(염포, 부산포, 제포)에 입항했다. 각종 명목으로 조선에 왔던 일본인들은 삼포에서 무역을 하면서, 우두머리들은 서울로 상경하여 조선국왕을 알현했고, 일부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삼포에 살게 되었다. 1471년 신숙주가 편찬한 『해동제국기』에는 삼포의 모습이 자세히 그려져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는 삼포 왜인들의 생활상을 기록했다. 가히 조선시대의 ‘저팬 타운’이라고 부를 만하다.

1419년 대마도 정벌에 의해 일시 폐쇄하였으나, 그들의 간청으로 1423년에 다시 두곳을 허락하고, 이어 鹽浦를 추가함으로써 삼포제도를 확립했다. 포소에는 왜관을 설치하여 각기 제포(진해)에 30호, 부산포(부산)에 20호, 염포(울산)에 10호의 항거왜인을 거주하게 하여, 도항왜인의 접대와 교역을 허가함으로써 통교질서를 세웠다. 이들 삼포 가운데 조선후기에는 부산포만이 남아 초량왜관으로 이어졌다.

그러면 당시 삼포를 통해 어떠한 물자의 교류가 이루어졌을까.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져간 물품은 쌀이나 콩등 식량류와 섬유품이었다. 섬유품은 처음에는 모시와 마포, 명주였으나 15세기 후반부터는 면포로 바뀐다. 일본에서 면포를 선호한 것은 당시 일본에서는 목화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선면포가 감축이 좋은 고급의류로서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온 주 상품은 구리인데, 예를들면 1428년에는 2만 8천근의 구리를 가져왔고, 1489년에는 2만근의 구리를 가져오고, 10만필의 면포를 가져갔다. 그 무렵 조선에서는 놋쇠로 만든 식기를 사용했고, 동전과 금속활자등 구리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남방산 蘇木과 물소뿔이, 후추등이 수입되

었다.

『해동제국기』에는 왜인의 입항과 무역, 상경로와 방법, 절차와 접대, 서울에 묶었던 여관인 동평관, 서울고지도에 남아 있는 왜관동의 유래, 체류 기간 동안의 생활, 국왕의 알현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온천을 즐기는 등 삼포 체류 왜인의 일상생활과 살았던 집, 이들과 거래한 무역품 등을 기록했다.

	세종초		1466년		1475년		1476년		1494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제 포	30		300	1,200여	308	1,722	308	1,731	347	2,500
부산포	20		110	300여	67	323	88	350	127	453
염 포	10		36	120여	36	131	34	128	51	152
계	60		446	1,650여	441	2,176	430	2,209	525	3,105

그러나 항거왜인이 늘고 무질서하게 도항하자, 왜인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도항절차와 증명에 관한 여러절차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예가 도항증명서인 文引을 대마도주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는 文引制度를 실시했다. 즉 조선에서는 대마도주에게 문인발행권을 주어서 대마도주로 하여금 수수료를 받도록 재정적인 이득을 주고, 그 댓가로 조선에 통교를 원하는 일본인들을 통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통교인들을 4등급(日本國王使, 巨諸使, 九州節度使對馬島主, 小倭使對馬島受職人)으로 나누고, 그 우두머리들을 상경시켜 조선국왕에게 알현시키는 上京制度를 의무화했다. 이것은 중국의 기미정책보다도 훨씬 적극적인 것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정책을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변의 여진·왜인·유구·안남등에 대해서는 조선중심의 국제질서를 세우려는 것으로 조선외교의 주체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조선전기 사절 일람표

회수	서기	사행명	정사	과견대상	사행목적	출처
1	1392		覺鎚(僧)	征夷大將軍	왜구금지요청	善隣國寶記, 상
2	1399	통신관	朴惇之	日本大將軍	왜구금지요청	실록, 정종원/5, 을유
3	1399	보빙사	崔云嗣	日本大將軍	보빙	실록, 정종원/8, 계해
4	1402		朝官	日本大將軍	화호, 금적, 피로인쇄환	실록, 태종2/7임진
5	1404	보빙사	呂義孫	일본국왕	보빙	실록, 태종4/7기사
6	1406	보빙사	尹銘	일본국왕	보빙	실록, 태종5/12무진
7	1410	회례사	梁需	일본국왕	보빙, 부의	실록, 태종10/2신축
8	1413	통신관	朴賁	일본국왕	사행도중 발병중지	실록, 태종14/2을사
9	1420	회례사	宋希環	일본국왕	국왕사회례, 대장경사급	노송당일본행록
10	1423	회례사	朴熙中	일본국왕	국왕사회례, 대장경하사	실록, 세종4/12계묘
11	1424	회례사	朴安臣	일본국왕	국왕사회례, 금자경사급	실록, 세종5/12신해
12	1428	통신사	朴瑞生	일본국왕	국왕사위, 치제	실록, 세종10/12갑신
13	1432	회례사	李藝	일본국왕	국왕사회례, 대장경하사	실록, 세종14/7임오
14	1439	통신사	高得宗	일본국왕	교빙, 수호	실록, 세종21/7정사
15	1443	통신사	卞孝文	일본국왕	일본국왕사위, 치제	실록, 세종25/2정미
16	1460	통신사	宋處儉	일본국왕	국왕사보빙, 사행중조난	실록, 세조5/8임신
17	1475	통신사	裴孟厚	일본국왕	수호, 일본내란중지	실록, 성종6/8정유
18	1479	통신사	李亨元	日本國王	수호, 대마도중지	실록, 성종10/9을축
19	1590	통신사	黃允吉	豊臣秀吉	왜정탐문	김성일, 海槎錄
20	1598	통신사	황신	豊臣秀吉	강화교섭	실록, 선조29/8임자

그러나 조선전기의 우호교린의 교류관계도 1592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으로 단절되고, 이후 7년간의 전쟁과 그로 인한 전쟁의 상처는 일본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각인시켰다.

5. 임진왜란, 불구대천의 원수

1592년, 조선통신사와 삼포에 의한 200년간의 우호교린이 임진왜란에 의해 깨진다. 임진왜란의 원인을 토요토미 히데요시 개인에게 돌리지만, 사실은 동아시아 국제 질서인 책봉 체제가 무너진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무로마치 막부의 외교 노선을 계승하지 않고 배신한 것이다. 히데요시는 조선통신사를 조공사로 취급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 동래성을 함락한 일본군은 과거의 상경로를 통해 20일 만인 5월 2일, 한양에 입성했고, 6월 16일에는 평양을 점령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프로이스의 일기』에는 그의 침략 의도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일본군의 승리도 개전 초기 2달간이었고, 이후 7년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의병과 민중의 저항, 이순신 장군의 활약 때문이었다. 일본군은 한반도 남부에 29개나 되는 왜성을 쌓고 장기전에 들어갔지만, 히데요시는 죽고, 조선의 승리로 끝났다. 그의 아들 히데요리는 전쟁 후, 히데요시가 쌓은 오사카 성 정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7년간의 전쟁은 조선인에게 지울 수 없는 전쟁의 상흔을 남겼다. 전쟁 중에 당한 여인들의 수난을 그린 『삼강행실도』와 양국의 각종 기록들은 지금도 그 참혹함에 치를 떨게 한다. 또 조선인의 코로 만든 코무덤 등, 이후 조선 사람은 일본인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7년간의 전쟁을 통해, 조선 문화가 일본에 전달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도공들이 빚은 도자기는 일본 국보가 되었고, 고려불화나 조선종, 많은 서적들이 지금도 일본 문화재로 전해진다.

특히 일본군은 조선여인이나 어린아이들을 납치하여 굴욕적인 생활을 강요하는 가하면, 노예로 팔아 넘겼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노예전쟁으로 부르는 학자들도 있다. 7년간의 전쟁에 얼마나 많은 조선인이 납치 되었는지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 학자에 따라서는 납치인원을 적게는 5만에서 많게는 20만 명까지 산출해 내고 있다. 피랍조선인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을 당시 일본에 와있던 신부 루이스 세쿠에이라(Luis Cerqueira)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가사키에 인접한 곳의 많은 일본인들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노예를 사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상인들은 그들에게 조선사람을 팔기 위하여 일본의 여러지역을 돌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잡혀 잇는 지역에서 그들을 구매하는 한편, 조선인을 포획하기 위해 직접 조선으로 갔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고, 중국배에서 이들을 포르투갈 상인에게 팔았다.”(1598년 9월 4일자 기록)

또한 종군승으로 왜란에 참가한 케이넨(慶念)은, “일본에서 수많은 상인이 왔는데, 남녀노소를 새끼줄로 묶어 뒤에서 재촉하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으로 매질했다.”(『조선일일기』) 다고 기록했다. 마치 로마시대의 영화속에 나오는 노예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가리지 않고 잡아온 사람들 중에는 건장한 남자나 노약자보다는 아무래도 젊은 여인이 많았다. 일본천주교에서 조선의 성녀로 칭송받고 잇는 ‘오다 줄리아’도 조선소녀였다. 또 어린아이들도 많았는데, 얼마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베니스의 개성상인>도 7세때 일본군에게 끌려 간 조선소년이 노예로 팔려 이탈리아에 가서 상인으로 대성하는 이야기였다.

이상과 같은 임진·정유왜란의 7년간의 잔혹행위는 조선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일본인상을 남겼다. 말 그대로 하늘아래 같이 살 수가 없는 원수, 소위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로 각인되었다.

6. 통신사의 부활, 평화의 시대

임진왜란이 끝난 후, 1604년 조선에서는 도쿠가와 막부의 강화에 대한 진의를 살피기 위해, 승려 유정(사명대사)를 探賊使란 명칭으로 일본에 파견했다. 사명대사 일행은 교토에 가서 도쿠가와 장군의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피로인 3천여명을 데리고 돌아온다. 사명대사 일행의 귀국 후, 조선에서는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즉 일본국왕 명의의 강화요청서, 임란당시 왕릉도굴범의 소환, 그리고 조선피로인의 송환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국왕명의로 국서를 위조하고, 왕릉도굴범은 대마도의 잡범으로 대치했으며, 쇄환사편에 피로인들을 7천여명이상 돌려 보냈다. 물론 조선에서는 국서가 위조된 것이고, 도굴범도 잡범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조선의 요구가 형식적으로는 수용되었기 때문에 1607년 강화사를 파견하여 국교를 재개했다. 하지만 사절단의 명칭은 「回答兼刷還使」였다. 이로부터 조선후기에는 총 12회의 조선사절이 파견되는데, 「通信使」의 명칭이 다시 쓰여지는 것은 세 번째인 1636년부터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1607년의 회답사를 정형화된 조선통신사의 시작으로 보고, 2007년을 <조선통신사 400주년>으로 기념하고 있다.

통신사의 파견목적은 막부장군의 습직이나 양국간의 긴급한 외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통신사의 편성과 인원은 각 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300명에서 500명이 넘는 대사절단이 1년에서 1년반이나 걸리는 대장정이었다. 이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육로로, 그리고 부산에서 대마도를 거쳐, 오사까 까지는 해로로, 오사까에서는 다시 육로로 에도(江戸 : 東京)까지 왕래하였다.

통신사 행렬의 장려함은 1636년 통신사를 직접 목격한 네덜란드 상관장 니콜라스의 기록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먼저 무용과 피리·북의 주악이 행해지고, 그 후에 벼를 타작할 때 쓰는 것과 같은 큰 막대기를 가진 몇 사람이 두 명씩 지나가고, 그 양측에서 각각 금과 생사를 섞어 만든 망을 든 세 사람이 경호하고 있었다. 그 후에 약 30명의 젊은이가 말을 타고 뒤 따랐다. 그 뒤에는 5-60명이 붉은 우단을 친 가마를 메고 따라갔다. 그 안의 탁자 위에는 칠을 한 상자가 있었고, 거기에는 조선문자로 쓰여진 일본황제에게 보내는 서한이 들어 있었다. …… 재차 여러종

류의 악기를 연주하는 악대가 뒤따라 왔다. …… 가마가 몇 대 지나가고, 검은 비단 옷을 입은 사절의 부관이 가마를 타고 지나갔다. 잠시 후 400명의 기사 …… 약 15분이 지나자 200명의 호위병이 따르고, 일본 귀족일행이 가고, …… 마지막으로 조선인의 화물과 선물을 운반하는 약 천 마리의 말 …… 이들의 행렬이 전부 통과하는 데는 약 5시간이 걸렸다.”(『히라도네델란드상관일기(平戸オランダ商館日記)』)

당시 규슈의 히라도(平戸)에는 네덜란드 상관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상관장이던 니콜라스가 에도에 가던 중 만난 조선통신사의 행렬을 묘사한 것이다. 조선통신사를 안내, 호위하거나 짐을 나르기 위해 평균 3,000여명이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이들을 합치면 통신사행렬은 총 3-4천여 명에 이르렀다. 한사람의 거리를 1미터만 잡더라도 4키로는 족히 될 것이고, 그 행렬이 통과하는데 5시간이나 걸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사가 조선후기 한일관계에서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정치외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통신사가 통과하는 객사에서 한시문과 학술교류는 한일간의 문화상의 교류를 성대하게 했다. 1719년 통신사 수행원 신유한은,

“초사흘 임인, 식사 후, 유학자 10여명이 대청에 모였다. 나는 세 서기와 함께 나가 서로 인사하고 앉았다. 좌중의 사람들 중에는 각각 장단률(長短律) 및 절구(絶句)를 베껴와서 나에게 주며 창화(唱和)를 요청했다. 즉시 모든 요청에 응하여 회답했다. 그가 부르면 나는 곧 화답하고, 혹 바꾸어서 장편이 되기도 했으며, 책상위에는 시문 화답한 종이가 수북히 쌓였다. 김세만이 옆에 앉아서 쉴 겨를이 없이 부지런히 먹을 갈았다.

하루중 만나는 사람은 대체로 3,4편을 얻었지만 혼자서 상대했고, 왼쪽에 응하고, 오른쪽에 답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독창성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거나 윤색할 여유도 없었다. 다음날에도 십수명과 만나서 전날과 같이 창수했으며 한밤중이 되어서야 그쳤다.”(신유한 『해유록』)

그렇다면 일반서민들은 어떠했을까. 통신사의 기행문과 마찬가지로 현재 일본에는 통신사에 관한 많은 회화자료가 남겨져 있다. 예를 들면 풍속도화가로서 유명한 하가와 도에이(羽川藤永)의 <조선인래조도>가 코베의 시립박물관에 있다.

이 그림은 에도(동경)의 니혼바시(日本橋)를 지나고 있는 통신사일행을 그리고 있다. 화면 중앙에서부터 좌측 뒤쪽에 후지산(富士山)과 에도성(江戸城)

의 성곽이 보이고, 두부모를 잘라서 짜맞춘 듯이 이층집 지붕이 나란히 늘어서 있고, 그 사이를 통신사일행이 지나간다. 2층은 문을 닫아서 격자(格子)만이 눈에 띄지만, 1층에는 상가의 휘장 밑으로 에도의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앉아있다. 양손을 들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 술이나 차를 마시는 사람, 이런애에게 젓을 먹이는 아낙네의 모습도 보이지만, 사람들은 통신사 행렬에 넋을 잃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길 중앙에 무사 한사람과 개는 구경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 경비를 맡은 무사인지 봉을 들고 서 있는 사람과 개, 방수용 물통이 눈에 띄고, 통신사를 맞이하는 에도시민들의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2-30년만에 한번 오는 통신사의 장관을 놓치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모습이다. 마치 지난번 88올림픽 때나 월드컵 경기 때 서울시민의 열광하는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겨울연가'를 보는 현대 일본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신사는 또 하나의 한류, 즉 <조선시대의 한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조선통신사를 '조선시대의 韓流'로 표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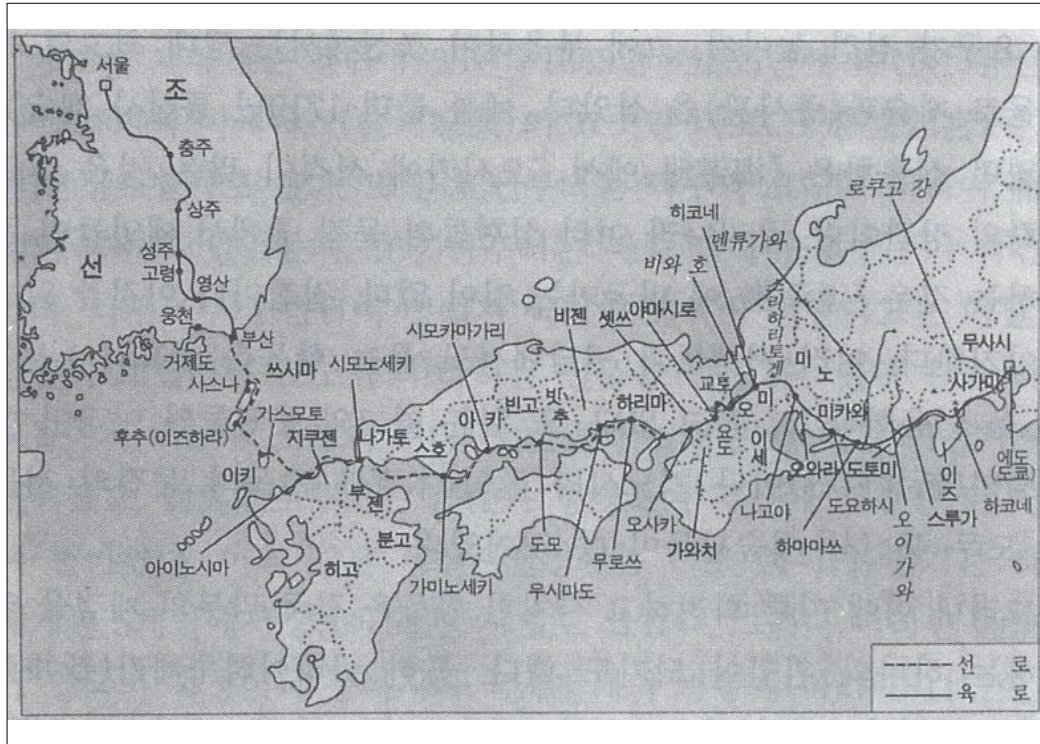
물론 통신사가 한일관계의 전부는 아니었다. 조선에서는 부산에 왜관을 설치하여 한일간에 무역을 통하여 필요한 물자를 교류했으며, 또 대마도주에게는 별도로 100명에서 150명 규모의 「譯官使」를 51회나 파견하여 한일관계에서 대마도의 입지를 세워주고, 한일간의 현안을 풀어갔다.

* 조선후기 통신사 일람표

순번	서기	조선	일본	임 무	총인원(오사카잔류인원)	일본기행문	비 고
1	1607	선조40	慶長12	강화, 국정탐색, 피로인쇄환	467	경섭 『해사록』	회답겸쇄환사
2	1617	광해군9	元和3	피로인쇄환, 오사카평정축하	428(78)	오윤겸 『동사상일록』 박재 『동사일기』 이경직 『부상록』	회답겸쇄환사
3	1624	인조2	寬永원	피로인쇄환, 장군습직축하	460	강홍중 『동사록』	회답겸쇄환사
4	1636	인조14	寬永13	태평축하	478	임광 『병자일본일기』 김세렴 『해사록』 황호 『동사록』	通信使 大君호칭사용
5	1643	인조21	寬永20	장군탄생축하	477	조경 『동사록』 신유 『해사록』 작자미상 『계미동사록』	日光山參詣
6	1655	효종6	明曆원	장군습직축하	485(100)	조경 『부상일기』 남용익 『부상록』	
7	1682	숙종8	天和2	장군습직축하	473	김지남 『동사일록』 홍우재 『동사록』	
8	1711	숙종37	正德원	장군습직축하	500(129)	조태억 『동사록』 김현문 『동사록』 임수간 『동사록』	아라이 하쿠세키개정 (大君-將軍)
9	1719	숙종45	享保4	장군습직축하	475(109)	홍치중 『해사일록』 신유한 『해유록』 정후교 『부상기행』	개정환원 (國王-大君)
10	1748	영조24	延享5	장군습직축하	475(83)	조명채 『봉사일본시문견록』 홍경해 『수사일록』 작자미상 『일본일기』	
11	1764	영조40	宝曆14	장군습직축하	477(106)	조엄 『해사일기』 오대령 『계미사행일기』 성대중 『일본록』	崔天滌被殺
12	1811	순조11	文化8	장군습직축하	328	유상필 『동사록』 김청산 『도유록』	對馬易地通信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은 매우 적극적이며, 주체적으로 한일관계를 전개했다고 볼 수 있다. 혹자는 조선전기와는 달리, 조선후기에는 일본에서는 장군의 사신이 오지 않고, 조선에서만 사신이 파견되었다고 해서, 조선외교의 열세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임진왜란때, 과거 일본국왕사의 상경로가 일본군의 진격로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일본인의 상경을 금지시키고, 부산 왜관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통신사파견의 비용은 부산에서부터는 모든 왕복 비용을 일본에서 부담하였는데, 그 비용이 막부의 1년 예산이었다고 한다.

* 통신사 여정표



한편 일본과 조선무역에는 기본적으로 대마도주가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封進과 求請에 대한 回賜, 조선왕조와 대마도간의 公貿易, 대마도관리·상인과 조선상인간의 私貿易 등이 있었는데,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주로 은·동 등의 광산물과 남방산 蘇木, 물소뿔과 백반, 후추 등이었다. 이에 대해 조선에서 수출한 품목은 쌀과 콩, 목면이 많았고, 인삼과 중국산 생사와 비단도 인기 있는 상품이었다. 이러한 물자의 유통경로를 ‘실버로드와 실크로드’에 비유하기도 한다.

7. 통신에서 배신으로, 침략의 전주곡

그러나 이러한 通信使行도 1811년에 끝이 나며, 그것도 對馬島에서 약식으로 국서를 교환하는 易地通信이었다. 물론 그 이후 몇차례에 걸쳐 장군직을 습직하였고, 그때마다 통신사파견이 요청되었으나, 일본 내의 사정에 의해 4차례나 연기를 하다가 결국 1868년 명치유신을 맞게 되고, 한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로써 통신사로 상징되었던 조선시대의 우호 교린의 교류도 끝이 났다.

통신사로 상징되는 조·일 교린관계의 종말은, 명치유신을 알리는 일본측의

서계로부터 비롯되었다. 명치유신 직후, 일본에서는 天皇의 집권사실과 명치외무성에서 한일관계를 전담한다는 서계를 보내왔다. 그런데 서계의 양식이 이제까지와는 달리 일본천황을 한 단계 위에 놓고, 天皇대 朝鮮國王의 외교를 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에서 외교관례상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선에서는 장군이 집권하건, 천황이 집권하건, 그것은 일본 국내의 사정이므로, 조선은 단지 일본의 최고집권자와 대등한 관계를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결국 일본은 무력을 앞세워, 1872년 부산왜관을 점령했고, 이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침략외교에 의해 교린관계는 깨지고 말았다.

조선전기 통신사에 의한 200년간의 교린관계가 임진왜란에 의해 깨진 것처럼, 조선후기 260여년간 교린관계도 일본의 일방적인 왜관점령에 의해 종말을 고했다. 교린관계의 붕괴과정은 다르지만, 일본의 일방적인 무력침공이라는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었던 것이다.

8.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의미

한일양국에서는 20세기의 불행을 극복하고, 21세기의 출발을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2005년을 ‘한일우정의 해’로 정했다. 양국간의 외교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루 1만명의 왕래시대에 접어들었다.

김포 - 하네다 간에는 직항로가 개설되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울 - 동경 간을 오가고 있는 시대이다. 그러나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선동으로 ‘독도’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들추면서, 양국관계는 또 다시 불행해 질 지도 모른다.

이 모두 지나간 한일관계의 역사적 경험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바보같은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일간의 진정한 의미의 우호교린이 무엇인가, 다시한번 일본에 간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메시지를 상기해보자.(끝)

<참고문헌>

손승철, 《조선통신사 - 일본과 통하다》, 동아시아사, 2006.

나카오히로시지음, 유종현 옮김, 《조선통신사이야기》. 한울, 2005.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역음, 《조선통신사 옛길을 따라서》 3권, 한울, 2007-9.

서구와 동아시아의 만남

김정인(춘천교육대학교)

본 강의는 19세기 중반부터 1945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5단원 ‘국민 국가의 모색’의 내용 중 서구와 동아시아의 ‘만남’을 문명 전환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국민국가의 모색

- ① 각국에서 개항이 가지는 의미와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의 양상을 비교한다.
- ②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이로 인한 가해와 피해의 실상을 알아본다.
- ③ 침략과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난 각국의 민족주의와 민족 운동을 비교한다.
- ④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노력과 국제 연대에 대해 알아본다.
- ⑤ 각국이 서구 문물을 수용하면서 사회, 문화, 사상 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비교한다.

1. 관점 : 서구 문명으로서의 전환과 세계화

19세기에 들어와 동아시아 여러 민족과 국가에서 근대 서구 문명의 수용이 시작되었다. 이 문명 전환은 중세적 中세계 문명권에서 근대적 대(大)세계 문명권으로의 발전과정으로서, 그것은 중국 중심의 중세적 천하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조선에서의 문명전환과 세계화는 두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우선, 내부적으로 사회변동과 문명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 배경이 조성되고 있었다. 학문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학자 중에는 화이관을 재검토하고 이를 부정하며 중국과의 국가 대등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또한 중세사회를 지탱하던 신분제도가 점차 이완되고 양란 후 혼란 속에서 민(民)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위민의식, 민주적 정치사상, 민국의 이념까지 내세워지면서 조선의 정학인 주자학, 특히 그 경제사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비판하는 이들도 늘어났

다. 과학사상이 발달하고 세계지리서가 도입되어 세계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고 궁극적으로는 구래의 중국 중심의 천하관과 가치관을 뒤집을 수 있는 서학으로서의 과학과 과학사상이 수용되었다. 이 무렵 중국을 거쳐 전해진 서양에 관한 지식은 지식인들에게 강렬한 자극을 주었다. 서학서의 내용은 중국의 학문과 연원이 다른 학문·사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했다. 서학 가운데서도 종교 신앙인 천주교는 궁극적으로 유교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내부 사정 변화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글문화의 발달 보급이라 하겠다. 이 시기 한글문화는 서민대중에게 광범위하게 파급되어 중세적 질서를 부정하는 반봉건의 사회의식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밖으로부터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을 표방하며 근대국가를 건설하고 궁극적으로 민주화를 지향하는 서구 열강이 기계문명과 산업의 발달 그리고 제국주의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로 다가오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서구문명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식민지로 시장으로 강점한 일이었다. 자유 평등 박애와 제국주의의 식민정책이 표리관계에 있었다. 동아시아문명의 주체국인 중국을 비롯하여 그 천하체계의 질서 속에 살아온 여러 민족 국가들이, 이제는 그들의 구래의 문명과 질서를 벗어나 새로운 서구문명을 받아들이고 문명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 때에 문명전환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다. 선두에 선 것은 동아시아체제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던 일본이었다. 동아시아 문명 속에 주변 국가였던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양과 교섭이 있었으므로 동도서예의 논리로, 봉건적 정치체제를 신속히 개혁하고 서구의 기계문명 실용문명을 적극 받아들이는 가운데 전통사상에 바탕을 둔 천황제 체제의 근대 군사 대국을 건설했다. 아시아와 결별하고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이웃나라를 침략했다.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 상호간의 전쟁을 통해 수많은 희생을 치룬 후 종전 후에야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천황제 아래서의 서구식 민주국가를 지향하게 되었다.

중국도 오래 전부터 서양을 잘 알고 교섭도 하고 있었으나, 동아시아 문명권의 종주국 천자의 나라가 스스로의 체제를 포기하고 문명을 전환할 수는 없었다.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을 받는 가운데 중체서용의 자세로 서구문명을 수용하고 그 후에는 황제 체제를 벗어나 서구식 국민국가 민국을 수립했으며 다시 그 뒤에는 내외외환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거대한 사회주의 인민공화

국으로 도달했다.

조선에서는 중세국가의 모순을 타개하고 신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바탕 위에서,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강점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문명 전환, 즉 서구 문명을 적극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는 근대의 정치 경제 사회사상 기계문명을 중심으로 한 서구문명과 중세의 화이사상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명과의 대립이었음으로 조선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변통의 논리를 세워야 했다. 변통의 원칙이 동도서기→구본신참 등으로 변동하는 가운데 변법 개혁의 논의가 국민 국가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문명전환, 세계화 근대화 정책이 급속도로 추구되었다. 그 결과 동서 냉전 체제의 형성하고 하는 세계정세의 격변 속에서 남북분단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남북에 각각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주공화국과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2. 서구 열강의 군사적 압력에 의한 문호 개방

19세기 초 동아시아의 정세는 대내외적으로 평온하였다. 청은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안정된 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조선은 18세기 중후반 영정조대에 이르러 국가 기반의 재정비를 마무리하였다.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전국을 장악한 지배 권력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며 장기간의 평화를 구가하고 있었다.

19세기 중반 들어 동아시아 각국은 서구 열강의 등장과 이에 따른 국제정세의 동요에 따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을 달성한 영국은 중국과의 교역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서구 열강은 처음에는 희귀한 물품을 구입하려 접근하였으나, 점차 자국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면서 이를 위해 군사 도발을 서슴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각국은 서구 열강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양 주도의 국제질서 속에 급속히 편입되기에 이르렀다.

가장 먼저 청이 영국과 난징조약(1842)을 체결하여 서양에 문을 열었다. 영국은 청정부가 영국 상인의 아편 밀매를 엄금하자 아편전쟁을 시작하여 압도적 군사력으로 승리하였다. 그 결과로 청은 협정관세율, 영사재판권 등을 영국에게 양보하게 되었다. 난징조약은 동아시아 불평등 조약의 원형이 되었

다. 한편,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미국의 무력시위에 굴복하여 미일화친조약(1854)을 체결하고 서양과의 통교를 시작하였다. 일본은 본격적인 자유무역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에 다시 굴복하여 미일수호통상조약(1858)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에도 불평등 조항이 포함되었다. 서양열강과의 불평등조약 체결로 문호를 열었던 중국, 일본과 달리 조선은 일본의 무력시위에 의해 강화도조약(1876)을 체결하면서 문호 개방을 하게 되었다.

3. 동아시아의 응전

1)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

서구 열강의 등장은 동아시아 각국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각국 정부는 외세의 침입과 간섭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다.

서구 열강의 우선적 침략 대상은 청이었다. 청은 아편전쟁에서 가장 먼저 서구 열강에게 군사적 패배를 당했을 뿐 아니라, 1858년 제2차 아편전쟁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게 패배를 당하였다. 잇따른 패배에 충격을 받은 청정부는 양무운동이라는 근대화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주도세력은 개명적 한인관료층으로서, 이홍장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양무파 관료들은 서양의 군사력과 과학기술을 적극 수용하여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해군을 창설하였고, 군수산업, 기선회사, 방직공장 등 근대적 기업들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양무운동은 중국의 전통을 근본으로 삼은 채 서양의 기술문명만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중체서용을 고집했기 때문에 개혁의 범위와 성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양무운동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차츰 쇠퇴되어 갔다.

일본도 문호개방에 따라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막부의 개국정책에 반발한 반막부세력이 크게 성장하면서 막부 권력에 도전하였다. 반막부세력은 존왕양이를 주장하며 막부의 개국정책을 비판하였다. 존왕양이파는 차츰 막부에 대한 비판을 고조시키면서 막부 타도를 꾀하였다. 일련의 정치적 혼란 끝에 반막부세력은 쿠데타를 통해 막부를 붕괴시켰다. 1868년 메이지유신이 성공하면서 막부가 폐지되고 신정부가 수립되었다.

신정부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서양 각국과 우호관계를 다지면서 적극적인 서구 문물 수용을 내용으로 하는 문명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서양의 근대국가를 모델로 삼은 대대적 개혁을 진행하였다. 먼저 지방제도를 정비하여 중앙정부가 전국을 지배하는 중앙집권체제를 수립하였다. 국민개병제를 위한 징병제를 실시하여 근대적 군사력을 정비하였다. 근대적 토지세를 확립하여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870년대 말이 되면 신정부는 중앙정부로서의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

조선은 강화도 조약 이후 서구 문물을 도입하여 근대화를 이루려는 시도가 일어났다. 고종은 1876년과 1880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여 일본과 서구의 문물을 배우도록 하였다. 1880년에는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여 국정 전반의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근대화 정책의 추진세력은 1880년대에 들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한 개화파였다.

개화파에는 우선 동도서기론에 입각한 온건파가 있었다. 이들은 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서양 혹은 일본의 기술을 배우고 정부기구와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한편 급진개화파는 서양의 기술과 함께 서양의 제도와 종교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고종의 신임을 받은 개화파는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이 개입하면서 개화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급진파와 온건파의 갈등이 드러났다. 이에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후원 하에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개화파는 세력을 잃고 민비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파가 득세하면서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은 추진력을 잃고 말았다.

2) 국민 국가의 수립 노력

19세기 중반 서양에서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국가 건설이 진행되었다. 국민국가란 국민을 구성 단위로 하는 국가 체제를 일컫는 용어로서, 19세기 유럽에서 민족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성립되었다. 국민국가는 공통의 언어와 문화, 영토를 갖추고 중앙정부에 의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수립하였다. 19세기 중반이 되면 영국을 비롯한 서양의 주요 국가들은 국민국가 체제를 갖추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입헌체제를 채택하였다. 특히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민족주의가 유럽 전체로 확산되면서, 국민을 단위로 하는 통일된 국민

국가 수립이 추진되었다. 1871년 독일제국의 성립은 독일 민족의 국민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염원을 실현한 결과였다.

19세기 말이 되면 서양을 모델로 한 근대화를 추진하던 동아시아 각국은 국민국가의 건설을 주된 개혁 목표로 인식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국민 국가의 건설을 추진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1870년대부터 일본 사회에서는 서양의 입헌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정치운동이 전개되었다. 정부도 궁극적으로 입헌제의 정착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1889년 메이지 헌법을 제정하여 입헌제에 기반을 둔 근대국가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였다.

일본의 입헌제는 헌법과 국회 개설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천황제 민족주의를 밑바탕에 깔고 있었다. 일본의 민족주의는 1890년대 무렵 지나친 서구화에 대한 반발로 일본인, 일본 국민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면서 형성되었다. 그런데 일본 고유의 특징 중에서 천황의 존재가 부각되면서 천황제 민족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천황은 헌법상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일본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다.

청에서는 청일전쟁의 패배로 큰 충격을 받게 되면서 일본을 모델로 한 입헌제로의 개혁 움직임이 등장하였다. 강유위와 같은 급진적 개혁론자들은 의회제를 도입하여 전면적 정치개혁을 할 것을 주장하는 변법론을 펼쳤다. 1898년 광서제의 신임을 얻은 변법론자들은 행정, 교육, 법률, 군대와 경찰체제의 근대화를 포함한 각종 개혁 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전반적 개혁을 위해 제도국 개설, 친위군 창설 등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 중에서 과거제에서의 팔고문 폐지와 서원의 학당으로의 변경만이 실행에 옮겨졌다. 오히려 수구파의 반발을 불러 오면서 변법 운동을 좌절하고 말았다. 입헌제 도입의 논의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에 자극을 받으면서 다시 본격화되었다. 먼저 양계초와 같은 온건 개혁론자들 사이에서 입헌군주제가 주장되었다. 청정부도 1906년에 점진적인 입헌제 방침을 천명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이미 반만 민족주의가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에 자극 받아 처음에는 중국인, 중국이라는 국가 의식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의화단 사건과 같이 청정부가 반제국주의 운동을 억압하면서 반만 의식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손문은 청조 타도를 목표로 하는 급

진적인 혁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반청혁명운동은 1911년 무창에서 청조가 새로 육성한 신군이 일으킨 반란을 계기로 청조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하였다. 이를 신해혁명이라 부른다. 그러나 왕조 철폐와 의회제 도입을 꾀했던 손문의 혁명 세력은 신군을 장악하고 있던 원세개에 의해 탄압을 받았다. 원세개의 황제 즉위 시도가 좌절된 후 중국은 각지역을 장악한 세력가들에 의해 분열에 빠졌다. 이와 같이 신해혁명은 청조의 붕괴를 가져왔지만, 근대적 국가체제 수립에는 실패하였다.

조선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국가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개혁이 시도되었다.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의 와중에 정권을 잡은 개화파는 궁궐과 정부 기구의 분리, 근대적 내각제의 수립, 조세제도의 합리화, 신분제 해체와 노비제 폐지 등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의 수립을 모색했으나, 고종과 보수파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한편 민간에서는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 독립협회는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보급과 민족주의의 수립에 기여하였다. 또한 고종과 보수 관료에 의해 국민 국가의 일환인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광무개혁이 추진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1905년 통감부의 설립으로 국민국가 건설 노력은 좌절되었고, 1910년 일본의 식민지로 주권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3) 아래로부터의 응전 : 대중적 민족운동

19세기에 들어와 쇠퇴의 조짐을 보이던 청은 아편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권위가 크게 손상되었다. 이 때문에 내부의 위기가 태평천국이라는 반란으로 폭발하였다. 태평천국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배상제회를 통해 결속력을 얻고, 유교이념과 만주족의 지배에 반기를 들었다. 지도자 홍수전은 남경을 점령하고 이곳을 새로운 수도로 삼았지만 결국 한인 관료와 신사를 이용한 청조의 반격과 지도층 내부의 분열로 붕괴되었다. 다른 민중반란이나 비밀결사와 협력하지 못한 탓도 컸다.

아편전쟁 이래 적극적으로 선교활동에 나선 기독교는 다양한 원인으로 중국 민중과 충돌하였다. 특히 19세기 말 집중된 열강의 이권획득 경쟁은 수많은 반기독교 운동과 더불어 1900년의 의화단 운동을 가져왔다. 의화단은 ‘청조를 도와 서양귀신을 몰아내자(부청멸양)’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서구와 관련

된 모든 것을 공격하였지만, 8개국 연합군의 반격으로 북경이 점령되면서 종말을 맞았다. 다음 해의 신축조약으로 중국은 총 9억 량이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되고, 열강에 대한 종속이 강화되었다.

홍선대원군의 10년 집권이 끝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자, 대외적인 개방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개화정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유생층을 중심으로 한 위정척사 운동과 통상·수교 거부운동이 나타났다.. 이 흐름은 의병운동으로 계승되었다.

개항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궁지에 몰린 하층민의 반감은 임오군란에서도 표현되었지만, 일본의 경제 침투와 탐관오리의 수탈에 반발하여 1894년에는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다. 지방관의 수탈에 저항한 농민 탄압을 계기로 전봉준이 이끈 고부 봉기는 호남지방을 휩쓸고 전주를 함락시키는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청과 일본이 군대를 파견하자, 폐정개혁 12개조를 내걸고 강화를 맺은 뒤 대부분의 농민이 흩어졌다. 척왜를 구호로 내걸고 다시 봉기하여 수십 만 세력을 모은 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의 반격을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졌지만, 그들의 요구는 의병운동이나 갑오개혁에도 반영되었다. 이 운동은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 프랑스의 침략이 강화되면서 단계적으로 남부의 코친차이나가 식민지화되었고, 중부와 북부는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었다. 응우옌 왕조는 명목상 존속했으므로 학자와 관리가 주도한 근왕운동이 이에 저항하여 각지에서 일어났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베트남의 민족운동도 1910년대 중반 이후 큰 전환을 맞았다. 프랑스식 교육을 받고 자란 새로운 세대는 점차 급진화되어 베트남청년혁명동지회(약칭 '청년')가 조직되고, 베트남국민당도 결성되었다. '청년'은 응우옌 아이 꾸옥, 즉 호찌민이 창립한 대중조직으로 베트남 국내외로 조직이 확대되었다. 그가 1930년 베트남공산당(인도차이나공산당)을 창당하자 1930년대 이후 민족운동의 주도권은 사회주의자들에게 넘어갔다. 1940년 일본군이 침략하자 호찌민은 베트남독립독맹('베트민')을 결성하여 저항함으로써 일본이 항복했을 때 쉽사리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1945년 9월 호찌민은 베트남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이를 부정하는 프랑스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4. 서구 문명으로의 전환

1) 자강과 침략의 논리, 사회진화론

동아시아에 들어온 서양 사상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사회진화론이었다.

사회진화론에서는 인간 사회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약육강식과 자연도태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서양 열강은 사회진화론을 내세워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점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사회진화론을 ‘우리도 힘을 길러야 한다’는 자강운동의 논리로 받아 들였다.

일본의 대표적인 사회진화론자인 가토 히로유키는 우승열패의 세상에서 서구 열강에 비해 열등한 일본은 무엇보다 강력한 민족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사상가 양계초는 서양 열강의 문명화되지 못한 나라에 대한 침략을 문명국가의 권리이자 의무로 보았다. 그리고 중국도 힘을 길러 문명국가로 나아가길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계초의 사회진화론은 베트남의 개혁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정치가 윤치호 역시 문명화된 서구 열강이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아시아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강자의 권리로 보았다. 그러므로 문명화되지 못한 한국은 반드시 선진 문명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생존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사회진화론은 근대화와 독립을 위한 개혁, 즉 근대적인 국가 사상과 민권 사상의 수용을 통한 자강을 주장하는 사상적 근거로 기능하였다. 하지만,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기능도 수행하였다.

2) 아는 게 힘 : 신문과 학교

신문은 나라의 안과 밖, 그 넓은 세상 소식을 알려 주는 통로였다. 특히, 국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자국어로 된 신문의 영향력은 컸다. 자국어로 창간된 신문은 민권 관념을 보급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에서는 상하이에서 《신보》가 창간되어 여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했다. 일본에서는 《요미우리 신문》과 《아사히 신문》 등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당시 신속하고 자세하게 전황을 보도하면서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 한국에서 최초의 민간지 《독립신문》이 순한글 신문으로 적극적으로 민중 계몽에 나서며 정부의 개혁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열강의 침략상을 폭로하고 이를 여론의 힘으로 저지하고자 하였다.

근대화가 진전되고 학교를 다니고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서양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 실력을 키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점차 널리 퍼져 나갔다.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인 교육기관이 근대식 학교로 바뀌면서 교육의 기회는 점차 넓어져갔다. 근대화를 추진할 각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서양식 기술 교육 기관도 문을 열었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가장 주력한 교육 정책은 국민 양성을 위한 보통교육의 확장이었다.

일본은 「학제」를 제정하여 신분 구별이나 남녀의 차별 없이 모든 어린이가 6세가 되면 학교에 입학하도록 하였다. 중국과 한국에서 서구식 교육이 확산되는 데는 서양인 선교사들의 역할이 컸다. 청 정부는 전국 각지에 통일된 학제를 가진 신식 학교를 설립하였다. 신식 학교는 몽학, 소학, 중학, 대학의 교육 과정으로 편성되었다. 조선 정부는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근대식 교육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정부 주도로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의학교 등을 세웠다.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베트남에서는 총독부 주도로 교육개혁이 진행되었다. 독립운동가들은 모금을 통해 동경의숙을 열고 국민의 식 개혁을 위한 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동아시아에 근대 교육이 확산되면서 선진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이 탄생하였다. 문호 개방 이후 처음에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 후 점차로 중국이나 대한제국에서 일본으로의 유학이 증가하였다.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학생을 일본으로 유학 보내자’는 동유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쑨원, 루쉰 등의 중국 지식인, 호치민 등의 베트남 지식인, 그리고 이광수, 최린 등의 대한제국 황실 파견 유학생 등이 도쿄에 모여 교류하며 선진 문물을 익혔다.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근대 교육 제도 하에서 개인들은 교육을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며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문화가 형성되어갔다.

3) 일상에도 규칙성을 : 시간과 철도

서양식 문물이 확산되면서 양장으로 잘 차려 입은 사람들과 전통적인 옷차림의 사람들이 뒤섞인 거리에서 높은 첨탑의 시계를 보는 일도 낮익은 풍경이 되어갔다. 시계탑은 관공서나 학교 등에 세워졌다. 손목시계가 일상용품으로 각광받을 만큼 하루를 24시간, 1주일을 7일로 하는 서양식 시간에 점차 익숙해져갔다.

시간의 근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력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1873년 1월 1일 자로 음력을 폐지하고 서양과 마찬가지로 태양의 운동을 기준으로 한 양력으로 바꾸었다. 24시간제, 7요일제도 채택되었다. 한국에서는 1896년 1월 1일 자로 양력 시행을 선포하였다. 중국은 신해혁명 이후 1912년 1월 1일 자로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음력과 그에 바탕을 둔 명절이나 전통 의례 등이 오랫동안 지켜졌다.

철도는 지리적 공간의 거리를 크게 줄이고 인구 이동, 상품 유통, 인적 교류 등을 촉진했다. 철도로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의 활동 공간과 시야는 크게 확대되고 생각과 관념도 그에 따라 개방적으로 바뀌었다.

한편, 철도는 제국주의에겐 침략의 첨병이었다. 한국의 철도 부설권은 제국주의 간의 경쟁의 대상이었다. 철도망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군사 수송에 크게 활용되었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 한국에서의 의병들이 철도나 철도 공사장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4) 경관부터 개조하라 : 도시

중국의 개항 도시들은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 나날이 번영하였다. 도시 안에는 서양 상인들만 거주할 수 있는 조계지가 있었고 중국 상인과 서양 상인의 상점들이 즐비하였다. 특히 상하이는 빠르게 발전하여 19세기 말에 인구가 100만명을 넘었다. 상하이는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서양인들이 조계지를 건설하면서 근대화되었다.

개항 이래 일본은 두 도시와 다섯 항구를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각지에 외국인 거주지가 건설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이들 외국인이 뒤섞여 있는 도시

에도(도쿄)를 탈바꿈시켜 부국강병형 수도로 재건하고자 했다. 일본 정부는 도시 경관만이 아니라 시민 생활의 서양화도 추진하였다. 도쿄지구개정안이 마련되어 두발과 복식을 포함한 의식주 모든 생활에서 전면적인 서양화운동을 전개하였다.

개항 이래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성에는 외국인들이 뒤섞여 살게 되었다. 한성은 대한제국 정부가 경운궁을 중심으로 개방적 근대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황성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길을 닦고 전차와 철도를 놓고 공장을 짓고 공원을 조성하던 중 일본의 식민화로 좌절하고 말았다.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베트남의 전통 도시인 하노이는 프랑스 식민 지하에서도 수도로 기능하였다. 전통적인 구시가와 구별하여 식민 치하에서 조성된 신시가지는 프랑스식 건축물이 늘어서면서 작은 파리로 불렸다.

5. 20세기 전반 서구와 동아시아의 조우

1) 무정부주의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국으로 발돋움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반전 사상은 반제국주의 흐름과 연결되었다. 무정부주의는 동아시아에서 반전·반제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사상이었다. 무정부주의는 모든 정치적인 조직·권력 등에 저항하며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 그렇기 때문에 무정부주의자들은 경을 넘는 국제 연대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무정부주의를 서양과 달리 개인보다는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받아들였다.

일본의 무정부주의자들은 천황이라는 막강한 권력에 저항하며 반전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의 신채호는 무정부주의를 독립 운동의 이념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한국 독립밖에 없다고 보았다. 중국의 바진은 일본의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혁명전쟁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양 무정부주의자들은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이므로 불참할 것을 선언하였다면, 동아시아의 무정부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전쟁에 철저히 저항하여 일본에 맞설 것을 주장하는 특징을 보였다.

동아시아 국제 연대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들이었다. 국제 연대의 주요 활동 무대는 중국이었다. 상하이 노동 대학의 건설과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 조직 등이 대표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상하이노동대학은 노동운동의 이론과 훈련을 쌓기 위해 만든 대학이었다. 중국인 무정부주의자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무정부주의자들이 함께 대학을 만들어 동아시아 무정부주의의 국제 연대의 실험장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교육으로 무정부주의 사회를 건설하자는 동아시아 무정부주의자들의 오랜 소원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은 대표적인 동아시아 무정부주의자의 연합체였다. 이 단체에는 중국 일본 한국 타이와 베트남 인도 필리핀 7개 국 대표 200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은 동아시아 각 나라의 무정부주의자들이 힘을 합쳐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또한 각 민족의 자주성과 각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활동하였다.

2) 제1차 세계대전과 21개조 요구

제1차 세계 대전은 먼저 유럽에서 발발했다. 20세기 초 유럽은 삼국협상(영국-프랑스-러시아) 세력과 삼국동맹(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 세력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었다. 양측은 유럽의 화약고 발칸 반도에서 정면충돌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5년간의 전쟁 끝에 독일이 항복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1918년 11월 11일).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이라는 양대 교전 세력은 제국주의 국가들로 세계 대부분 지역을 식민지 혹은 종속국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의 거물 정치인 이노우에 카오루는 이렇게 말하였다. “일본 국운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타이쇼(大正) 신시대의 천우(天佑)”. 마침내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개전 3일 만에 영국이 자국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독일의 무장상선을 격파해 달라는 단서를 달아 일본에 참전을 요구했다. 그런데, 영일동맹에는 참전 의무에 관한 조항은 없었다. 하지만, 참전 기회를 엿보던 일본은 동맹이라는 인연을 구실로 아예 자신들이 동아시아에서 독일 세력을 물리친다는 명목으로 참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영국은 일본이 전면에서 나서게

되면 중국과 독일령 남양제도는 물론 영국 자치령(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까지 세력을 뻗히고자 할 지 모른다는 의구심에 참전 요구를 일단 취소했다. 일본은 영국에 재고를 요청했다.

일본의 참전 의지는 강력했다. 영국과의 참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매듭되기도 전에 삼국간섭의 주역인 독일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일본과 중국 해역에서 독일 함정을 즉각 철수할 것과 교주만 조차지를 중국에 반환하되, 일본에 우선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물론, 독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였다. 마침내 일본은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한 지 한달 만인 1914년 8월 23일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제1차 세계 대전이 터졌다.

전쟁 초기 일본 국내에서는 반전여론이 생겨났다. 《동양경제신보》 등의 언론 매체가 나서서 전쟁에 반대했다. 반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참전으로 인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었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러일전쟁 후 만성적인 경기 침체에 시달리던 일본은 1914년 11억 엔의 채무국에서 1920년에는 27억 엔 이상의 채권국으로 면모를 일신할 수 있었다.

중국은 일본의 참전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중국은 자국의 영토, 수역, 조차지에서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중립을 선언했다. 이 중립 정책을 무시하고 중국 땅을 제일 먼저 침략한 열강은 다름아닌 일본이었다. 1914년 9월 일본 육군은 산둥성 용구로 침략을 감행했다. 독일의 조차지인 청도를 점령하고 산둥성 내 독일 이권을 접수했다. 10월에는 일본 해군이 적도 이북의 독일령 남양(南洋)제도를 점령했다.

일본은 독일과 싸웠지만, 전장은 동아시아를 벗어나지 않았다. 협상국이 유럽 전선에 일본 육해군 병력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독일 세력을 축출하고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며 제국주의 열강 반열에 합류하고자 하는 일본의 목표는 분명했고 의지는 강력했다. 그것은 곧 중국에 대한 정복과 지배의 야욕으로 이어졌다. 그 야욕은 중국에 대한 '21개조 요구'로 현실화되었다.

일본과 중국의 본격적인 대립은 1915년 1월 중국이 요구한 일본군의 철수를 일본이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독일과의 전쟁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 한걸음 더 나아갔다. 중국 침략과 지배의 기초를 닦는 작전을 개시한 것이

다. 하오키 에키 중국주재 일본공사가 정식 외교 수속을 무시하고 직접 대총통인 원세개를 찾아갔다. 그리고 일본 육해군, 관동도독부, 외무성의 합의를 거쳐 작성한 5개항 21개조로 된 요구서를 내밀었다. 명목은 일본이 막대한 군사비를 투자하여 독일의 조차지를 중국에 반환하기 위해 참전한 수고에 대해 대가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산둥성의 권익에 관하여 일본이 독일과 협정을 맺는 경우, 중국 정부는 모두 승인할 것.
제2항 남만주 동부 내몽고에서의 일본의 우선권. 여순 대련 조차 기한 및 만철 안동선의 기한을 99년 연장할 것, 일본인의 거주 영업의 자유, 부동산 취득권과 광산 채굴권을 인정할 것. 등
제3항 한치평매철광창공사의 증일합작화, 이 공사의 자산 및 채굴권을 보장할 것
제4항 중국 연안의 항만·도서를 타국에 양도 대여 하지 않을 것
제5항 소위 희망 사항 (1) 중국 중앙정부의 정치 경제 군사에 관한 일본인 고문의 초빙, (2) 필요한 지방의 경찰에 대한 증일합작, 혹은 일본인 배치 (3) 일본에 의한 무기공급, 혹은 증일 합작의 무기공장 만들 것 (4) 화중 화남에서도 일본의 철도부설권을 인정할 것 (5) 복건성의 운수시설에 대한 일본자본의 우선권 (6) 일본인의 선교권 등등

‘21개조 요구’의 골자는 첫째, 일본이 독일 조차지인 산둥지역에서 권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둘째, 남만주와 내몽고에서 일본의 특수한 지위를 더욱 강화시켜 줄 것, 셋째, 중국 주요 기업에 대한 참여를 보장할 것, 넷째, 정치 군사 재정 부문에서 일본인 고문을 초빙할 것, 다섯째, 중국의 치안 유지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었다.

‘21개조 요구’는 1900년대 일본의 한국 침략과 지배 과정을 고스란히 연상시킬 정도로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이를 전면 수용할 경우 중국은 한국처럼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수순을 밟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런데, ‘21개조 요구’ 내용 중 남만주에서의 일본 권익에 대한 요구는 그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 만주에 사는 한국인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만주 거주 한국인이 일본의 영토 확장과 토지 침략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한국인들이 중국인의 배일운동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1916년 무렵 만주 이주 한국인의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사실이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열강은 자신들이 유럽에서의 전쟁에 몰두하면서 동아시아에 소홀한 틈을 타서 제기된 '21개조 요구'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특히, 중국 침략과 지배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제5항에 대해 강한 불신과 반대를 표시했다. 일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만주, 산둥, 항주에서 주둔군을 증강하며 계속 원세개 정권을 압박했다. 원세개가 제시한 타협안도 무시했다. 결국 일본은 가장 큰 논란거리인 제5항을 삭제한 나머지 요구에 대한 최후통첩을 보냈다. 결국 5월 9일 원세개는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이를 수락하고 말았다. 중국에서 이날은 국치기념일로 기억되고 있다. 이후 원세개는 1916년 1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도처에서 일어난 제3혁명 혹은 호국護國운동이라 일컫는 반원세개운동과 영국·러시아·일본 등의 권고에 밀려 원세개 자신이 3월 황제제도 취소를 선언하고 만다. 선언하고 얼마 뒤 병사하였다.

일본은 1916년 원세개가 병사한 뒤 정권을 장악한 단기서를 적극 지원하며 더욱 노골적으로 내정에 간섭하였다. 우선 1917년 6월부터 1918년 9월 사이에 1억 8,600만 엔의 차관을 제공했다. 명목은 철도 건설 등이었지만 실제로는 단기서를 옹호하기 위한 수단이자 정치적 군사자금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일본 수상인 데라우치의 개인비서인 니시하라 카메조오西原龜三가 외무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단기서와 거래했다고 하여 이 차관을 니시하라차관이라고 불렀다. 일본은 이 차관의 대가로 각종 특권을 요구했다. 그리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성공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일본은 1918년 5월 비밀리에 중국 정부에 중일공동방적협정中日共同防敵協定の 체결을 요구했다. 그것은 일본과 중국이 극동에서 공동방위하고 양국 군대가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일본은 중국 군대 안에 연락원을 두는 동시에 중국 영내에 군사기지를 공동으로 건설하여 사용한다는 굴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비밀 교섭이 알려지자, 일본에서 수학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들의 시위를 시발로 배일운동이 확산되어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인들은 동아시아 문명화의 선두주자라며 선망하고 질시하던 일본이 중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패권국가라는 분명한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지만, 동아시아에서도 열강 간 각축은 치열했다. 그 대립 구도의 축은 일본 대 영국·미국이었다. 갈등을 촉발한 계

기는 ‘21개조 요구’였다. 미국·영국·러시아 3국은 일본의 침략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선린관계를 유지하던 영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점차 현실화되어갔다. 일본이 자신의 적국인 독일·오스트리아 양국과의 경제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 영국은 이에 항의하여 일본 상품 일부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는 보복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러시아도 ‘21개조 요구’에 불만을 갖고 있었으나, 관계 악화를 원하지는 않았다. 일본으로부터 무기와 군수품을 수입하는 처지인데다가 극동 방향으로 일본이 러시아를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서의 영국과 미국, 그리고 독일의 세력 강화를 견제해야 했다. 일본도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동맹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호 필요성에 의해 1916년 제4차 러일협약이 체결되었다. 미국은 중국 진출의 장애물이 될 ‘21개조 요구’에 대해 러시아·영국·프랑스를 끌어 들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의 이익은 물론 각국 간에 평등하게 누리고 있는 중국에서의 특권을 침해하는 중·일 간의 어떤 협정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미국계 은행을 중국에 설립하고 차관을 제공했으며 철도부설권을 얻어냈다.

동아시아에서의 열강의 각축은 종전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치열해졌다.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종연횡이 추진되었다. 일본은 영국에 일본이 점령한 구독일령 중 적도 이남은 영국이, 적도 이북은 일본이 위임통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영국은 장차 개최될 평화회의에서 일본 요구를 지지할 것임을 천명했다. 프랑스와 러시아도 이 제안에 동의하는 대신 일본에 대독 외교 관계의 단절을 요구했다. 일본은 이 요청을 수락하는 동시에 단기서 정권이 버티고 있는 중국의 참전을 허용했다. 마침내 1917년 8월 중국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하고 참전했다. 이에 앞서 4월에 참전한 미국도 일본과의 타협을 원했다. 일본 역시 미국과 타협하는 것이 중국에서의 지위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체결된 란싱-이시이 협정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서의 일본의 특수 권익을, 일본은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권익을 인정했다.

이처럼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열강의 각축은 일본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일본은 열강의 권익을 교차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다. 그 목표는 분명했다. 일본은 중국에서 자국의

지위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모든 협정에서 일본은 자국의 특수한 입장을 확실하게 인정받았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 또한 자명했다. 일본은 동아시아를 벗어난 지역에서 기존의 제국주의 질서를 위협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동아시아에서의 열강 간의 대립과 갈등이 일본을 주축으로 조정되는 가운데, 제1차 세계 대전은 종전을 향해 치닫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은 삼국협상 세력과 신흥 세력인 미국·일본 등 연합국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1919년 1월 파리에서 강화 회의가 개최되었다. 일본은 전승국으로서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와 함께 5대 열강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러시아는 제외되었다. 회의 결과 영국·프랑스의 주도로 독일이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내용을 담은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이 조인되었다. 그리고 미국 윌슨(T.W.Wilson) 대통령이 제안한 국제 평화 기구인 국제연맹의 설립이 승인되었다.

중국 역시 전승국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중국은 패전국인 독일이 산둥성에서 갖고 있던 권익을 당연히 회수할 것이며 일본의 강압으로 체결된 21개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산둥성에 대한 독일 권익과 적도 이복의 구독 일령에 대한 위임통치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일본은 '21개조 요구'에 근거하여 산둥성에서의 독일 권익을 내놓으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일본의 태도는 강경했다. 일본은 이미 1918년 9월에 중국이 '산둥성에서의 여러 문제 처리에 관한 교환 공문'에 동의했으므로 산둥 문제는 일본과 중국 간의 문제이지 강화회의의 의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일본을 지지하고 나섰다. 일본은 산둥성에 관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국제연맹 규약에도 조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결국 미국도 국제연맹 결성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본에 양보했다. 마침내 일본의 요구가 실현되었고, 중국은 베르사이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했다. 제1차 세계 대전을 겪으며 열강은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우위를 인정했고, 이제 중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위협에 맞서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중국인은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냈다. 1919년 5·4운동을 통해 반일운동의 봉화를 올렸던 것이다. 그 해 한국에서도 3·1운동이 일어났다.

17·18세기 동아시아 국제무역과 경제변동

민경준(경성대학교)

본 강의는 17·18세기 국제무역에 따른 은(銀)의 흐름에 주목하면서, 동아시아의 사회경제적 현상을 장기적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7·18세기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역의 수량 변화를 포괄적으로 그려보고, 같은 시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사회경제적 동향과의 관련성을 제시해 볼 것이다.

I. 17·18세기 중국 대외교역 구조

중국 전체의 대외교역량을 직접 보여주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하 중국의 무역상대국 내지 무역상대지역을 순차적으로 채택하면서 교역량의 추이를 개관하겠다. ‘무역상대’라고 해도 직접 거래하는 상인의 국적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거래되는 상품의 생산 내지 소비지를 보여 주는가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만, 여기서는 주로 자료나 선행연구를 근거로 편의적인 구분을 사용할 것이다.

1. 북변(몽골, 러시아)

융경(隆慶) 6년(1572) 몽골과의 화의에 의해 중국 북변에서 명과 몽골의 호시(互市)가 재개되었다. 이 호시는 해마다 대량의 은이 유출되는 ‘새는 바가지’로, 당시 명의 관료와 문인들의 비판을 초래했지만, 실제 거래액 및 유출액은 어느 정도였을까. 명과 몽골의 호시에 대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당시 상주문 등의 기재에서 1580년대 마필(馬匹)의 거래액을 연간 20-40 만량(兩)으로 추산하고 있어, 총액은 백만량을 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몽골에서 오는 주요 무역상품은 말 외에도 가축이나 가죽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 중국도 비단, 면포나 그 외의 잡화를 수출했기 때문에 은이 유출되었다고 해도 그 액수는 10-20 만량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명말은 여진인·몽골인·한인 등이 잡거하는 요동(遼東)지역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무역액을 볼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16세기 후

반부터 17세기 초에 걸쳐 요동총병관(遼東總兵官)으로 반자립적 세력을 유지하고 “전체 요동 상민(商民)의 이익을 모두 자기에게 싸담는다”(『명사』 권 238, 李成梁傳)라고 하는 이성량(李成梁)의 재정기반에 관한 연구를 보면 요동 교역의 개략적 규모를 엿볼 수 있다. 1592년의 고발문에 따르면, 이성량은 매년 양마(良馬) 천 마리, 인삼 5천근, 수달피 3천장 등을 이로(夷虜=여진, 몽골)에게서 사들여 중국의 관료나 상인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그 무역이익은 합계 11만량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성량 무역의 수익률이나 무역 전체에서 이성량이 관계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잡한 견적에 머물지만, 요동 전체의 교역규모도 몽골과의 호시와 마찬가지로 백만 량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17세기 후반이 되면, 청조는 북변에서 러시아와 직접 접촉하게 된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에 걸친 청러무역에 북경으로 가는 러시아 대상(隊商)무역과 쿨룬(庫倫)에서의 개인교역이 있었다. 러시아 정부의 대상 파견은 18세기 초에는 2년에 1번 정도이고, 그 판매액은 예를 들면, 1727-28년 대상무역은 16만량이었다. 개인교역액은 북경의 관영 대상무역을 능가하여, 큰 타격을 주었다고 한다. 1727년 카흐타조약 이후, 대상무역은 점차 쇠퇴하고, 1750년대 이후는 카흐타 호시가 특히 발전했다. 모피는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이고, 그 대가로 청으로부터 섬유제품 외에 은도 유출되었다. 18세기 말 청의 차 수출이 급속하게 확대되지만, 러시아가 은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은이 중국에 유입되는 일은 없었다.

그 외 청대 서북 변경에서는 준가르나 카자흐족과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준가르와의 교역은 1740년대에 전성기에 연평균 7만량 정도였다. 1760년대 이후는 이리에서 카자흐족과의 교역이 서북민족무역의 최대의 중심으로 발전했다. 예를 들면 1772년 이리에서의 무역액은 1년간에 약 18만량에 달했다. 그러나 서북무역 총액은 18세기를 통하여 수십만 량 정도에 그쳤던 것 같다.

2. 조선

조선과 청의 교역은 중강(中江)의 국경 호시와 북경으로의 조공에 부수한 교역 두 종류가 있었다. 청은 생사·견직물을 수출한 것에 반해 조선으로부터의 수입품은 인삼과 은이었다. 17-18세기 중국과 조선의 무역에 관한 통계자료는 찾기 어렵지만, 1700년 전후 조선으로부터의 수출은 연간 50-60만량이고, 1710년대부터 40년대에 걸쳐 그 수출액은 70-80만량으로 증가했다. 그 후의 무역액은 조선의 은 부족 때문에 감소했다. 조선과 청의 연간무역액은 수출입 합쳐 전성기에도 200만량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일본, 유구

17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중일무역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선행연구가 있다. 일본의 은과 중국의 생사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걸쳐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품이기 때문에,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등 유럽 상인이 중일무역의 이익에 참여하기 위해 격하게 다투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630년대 일본의 쇄국 이래 중일무역은 거의 중국 선박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중국선박의 수가 중일무역의 실제 규모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는 반드시 말할 수 없다. 몇 개의 예를 들면, 17세기 후반기, 청조의 해금정책이 엄격한 시기에 나가사키에 내항한 당선(唐船=중국선)의 대부분은 청조에 대항하는 정씨(鄭氏)의 선박이었다. 그들의 선박의 대부분은 중국 본토가 아니라 남양(南洋)을 출항지로 하기 때문에, 당선이라고 해도 오히려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교역에 종사했을 것이다. 또 청이 대만을 점령하고 해금이 해제된 후 나가사키에 내항하는 중국선박 수는 격증했지만, 도쿠가와 막부의 무역제한정책 때문에 무역 허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선박도 존재했다. 따라서 무역액은 선박 수와 비례하여 증대한 것이 아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1685년 중국선의 무역총액을 6천 貫(약 60만량)으로 제한하고, 또 88년에는 선박 수를 70척으로 제한했다.

17세기 전반의 중일무역에 관해 신뢰할만한 자료는 없지만, 17세기 후반과 비교한다면 그 무역이 보다 왕성하였음은 의심할 수 없다. 17세기 초 정은(丁銀) 감정으로 400-500만량이 매년 해외로 유출되고, 그 태반은 중국에 유입되었을 것이라 추측하지만, 포르투갈선의 일본은 수출은 조금 더 많았을 것이다.

1668년 일본 은의 수출을 막부가 금지한 이후부터는 동(銅)이 일본의 주요 수출품이 되었다. 막부가 규정한 중국선박 수량 제한은 1697년 일단 80척으로 늘어나지만, 1715년 30척으로 한정되고 그 후에도 줄어들어 1790년에는 10척이었다. 무역액 제한도 18세기에는 엄격해졌다. 그러나 해산물 등 몇 개의 품목은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액의 추이에서 중일무역의 쇠퇴를 성급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유구(琉球)에 관해서는 유구의 진공선(進貢船)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은(渡唐銀)의 수출규정액의 추이를 검토하면, 17세기 말은 연평균 약 6만량, 18세기 전반은 4만 5천량 전후이다. 규정액과 실제 수출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역대보안(歷代寶案)』에 수록된 문서를 검토하면 유구의 중국으로 수출하는 은 외에 유구 왕부가 추가한 은이나 선원 개인의 자본이 상당액에 달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 외의 액을 추가해도 연간 유출액은 10만량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4. 마닐라

중국 범선에 의해 운영된 마닐라무역은 태평양을 횡단하는 갈레온무역에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갈레온무역의 주요한 품목이 아메리카 은과 중국의 생사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중국 범선의 마닐라무역에 관한 통계자료는 중국선박이 지불하는 수출입세액을 통해 추산하지만, 마닐라에서 수출하는 은에는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액을 복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17세기 초 아메리카인의 중국 유입에 대한 선행연구는 연간 200만-500만 페소(140-220만량)의 은이 중국에 유입되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중국 범선에 의한 마닐라무역은 17세기 중반 급하게 감소하고, 그 후 조금 회복하지만, 결국 이전의 융성함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18세기 후반 중국-필리핀 무역에서의 중국 범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럽선박에 의한 지방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했다.

5. 남양무역 전반

마닐라무역을 제외한 중국범선의 활동을 수량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드물지만, 18세기 바타비아의 중국범선 무역에 관해서는 네덜란드동인도회사의 기록에 기초한 통계가 작성되어 있다. 중국범선의 바타비아 무역의 전성기는 1690년에서 1740년 사이였다. 이 동안 네덜란드동인도회사는 중국에 직접 회사선박을 파견하는 일은 없었지만, 중국범선을 통해 풍부한 중국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1680년대부터 18세기 중반까지 바타비아 네덜란드동인도회사의 대 중국선박·포르투갈선박의 구매액과 판매액은 연평균 약 29만 레익스·달텔, 15만 레익스·달텔(각각 약 25만량, 11만량)이었다.

중국 동남연안에서 출항하여 동남아시아로 가는 중국범선의 행선지를 당시 「남양」 혹은 「남해」로 막연하게 부르고, 그 범위는 동으로는 필리핀, 서로는 인도대륙까지이고, 중국범선에 의한 남양무역 전체 액수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이 추산할 수 있다.

명말 남해무역에 종사하는 중국범선에 지급된 무역허가증 수이다. 88인(引)은 행선지에 따라 동양과 서양 각각 44인씩 나뉘고, 동양에서 마닐라가 16인을 차지하는 외 각 항마다 2, 3척의 출해를 허가했다. 허가증 수는 점차 증가하여 1597년에는 137인에 달했다. 17세기 초 남양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수를 매년 75척, 1척당 하적의 평균가액을 9만량으로 하면, 연간 1,350만량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그러나 당시 관료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 상인이 원거

리교역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던 허가증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추산은 약간 낮게 잡아야 할 것이다.

청초의 관료 참보(斬輔)는 1670년대 말, 만약 해금이 해제되었다면 강소(江蘇), 절강(浙江), 복건(福建), 광둥(廣東) 사람들은 일본을 제외한 해외지역으로 매년 400만량 정도의 화물을 수출하고, 700만-800만량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의 추산이 타당하다면 17세기 전반 중국범선의 해외무역(수출입 포함)의 전체 규모는 1100만-1200만량 정도인 셈이다. 앞에서 본 여러 추산을 감안하여 일본무역, 마닐라무역의 규모를 조금 적게 잡아 각각 400만량 정도로 보더라도 당시 정국범선 무역액의 반 이상은 은 유입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 마닐라무역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대 중국범선 무역 수량에 관한 자료는 일본, 마닐라, 바타비아를 제외하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1650년부터 1662년까지 정성공 세력의 남양무역은 매년 16척에서 20척의 배를 남양에 파견하여, 128만-160만량 정도의 남양물산을 사들이고, 그 가운데 거의 반 정도를 중국본토로 수입했다고 견적하고 있다.

당시의 궁중당안 자료를 근거로 외국무역에 종사한 중국범선의 수를 보면, 남양무역 범선의 주요한 출항지는 하문(廈門)이고, 1720년대부터 50년에 걸쳐 하문에서 해외로 매년 출항 또는 귀항하는 범선의 수는 20여척에서 70척 전후로 증가하고 있다. 하문에 비해 광주의 범선 수는 적지만, 18세기 중반 매년 20척 전후의 중국범선이 남양을 향해 출항하고 있다. 1733년의 하문 관료의 보고에 따르면, 남양과 교역하는 범선은 6만-10여만량 상당의 상품을 싣고 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의 가액이 같다고 한다면, 18세기 전반 매년 600만량에서 1,400만량 정도의 남양교역을 하문·광주에서 출항하는 중국범선이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선의 내항을 한정하는 1757년의 규정은 중국범선 무역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남양무역을 행하는 하문의 중국범선 수는 50년대 말 이후 점차 감소했다. 1820년대는 295척의 중국범선이 동남아시아의 해상교역에 종사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하면 이 시기 중국범선 무역의 총액은 최저 연간 약 700만달러(약 500만량)라고 하는 연구가 있다. 단 이들 선박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화교 소유이고, 그들이 모두 중국 본토와의 교역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닐라무역에 비해 그 외의 남양무역이 중국의 일방적 수출초과였던 것만은 아니다. 명말 사람들은 동양(東洋=리핀의 루손)무역은 대량의 은을 중국에 가져왔던 것에 반해 서양(西洋=동남아시아 서부)과의 무역은 기본적으로 바터무역이었다고 간주하고 있다. 18세기 전반 바타비아의 중국범선 무역이 왕성

한 시기에도 네덜란드인은 중국 상품의 대가로 은을 지불할 필요는 없었다. 청대 사람들은 18세기 중엽의 남양무역이 「천만」 혹은 「삼백만」의 은화를 매년 중국 연안에 가져온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마닐라 외의 남양에서 상당량의 은이 중국에 유입되었다고 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다.

6. 구미 선박에 의한 무역

1757년 청 정부가 유럽선박의 내항을 광주 한 항구로 제한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수십 년간에 걸쳐 유럽선박의 주요한 내항지는 광주였다. 18세기 광주로 내항한 유럽선박의 수는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급속하게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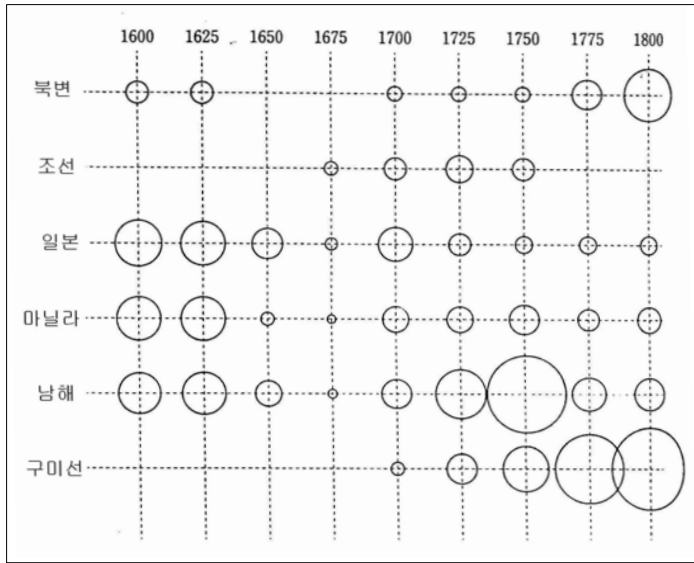
중래의 많은 연구는 H. B. 모스의 『영국동인도회사 중국무역 편년지』의 기록에 의거하여, 광동무역을 통한 은의 유입량을 파악해왔다. 대체로 1700년부터 1751년까지 구미선박에 의해 중국에 수입된 은액은 약 6,800만원(년평균 약 130만원, 95만량), 1752년부터 1800년까지의 수입액은 약 1억 479만원(년평균 213만원, 156만량)이다.

모스의 자료는 매우 유용하지만 구미선박 전체의 동향을 반영하지는 않으며, 또 은유입량의 통계에도 빠진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중영무역관계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1740년대부터 50년대에 걸친 은유입량에 관한 모스의 자료는 불완전하다. 일부 학자는 모스의 데이터에 의거, 이 시기 광주를 통한 은유입량이 감소했고, 그 결과 중국경제의 부진이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다른 자료를 종합해 보면, 1740년대부터 50년대에 걸친 시기는 오히려 광동무역의 발전기이고, 은유입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이 시기 광주에 내항하는 유럽선박 수는 증대하고 있다. 1757년 이후 선박 수는 일시 감소하지만, 63년 이후는 다시 증가한다. 둘째로 이 시기 영국동인도회사에 의해 영국에 수입된 중국산 차와 생사는 양에서도 가액에서도 증대하고 있다. 프리차드는 1741년부터 1757년까지 영국동인도회사의 중국무역 동향을 총괄하여 “중국 측의 과세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시기는 교역이 급속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7년전쟁의 발발과 함께 다시 감소하고 있다” 라고 적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것은 중영교역을 규정하는 것은 중국 측 조건이 아니라 유럽 측의 조건임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런데 18세기 후반에 유럽선박의 수와 교역액이 급속하게 증대하고 또 이를 통해 대량의 은이 유입된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유럽선박에 의한 지방무역(아시아 域內交易)만을 보면 동인도회사무역과는 달리 중국이 반드시 수

출초과였던 것은 아니다. 1780년대에 광주에 내항하는 유럽지방무역선의 수는 급증했다. 또 지방무역선에 의한 중국으로의 수입 증가가 수출총액을 누르고, 그 결과 총수출액과 총수입액의 차이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역액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18세기 말 중국에 유입되는 은은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7> 17·18세기 중국의 국제무역 구조



7. 17-18세기의 중국무역 구조

이상 17-18세기 중국의 외국무역에 대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수치를 간단히 검토했다. 이들 수치의 대부분은 정밀하지는 않지만, 이들을 종합하여 이 시기 중국의 외국무역의 개략을 정리해보자. 아래 <그림 1>은 각 무역상대지역마다 수출입을 포함한 무역총액을 원으로 표시하여, 25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는 마찬가지로의 방법에 의해 은유입액을 원으로 표시한 것이다.

17-18세기 중국의 외국무역의 개략적 특징을 열거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북변에서의 무역보다는 일본, 마닐라 및 그 외 남양과의 중국범선무역, 광동의 구미선박무역 등 동남연안 무역의 비중이 높았다. 둘째, 북변에서 약간 유출된 것을 제외하면 은은 이 시기에 일관되게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셋째, 무역 규모는 17세기 전반의 활황기 → 17세기 후반의 축소기 → 18세기 전반의 점증기 → 18세기 후반의 급증기라고 하는 파도를 그려내고 있다. 넷째, 무역의 중심이 17세기 전반의 일본·마닐라무역에서, 그 후의 쇠퇴기를 거쳐 18세기 중엽의 남양범선무역, 그리고 18세기 후반의 광동 및 북변

에서의 구미무역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 2세기 동안 중국의 대외무역을 주요 사건을 고려하면서 몇 개 시기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제1기 : 16세기 말 - 1630년대의 활황기

제2기 : 1640년대 - 1680년대 전반, 명청 왕조교체의 혼란에 이어 해금이 실시되고, 해외무역을 급속하게 쇠퇴한 시기.

제3기 : 1680년대 후반 - 1750년경, 해금해제에 따라 외국무역의 회복이 보였던 시기.

제4기 : 1750년대 이후 대외무역의 급속한 성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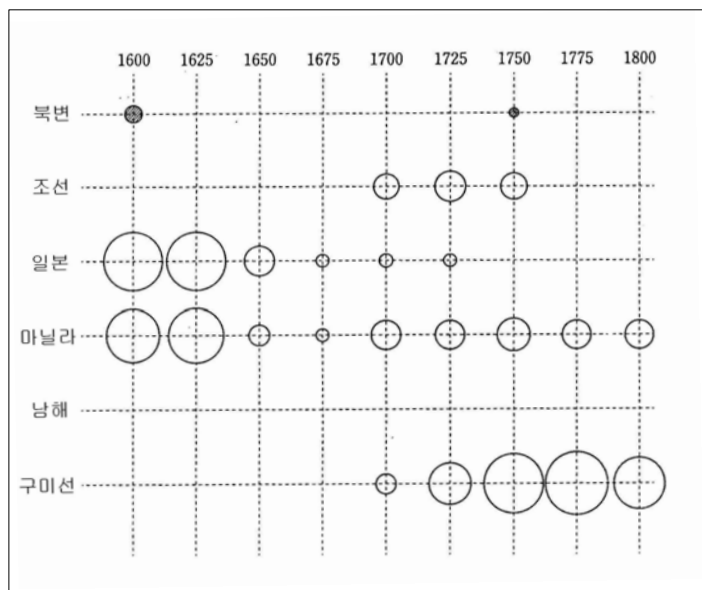
이하 제 II장에서는 각 시기별 대외무역 구조와 국내 사회경제 상황과의 관련을 그려나간다. 단 여기서는 그 개략의 추이만을 제시할 것이다.

II. 중국의 외국무역과 국내경제

1. 제1기 : 국제상업 붐과 명의 해체

16세기 말부터 1630년까지 대외무역의 특징은 해외로부터 은 유입의 증대이다. 이 시기 무역의 중심은 일본 및 마닐라와의 무역이고, 모두 중국으로 은의 수입을 특징으로 하는 편무역의 성격이 강했다. 달리 말하면 무역총액에 대한 은 유입액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고, 1600년 전후로 1천 수백만량의 무역총액 가운데 4백만량 정도를 은 유입이 차지했다고 추산

<그림 8> 17·18세기 중국의 은수출입액



된다.

대량의 은 유입은 당시 중국 국내의 은 수요가 컸음을 시사한다. 몽골세력과 대치하는 북변의 군사 긴장은 전국에서 흡수하여 북변으로 운반하는 세은액(稅銀額)은 16세기 동안 연간 약 100만량 이하에서 400만량 전후로 증대했다. 국내의 은 채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 아래 매년 세은을 뺏기는 전국의 농촌은 해외의 은에 대한 강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때마침 신대륙은과 일본은의 산출이 16세기 중엽 무렵부터 증대하면서 은 공급이 비약적으로 확대된다. 때문에 해외에서 중국 국내로 가는 막기 어려운 은의 흐름이 형성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명조는 해금정책으로 민간의 해외무역을 허락하지 않았다. 명 정부의 단속에 대항하여 무장 비밀 무역집단인 왜구가 동남연안의 유력자층과 결탁, 왕성하게 활동한 배경에는 당시 중국 국내의 강한 은 수요가 존재한다. 1550년대에 정점에 도달한 ‘북로’와 ‘남왜’의 문제는 은의 흐름을 매개로 상호 연관되었다.

명조는 1567년 해금을 완화하여 민간의 해상교역을 허가하고, 또 1572년에는 몽골과 화의를 맺어 북변의 호시를 열지만, 이들 모두는 ‘북로남왜’에 고심한 끝에 내린 양보임과 동시에 북변의 군사지출을 삭감하고 해외교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의해 국가재정과 민간경제의 고통을 벗어나려는 시책이었다.

그러나 해금 완화 후 은 유입량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초까지 미가(米價)를 비롯한 물가는 상승하지 않고, 또 은 부족에 따른 민간의 궁핍에 대한 지식인의 지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중국사상 전례가 없는 대량의 은 유입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왜일까.

그 첫째 원인은 북변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더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몽골과의 화의 이후에도 북변의 군사적 긴장은 줄지 않았고, 또 16세기 말 이후부터는 새롭게 요동·조선 방면의 방위가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군사지출의 증대에 따라 변경으로 가는 은의 흐름은 증가할지언정 감소하는 일은 없었다. 둘째로 전국에서 징수되어 변경의 군사지대로 운반된 세은은 내지로 환류한다 해도 관료·무장(武將)·상인 등 일부 사람들의 손에 집적되었지 농촌경제를 살찌우는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로서 형성된 광범한 농촌은 궁핍해지고 도시 유력자 계층은 번영하는 현저한 빈부격차가 명말 사회경제 상황의 하나의 특징이다.

16세기 중엽 연안 밀무역을 배후에서 지지하는 지탱하여 관료의 탄핵을 받은 북건의 대 향신 임희원(林希元)의 세력을 ‘독립왕국’처럼 묘사하기도 하지만, 북변의 군사지대에서도 개별 도시에서도 향신 지배는 명말 사회의 큰

특징이었다. 한편에서는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특권층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 하루하루의 생활도 유지하기 힘든 광범한 농민이 존재하는 빈부격차의 구도는 식량과 보호를 찾아 유력자 아래 사족으로 결집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반독립적인 세력을 증대시켜 간다.

동남 연안은 그와 같은 세력을 다수 만들어낸 지역의 하나였다. 토지보다는 상업의 재원으로 하고, 무장선단을 끼고, 동중국해를 무대삼아 활동하는 독립왕국과 같은 자립권력 - 그 하나의 예가 1000 척이나 되는 선단을 거느리고 복건 연안을 중심으로 세력을 구축하던 해적 정지룡(鄭芝龍)이다. 그는 해적으로 활동하면서 명의 제독(提督)·독무(督撫)에도 임명되고 있다. 그와 히라도(平戶)의 일본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정성공(鄭成功)이 청조의 입각 후 수년에 걸친 반청활동으로 청조를 위협한 일은 잘 알려진 일이다.

16세기에서 17세기 초를 정점으로 하는 동남아시아의 ‘상업의 시대’는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집권적 국가의 형성을 촉진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상업 붐은 명조의 통치에는 오히려 원심력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와 비교하면, 명말 중국의 연안 지대에는 상업 붐에 편승하여 군사력까지 갖춘 작은 ‘집권국가’의 맹아가 명조의 지배를 붕괴시키며 싹트고 있었다고 해도 좋다. 명조가 무너진 후 중국의 지배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였던 것은 명말 성장한 변경의 상업적=군사적 세력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제2기 - 해금과 국가통합

1620년대 후반 이후 섬서(陝西)에서 일어난 농민반란이 연해 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고, 군사지출의 투하지점이 변경에서 내지로 옮겨감에 따라 중국의 물가는 급격하게 상승했다. 1630년대부터 40년대에 걸쳐 대외무역이 국내경제에 끼친 영향을 추산하는 일은 어렵다. 농민반란에 따른 토지의 황폐에 3년간 이어진 자연재해로 도시도 농촌도 인구가 감소하고, 나아가 이자성(李自成) 농민군의 북경 점령, 송정제(崇禎帝)의 자살과 청군의 입관(入關)이라고 하는 왕조교체에 따른 전쟁이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대외무역의 영향은 그러한 소란 속에 매몰되어 버렸다.

1644년부터 45년에 걸쳐 청조가 중국을 정복한 이래 약 10년간 전쟁의 상흔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활발했다. 미가나 토지 가격은 1650년대 전후로 상당히 높았다. 물가고의 원인을 전란에 따른 물자부족에 돌릴 수도 있지만, 이 시기의 가격등귀는 식량뿐 아니라 물가 일반의 현상인 점 점, 또 이후 해금시기의 사람들이 순치(順治) 연간(1644-1661) 전반을 유통이 활발

했던 시기로 긍정적으로 회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1650년 전후가 반드시 생활난의 시기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건 연안을 거점으로 청에 저항하던 정성공 세력의 교역을 단절시키기 위해 청은 1656년 해금을 강화하여 민간의 해상무역을 금지하고, 1661년에는 천계령(遷界令)을 내어 연해의 주민을 내지로 이주시키고, 해안지대를 무인화했다. 1630년대 이래 계속 급등하던 물가가 급락하는 것은 바로 해금의 강화와 때를 같이 하는 1657년 전후의 일이었다. 그 후 대만에 웅거한 정씨 세력이 청에 항복하고 청조 정부가 해금을 해제하기까지 이십 수년간, 본토 사람들은 경제 불황에 고생했다. 그러나 제1기와 비교하여 이 시기의 특징을 말한다면, 제1기는 도시와 농촌 간에 번영과 궁핍의 강한 대조가 보였지만, 제2기에는 당시 사라들도 말하듯이, 대도시 소주(蘇州)의 중심 시장도 상품이 팔리지 않아 퇴적해두고, 사농공상 모두 궁핍했고, 도시와 농촌 모두 경제가 쇠퇴했다. 제1기의 경우, 은이 대량으로 유입된 다음, 그 은이 일부 계층의 손에 집중되는, 그로부터 나오는 커다란 지역적·계층적·경제적 격차에 문제의 근원이 있었다. 그에 반해 은의 내원이 끊긴 제2기의 경우 도시의 부유층이 곤궁하고, 그 소비에 의존하는 소민도 곤궁하다고 하는 궁핍의 연쇄라고 해야 할 현상도 나타난 점이다.

해금 시기는 청조가 정씨 세력과 삼번(三藩)이라는 두 개의 적과 총력을 기울여 싸운 시기였다. 이 시기는 명말 이래 성장해온 반자립적 세력 간 패권 다툼의 최종단계라고 할 수도 있다. 초기의 청조 그 자체가 소박한 수렵채집 민족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앞서 말한 것처럼 명말 변경에서 성장해온 상업=군사세력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 즉 16세기 후반 이래 한인이나 몽골인, 조선인 등의 “눈 감으면 코 베어갈 것 같은 황량한 변경의 시장”에서 다른 여러 반 자립적 집단과 연대, 경합하면서 성장해온 상업=군사집단의 하나가 누루하치가 거느리는 여진세력이었다. 청조에 투항한 뒤 삼번에 봉해진 경씨(耿氏), 상씨(尙氏), 오씨(吳氏)도, 그들이 청조와 결탁하던 개별 사정은 다양하지만, 그 공통의 배경에는 투기적 결합에 의해 자기 세력의 확대를 도모하는 변경의 반 자립세력 특유의 행동양식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명의 부흥을 기치로 청에 대항한 정성공도 그 세력의 뿌리는 동아시아의 국제상업 붐으로 성장한 “왜구”적 무력집단이었음은 앞서 말한 대로이다. 북경을 점령하여 명조를 직접 무너뜨린 것은 궁핍한 내지의 농촌에 그 뿌리를 둔 이자성의 농민반란군이었지만, 그들은 너무 일찍 무대에서 사라지고 중국지배의 열매는 변경·연해지대의 호황에 편승하여 성장해온 여러 집단 간의 싸움이 되었다.

청조의 해금은 심각한 경제불황을 초래했고, 명말 이래 중국경제의 해외무역에 대한 의존성을 뜻밖에도 입증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조에 의한 국가질서의 재편이 엄격한 해금정책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흥미롭다. 그것은 명말 이래 뿌리를 가진 ‘외항’의 경제권과 그것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자립적 군사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수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삼번의 난은 1681년 진압되고 대만에 거점을 둔 정씨 세력은 1683년 청에 항복했다. 명말 이래 제 세력의 패권 다툼 속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았던 것은 청조였다.

3. 제3기 - 청조의 화평

청조 정부가 1684년 해금을 해제했을 때, 동남 연안의 상황은 50년 전과는 크게 달랐다. 1630년대 일본의 ‘쇄국’에 의해 일본인은 동지나해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일찍이 교역 붐을 지탱하던 일본은 은 산출의 감소로 1680년대부터 거의 은을 수출되지 않게 된다. 일본의 ‘쇄국’ 이후 동아시아에서 포르투갈의 활동은 축소되고, 마카오와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으로 한정되었다. 대만의 거점을 잃은 네덜란드는 청과의 직접 교역을 단절하여 1690년 이후 바타비아에서 중국으로의 동인도회사 선박 파견을 그만두었다. 마닐라로 향하는 중국 범선의 수도 세기 초에 비하여 반감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에 걸친 과열된 붐은 제거되고,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통합에 대한 원심력은 약해지고, 야심적 모험자들이 거느리는 자립적 세력은 모습을 감추었다.

그러한 붐의 종언은 청조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교역 붐의 종언은 청조의 국가 통합에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을 가져왔을 것이다. 17세기 말 무역 이익은 감소하지만, 변경·연안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완화되고, 반 자립적 세력은 소멸했다. 이 시기의 해외무역을 담당할 것은 관부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무장선단이 아니라 관의 관리 아래 무역을 행하는 소상공인이나 어용상인이었다.

세3기의 특징 중 하나는 중국 범선의 남양무역 비중이 증대한 것이다. 17세기 초에 비해 일본과의 무역량은 감소하고, 18세기 전반에는 100만량 정도가 되었다. 18세기 전반에는 1년에 10척정도의 유럽선이 내항하지만, 그 무역액은 200만량에서 300만량에 불과했다. 러시아와의 교역도 매년 수십만량에 머물렀다. 17세기 초의 고조기의 중심에 있던 일본무역이 감소하고, 18세기 후반 이후 중국의 무역액 증대를 견인하는 유럽선박의 교역도 아직 왕성하지 않는 시기에 남양무역은 중국의 대외무역 가운데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

기에 이른다. 1717 청조는 출항한 배가 종종 귀국하지 않고 해적으로 활동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중국 범선의 남양무역을 금지하고, 이 정책은 1727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남양해금(南洋海禁)은 중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까. 남양해금이 가져다 준 경제 곤란을 당시의 지식인들이 종종 지적하지만, 이 시기 미가나 토지가격은 특히 두드러진다. 이렇다 할 하락은 보이지 않고, 또한 사료에도 전국적 궁핍을 지적하는 일은 거의 볼 수가 없다. 은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는 강희 초년의 해금시기와 달리 당시의 경제논의에서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실제 이 해금은 17세기 제3, 4분기의 해금과 비교하면 많은 면에서 효력이 없었다. 일본 및 안남(安南)과의 교역에 관한 금령은 없었다. 유럽선박의 광재 내항은 계속되었다. 마카오의 포르투갈선박도 남양으로의 출항이 허가되었다. 밀무역에 대한 처벌도 청초의 해금처럼 엄격하지 않았다. 총괄하면 이 시기 해금의 효력은 시기로도 지역으로도 한정된 소규모의 해금이었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전반까지의 중국경제는 과열 붐도, 심각한 불황도 없는 상대적 안정 상태를 유지했다.

4. 제4기 - 농촌의 호황

18세기 중반은 중국경제의 커다란 변동기였다. 건륭 10년대부터 20년대까지(1746-1766)를 중심으로 하는 물가 상승은 ‘중국의 물가혁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량의 곡물가격 자료의 정리를 거쳐 시간대별 상승은 ‘물가혁명’이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완만한 상승세이지만, 1750년을 전후로 곡물가격은 많은 지역에서 등귀했다.

이 시기 물가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는 건륭 13(1748)년 황제의 자문과 그에 대한 각 성 독무 등의 답신을 시작으로, 당시 사람들이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 주로 거론된 원인은 인구 증가, 상인의 투기 및 상평창곡(常平倉穀)의 채매(采買) 등이었다. 그에 대해 청대 경제사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해외에서 유입된 은이다.

1794년 왕휘조(汪輝祖)는 “왕년에는 미가가 150-160文에 이르면 아사자가 있었다. 지금은 米가 항상 비싸지만 사람들도 오히려 생을 즐긴다. 대개 왕년에는 오로지 비싼 것은 米였지만, 지금은 물고기, 새우, 채소 과일 하나같이 비싸지 않는 게 없다. 고로 소상인과 농부도 입에 풀칠할 수 있다”라고 한다. 1752년 무렵 황양(黃仰)은 “근일에 이르러 쌀, 쌀감, 면포, 비단과 여러 식용 물가는 이전보다 3배이다”라고 한다. 1755-61년 수차례의 물가등귀에 관하여 채현(蔡顯)이 “物 다투어 귀해지고 米價도 또 오른다.”

다시 주목할 것은 이 시기의 미가 상승과 토지가격 상승과의 관계이다. 미가 상승에 따라 토지가격이 등귀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근이 들 때에 전형적으로 보이듯이 미가 상승이 가계(家計)의 궁핍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일이 보통이다. 그러나 18세기 중반의 미가 자료와 토지가격 자료는 오히려 그 반대로, 토지가격의 상승률이 미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이자율의 저하로 해석할 수 있는 현상이고, 따로 말하면 화폐수요에 대한 화폐공급량의 상대적 증가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문제를 추구하기에 충분한 물가 자료가 정말 없지만, 화폐유통량의 증대가 18세기 중반 가격 등귀 하나의 원인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18세기 후반은 무역총액도 은유입액도 백수십년 만에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중국 대외무역의 재번성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대 중기의 사회경제 상황은 명말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첫째, 명말의 경제 활황이 도시나 군사·무역거점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광범한 농촌에는 불황의 양상이 현저했던 것에 반해 청대 중기의 그것은 오히려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활황이라고 하는 점이다. 18세기 중엽의 경제상태를 기록한 사료는 식량문제의 긴박과 빈민의 곤궁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의 활발함, 농민의 생산의욕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황양은 앞의 말에 이어 “鄉民에 이르면 순박하고 공손한 것은 전과 같지 않다고 해도, 힘써 농사 짓는 부지런함은 옛날이 따라오지 못하는 바이다. 가뭄과 홍수를 만나면 이전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내 중간에 그만두었지만, 지금은 힘을 다하여 도모하고, 또 흉년의 免租 때문에 起家하는 자 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생산노력과 소박한 생활태도의 결과 부유화한 향민이 성거지주의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고 “옛날의 소작료(田租)는 鄉보다 城에 많이 집중했지만, 지금은 城보다 鄉에 많이 분산해 있다”고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시기 토지를 둘러싼 격한 쟁탈전은 토지를 둘러싼 투자의 과열상황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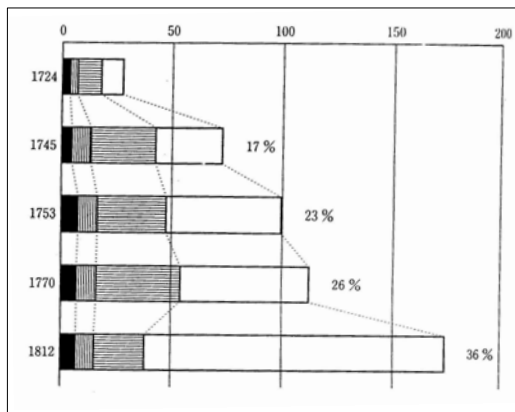
미가의 격한 등귀, 토지가격의 등귀를 통하여 자금이 농촌으로 흘러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은 농촌의 불황과 도시의 변화가 대조를 이루던 명말에는 절대 보이지 않던 현상이다. 이 시기 무역을 통한 은 유입 외에 베트남 빌마의 은광 개발에 따른 은의 유입까지 추가한다면, 은의 유통량은 상당히 증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동남 연안지대에서 은보다 동전 사용이 증가하고, 또 동전의 은에 대한 비가가 고수준을 유지한 점에 관해서는 근년 연구자의 주목을 모으고 있는 바이다. 이들 연구자들이 이미 지적하듯이, 그와 같은 현상의 배후에는 은이 주로 사용되는 거액, 원격지간의 거래와, 동전이 주로 사

용되는 재지(在地)의 시장과의 중층적 구조가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양자를 비교하면, 이 시기에는 재지시장의 거래 발전이 보다 급속하며, 그에 따라 동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을 것이다.

중국의 상용적 표현방식을 빌리자면, 명말이 “금생속사(金生粟死)”의 시대였던 것에 반해 청 중기는 “金土同價”의 시대였다. 전통적인 경제관에서 본다면, “금생속사”는 쇠퇴의 상징이고, “금토동가(金土同價)”는 상승세의 상징이다. 여기서 명말 경제의 쇠퇴 현상을 근거로 청 중기를 성세라고 하는 전통 지식인의 스테레오타입화 한 시대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각 시기가 지닌 명과 암의 양 측면에 주목하면 당시 지식인의 상투적 평가에 동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양자를 ‘상품경제의 발전기’로 일괄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의 다름에 주목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할 것이다.

제2의 문제는 대외무역의 발전과 국가통합의 관계이다. <그림 3>에서 보듯이, 18세기 중엽 이후 상관(常關)·해관(海關)을 포함한 전체 관세에서 해관세의 비중이 증대함과 동시에 해관세 중에서도 월해관(粵海關)의 세수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른다. 관세액이 국내의 상품유통량의 동향을 정확하게 나타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전체 상품유통 중 광둥무역의 비중이 이 시기에 높아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림 9> 4海關에서 징수한 관세액



明末 대외무역의 발전은 주변지역의 반(半) 자립적 세력의 성장과 결부해 있었다. 그러나 청대 중기는 1790년대에 채견(蔡牽) 등의 해도(海盜) 집단이 남중국 연안에서 활동을 할 때까지 관부와 대항할 해상세력은 존재하지 않았고, 유럽세력도 국내의 분열적인 움직임과 결탁하는 일은 없었다. 이 시기 청조가 대구미선박 교역창구를 광주에 집중하여 상당히 안정된 컨트롤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농촌도 포함하여 경제 활황이 지탱해준 국내 상품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외국무역의 이익이 부드럽게 내지로 전파되어 가는 구조가 존재하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명말의 상업 발전이 군사적 긴장을 배경으로, 농촌의 궁핍과 표리관계였던 데 반해 청대 중기의 그것은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국제 환경 아래 농촌의 호황을 동반하면서 전개되었다. 명말 지역적·계층적인 경제 격차가 세력을 가진 자의 사적인 보호를 구하는 사람들의 결집을 촉진하고, “마치 독립왕국”과 같은 세력을 성장시켰음에 반해, 청조 중기에는 사적 보호

2011학년도 동계 동아시아사 교원 연수(대구)

관계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생활기반의 불안정성이 감소한, 그와 같은 사정도 명말과 청대 중기와의 다른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중원왕조와 국제관계, 율령

김택민(고려대학교)

1. 중국과 중원·중원왕조

우리가 ‘중국’이라고 말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그것은 현재의 중국을 의미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고, 962만km²의 영토와 약 13억의 인구를 가진 거대 국가이다.

중국에 대한 이런 설명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면 옳지 않은 점이 있다. 달리 말하면 대부분의 시대에 현재의 영토 가운데 많은 부분은 중국 땅이 아니었다. 또한 현재 중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수적으로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의 선조들은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민족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들을 아울러 ‘신중화민족’이라는 민족개념을 만들고, 그 민족들의 거주지를 모두 자국의 영토로 확보하고 있지만, 이 같은 규모의 국가가 완성된 것은 겨우 200년 전이고, 그것도 한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족과 적대적이었던 만주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현재와 같은 거대 중국이 성립하기 전에는 중국이라고 하면, 황하문명 또는 중국문명의 터전이 되고 그 역사의 주된 무대가 되어왔던 화북평원 그 자체를 지칭하거나 그곳에서 흥기한 왕조를 가리키는 것이 상례였다.

화북평원을 역사에서는 항상 중원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종족의 주류는 농경민인 한족(漢族)이었다. 따라서 거주민으로 본다면 중원의 역사는 한족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족 외에 다른 민족이 세운 왕조가 중원을 차지한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중원의 역사는 곧 한족의 역사다.”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우선 중원을 차지한 한족의 통일왕조로는 진(秦, B.C. 221-207), 전한(前漢, B.C.. 201-A.D. 8), 신(新, 8-22), 후한(後漢, 25-220), 진(晉, 265-316), 수(581-618), 당(618-907), 북송(960-1126), 명(1368-1644) 등이 있다. 이 왕조들은 중원의 패권 쟁탈전에서 승리한 자가 세운 정권들이다.

이 왕조들의 영토는 각각 시대마다 다르지만 초기의 전성기를 제외하면 대개 중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당이나 명을 예로 들면 현재 중국 영토의 1/3을 넘지 않는 정도였다.

한족 왕조 외에 이민족이 중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차지하여 세운 왕조로는, 4세기 초부터 6세기 말초까지 주로 다섯 유목민족이 세운 이른바 오호(五胡) 16국과 북조의 왕조들(북위, 북제, 북주), 10세기에서 14세기까지 존속했던 요, 금, 원, 17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존속했던 청이 있다. 오호의 16국과 북조왕조들은 북쪽 지방에서 중원으로 서서히 침투해서 세력을 결집하여 정권들을 세워 황하 이북을 지배하였는데, 그 시기는 302-581년까지 약 280년 동안이다. 거란족의 요(遼, 907-1125), 여진족의 금(金, 1115-1234), 몽고족의 원(元, 1206-1279-1368), 청(淸, 1616-1644-1910)은 초원 지대에서 흥기한 뒤 중원을 침공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배했다. 거란족·여진족·몽고족이 중원의 일부를 지배한 기간은 약 350여년이다. 몽고족과 여진족은 중원은 말할 것도 없고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지역을 영토로 확보했는데, 그 기간은 약 350여년 이상이 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국역사의 터전인 중원을 한족이 아닌 이민족이 전부 혹은 일부를 지배한 기간은 980여년이다. 그것은 진나라가 통일왕조를 구축하는 기원전 221년부터 현재까지 약 2200여년의 45%에 상당한다. 이로 보면 한족이 중원의 역사를 주도하지 못한 시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밖에 중원을 차지하는 데는 성공한 적이 없지만, 무단히 중원을 향하여 공격의 화살을 돌린 많은 민족들이 있다. 한대에는 흉노가 있고, 위진남북조 때는 철륵(연연) 등 북방 민족과 남서쪽의 이민족들이 등장하며, 당대에는 돌궐, 회흘, 토번 등 많은 민족들이 등장한다. 명대에도 몽고족의 압박이 컸다. 근대에는 일본이 중원을 공략하였다. 아마도 동아시아에서 중원을 침공하지 않은 민족의 국가는 한반도의 한족(韓族)이 세운 왕조 외에는 없지 않나 생각된다.

지금 중국에서는 중원을 지배한 이민족왕조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의 영토 내의 모든 민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둔갑시키고 있다. 그리고 몽고족의 원왕조를 현재의 중국, 이른바 대중국의 기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몽고족들은 중원을 정복지의 일부로 생각했고, 한족은 피지배 대상으로 간주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자신의 왕조를 중화왕조로 자처하지 않았다. 청 왕조는 중화왕조로 자처했지만, 그 왕조의 지배층은 한족이 아니라 만주족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역사’ 대신 ‘중원의 역사’라는 범주를 설정하고 바라보아야 이 지역의 역사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2. 동아시아의 지리적 구조와 중원

그렇다면 중원이란 어떤 곳인가? 중원은 대평원인데, 원래는 대부분 저습지와 호수로 되어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황하·회하·해하에 의해서 침식된 황토가 퇴적되어 저습지와 호수가 메워지고 바다 쪽으로 육지가 확대되어 이 평원이 형성되었다.

중원은 퇴적평원으로 토양이 원시농경에 적합했기 때문에 최초로 문명이 출현했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기원 전후에는 중원 평원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원 전후 시대에 남한 면적의 4배에 가까운 대평원이 대부분 농업 생산이 가능한 지역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은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중원 평원을 제외하고 이보다 광활하고 집중된 농업생산 지대가 형성된 곳은 없었기 때문이다.

중원 평원의 높은 생산성은 인구 부양 능력이 컸으므로 이 지역에는 일찍부터 많은 인구가 거주하였다. 비교적 믿을 만한 중원왕조의 전국적인 인구통계는 A.D. 2년(전한 애제 원시 2년)의 5천967만 명인데, 이 가운데 중원 인구는 3천50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0.6% 이상이 된다. 당시 한나라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1/4에 가까웠을 것으로 학계는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이 크게 틀리지 않다면 당시 중원 인구는 세계 인구의 15% 이상이 되어 세계 인구의 100명 가운데 15명 이상은 이 지역에 살았던 셈이 된다.¹⁾ 당시 이 지역의 인구밀도는 100명/km²에 이른다.

중원에 비하여 북쪽의 사막과 초원은 기후가 건조하고 토양이 척박하여 토지의 생산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인구가 유목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어서 인구밀도는 1명/km²를 넘지 않는 곳이 많다. 양자강 이남은 원래 대부분 불모지에 가까웠으나 한족들이 지속적으로 이주하여 그들의 거주지가 남쪽으로 확대되어 갔다.²⁾

대륙의 동쪽에는 만주와 한반도가 북에서 남으로 이어져 있고, 바다 건너에 일본 열도가 있다. 만주의 대부분은 19세기에 한족들이 대거 이주할 때까지 소수의 만주족들이 반농반목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반도는 기후와 토양이 비교적 농업에 적합하지만, 산지의 비율이 70%가 넘기 때문에 물산은 넉넉한 편이 아니고 인구도 그리 많지 않았다.³⁾ 일본은 기후와 토양이

1) 김택민, 『3000년 중국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신서원, 2006, 22-25쪽.

2) 류제현, 『중국 역사 지리』, 문학과지성사, 1999, 34-35쪽.

3) 기원 전후 시기 한반도의 인구를 추정할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5-7세기의 인구에 대해서는 차이가 큰 여러 자료들이 전한다. 이런 자료를 기초로 고구려의 인구는 90-135만 명 정도로 보기도 하지만, (李玉, 「高句麗의 인구」, 『경기사론』 창간호, 1997, 3, 7쪽.) 이보다 훨씬 많게 보는 설도 있다. 백제 멸망 시점의 인구는 120만 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金起燮, 「4세기경 백제의 人口와 住民構成」,

한반도보다 양호한 편이어서 경지 면적당 인구 부양 능력은 높았으나 산지의 비율이 80% 이상이므로 절대 인구수는 많지 않았다.⁴⁾

이와 같이 동아시아를 살펴보면 중원의 북쪽, 서쪽, 남쪽 지역은 고대농업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농경이 가능한 한반도나 일본의 경우도 퇴적지가 크게 발달해 있지 않았으므로 고대적인 농경 방식으로는 생산성이 극히 미미했을 것이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광활한 중원 평원을 차지하여 경제력으로 월등한 중원왕조가 그렇지 못한 주변 지역에 대해 중핵적 위상을 확보했던 것은 오히려 필연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3. 중원왕조와 주위왕조의 관계

생산성이 높은 중원 평원을 차지하여 경제력이 월등하게 우세한 중원왕조가 그렇지 못한 주위 지역의 왕조들에 비해 경제적·정치적으로 우월한 위상을 확보했다. 그것은 한족의 왕조건 이민족의 왕조건 마찬가지로였다. 다만 이러한 현상도 10세기 이전과 이후를 대별해 볼 수 있는데, 10세기 이전은 일반적으로 한족의 중원왕조가 동아시아 정국의 중심이었다면 10세기 이후는 중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지한 초원의 유목왕조가 그것을 대신했다는 차이가 있다.

동아시아 각 왕조는 서로 군과 신을 칭하는 위계적인 형식의 외교관계를 맺었는데, 특히 중원의 왕조가 주위 민족의 군주를 책봉하고 책봉을 받은 군주는 중원왕조에게 조공을 하는 형식의 외교관계가 국제 질서의 기본 틀이었다. 따라서 조공·책봉의 형식과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조공·책봉 형식의 국제 관계를 교과서에 기술하거나 학생들에게 교육할 때는 그런 제도가 출현하게 되는 동아시아의 역사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내용을 조직해야만 한다. 만약 중원왕조의 실체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주변 왕조가 조공하고 중원 왕조가 책봉하는 형식으로 국제 관계가 성립했다는 사실만을 기술하고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이 역사 현상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중원왕조와 주변 국가 및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책봉체제(冊封體制)’나 ‘중화세계질서(中華世界秩序)’ 또는 ‘화이질서(華夷秩序)’ 등과 같은 개념들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 최근 중국의 당대사가(唐代史家) 왕소보(王小甫) 교수는 이런 개념들은 원래의 함의로 인해 대개

『경기사론』 창간호, 1997,3, 16쪽.) 이보다 많게 보기도 한다.

4) 8세기 무렵의 일본 열도의 인구는 500만 명으로 추정한다.(鬼頭宏, 『人口で見る日本史』, PHP研究所(日本 京都), 2007, 41쪽.)

‘중심과 주변’ 관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지닌 大國의 지위가 더해져 ‘체제’·‘질서’ 등으로 묘사되는 이러한 관계 상태가 모두 중국인이 주동적으로 추구한 목표이거나 적극적인 경영의 결과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는 커다란 오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역사상 국가 및 민족 관계의 발전은 오로지 중국인의 주관적 의지에 의해 안배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원왕조가 주변에 대해 무력으로 협박하는 국면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고, 주변 국가 및 민족 자체의 주동성에는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먼저 일소되어야 한다고 선명하게 주장한다.⁵⁾

그 동안 우리는 강대한 중원 왕조가 주변의 약소 왕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는 방식으로 동아시아사의 구도를 이해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중원 왕조를 중심으로 조공·책봉 관계가 성립했으니 중원이 중핵적인 위상을 차지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조공·책봉 관계도 중원왕조가 우세한 힘으로 위압해서 성립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민족 세력들에 의해 포위되어 지속적으로 침략을 받고 있는 형국에서 중원왕조가 자구적인 수단으로 조공·책봉 관계를 성립시켜 가는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한반도의 왕조들 및 일본의 고대 왕조와 중원왕조의 관계는 훨씬 더 의례적인 외교형식의 성격이 강하다.

4. 7세기에서 10세기까지의 동아시아 국제관계

위와 같은 관점을 7세기 초에서 10세기 초까지 존속했던 당왕조와 외국과의 관계를 통해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이 시기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다시 8세기 중엽을 분기로 크게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우선 6세기 말에 수나라가 중원을 통일했다가 망하고 이를 이어 당나라가 중원을 통일적으로 지배하였다. 이 때 초원 일대는 돌궐이 큰 세력을 형성하고 수·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만주와 한반도 일원에는 고구려가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수·당과 대결하는 한편 남쪽으로 백제와 신라를 압박해 갔다. 일본 열도에서도 점차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어 갔다. 동아시아의 서부에서도 토번이 점차 강성해져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한 축을 담당해 갔다.

5) 王小甫, 『盛唐時代與東北亞政局』, 上海辭書出版社, 2003, 5쪽. 이 책은 가까운 시일 안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

이 같은 국제 형세는 일대 격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수와 당은 먼저 직접적인 위협 세력인 돌궐의 내분을 조장하고 분열시켜 서로 대립하게 함으로써 각개 격파해 나갔다. 이른바 이이제이의 전략이 이것인데, 수·당은 돌궐의 일부 군장들에게 관품과 작위, 그리고 막대한 비단을 주어 우호세력으로 확보하고 용병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돌궐 제압에 성공한 수·당은 고구려를 계속 공격했다.

고구려는 수·당에 대해서는 극히 형식적인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하면서 돌궐 및 말갈과 연대하여 수·당에 맞섰다. 이러한 사실은 수 양제가 돌궐의 계민가한(啓民可汗)을 방문했을 때 그의 처소에서 고구려의 사자를 보고 경악한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 양제는 고구려 사자를 보고 돌궐이 겉으로는 수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고구려와 연대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고구려에 대한 침공 의지를 더욱 굳히게 된다.⁶⁾

고구려는 수·당과 대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백제 또는 신라를 압박하였다. 백제와 신라는 각각 수·당의 고구려 견제를 이끌어내고, 군사적 지원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공·책봉 관계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신라는 당과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백제가 멸망한 후 일본이 원군을 파병하여 백제 부흥을 도왔으나 실패했다. 또한 당나라는 신라까지 지배하려고 시도했으나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까지 결집하여 저항했고, 마침 토변이 당의 서부에서 침공해 옴으로써 당군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퇴각했다.

이로써 동아시아는 중원의 당, 서부의 토변, 한반도의 신라, 일본, 그리고 새로 재건된 북부 초원의 돌궐로 구성되는 안정된 구조를 이루었다.

8세기 후반 이후 대륙에서는 안사란으로 당조의 위상이 현저히 약화되고 대신 초원의 위그르와 서부의 토변이 강성하여 이 삼자의 관계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었다. 반면에 신라와 일본 및 만주에서 새로 성립한 발해는 당과 극히 형식적인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륙의 긴박한 국제관계에 벗어나 있었다.

이런 구조에서 국제적인 외교형식은 조공·책봉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형식의 국제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서 전개되었으며, 조공·책봉과 같은 관계는 외교 형식으로 극히 의례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득실이 맞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파기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돌궐·토변·위글 등은 군사적으로 불리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이 보장될 때는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했지만, 군사적으로 우세하거나 경제적인 이

6) 『資治通鑑』 권181, 隋紀5 煬帝 大業 6년(610) 12월 조, 中華書局 標點本, 1956, 5652쪽.

익이 없을 때는 그 관계를 파기하였다. 그것은 신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신라와 당은 연합하여 백제·고구려를 멸망시켰고, 그 과정에서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지만, 일단 당이 신라의 국익을 침범할 위험이 노정되자 그 관계는 파기되었다. 즉 문무왕 14년(674) 신라가, 당에 반기를 든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이고 백제 고지에 근거지를 두고 사람을 시켜 수비하니 당나라 황제가 크게 화를 내서 왕의 관작을 깎아버리라고 명령하고 唐에 와 있던 왕의 동생 김인문을 신라왕으로 삼고 유인케 등에게 군대를 일으켜 공격하게 했다.⁷⁾ 그렇지만 당나라의 관작 삭탈 조치가 문무왕의 지위는 물론이고 그 정통성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신라는 당의 관작 삭탈 조치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唐軍을 한반도에서 축출했던 것이다.

5. 군사·경제관계와 문화관계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정치적 목적 외에 경제적 또는 문화적 필요에 따른 것이기도 하였다. 다만 중원왕조와 주위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중원왕조와 유목민족 국가들 사이의 군사·경제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중원왕조와 한반도의 삼국 및 발해 일본 사이의 문화관계이다.

7-9 세기의 상황을 예로 들면, 당조와 북쪽 및 서쪽의 유목민족 국가들 사이에는 간단없이 공방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당조 측에서 이들 유목민족 국가들에게 몇 만 필에서 많게는 몇 십만 필의 많은 비단이 빈번하게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몇 개의 예를 들어 보겠다. 619년(당 고조 무덕 2년) 시필가한이 죽자, 고조가 애도하고 3일 동안 폐조하고 부물(賻物)로 3만 단을 보냈다.⁸⁾ 657년(당 고종 현경 2년) 12월, 서역이 평정되자, 그 땅을 다스리는 두 가한에게 각각 물품 10만 필을 주었다.⁹⁾ 724년(당 현종 개원 12년) 3월, “사신을 파견하여 絹 8만 단을 거란과 해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¹⁰⁾ 732년(당 현종 개원 20년) 배요경(裴耀卿)에게 견 20만 필을 가지고 해(奚)의 부락에 가서 공을 세운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¹¹⁾ 이밖에도 당 전기에는 돌궐 등 유목국가의 군주에게 많은 비단이 지급되는 사례를 무

7) 『三國史記』 권7, 文武王下, 14년 조.

8) 『舊唐書』 권194상, 突闕上, 5154쪽.

9) 『冊府元龜』 권964, 外臣部 封冊2, 11340쪽하.

10) 『冊府元龜』 권975, 外臣部 褒異2, 11449쪽상.

11) 『冊府元龜』 권655, 奉使部 謀略, 7849쪽상.

수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대개 유목민족들의 욕구를 채워주어 침공의 예봉을 피하는 한편 우호세력을 확보하여 다른 유목세력을 견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보면 중국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라고 칭하는 당 전기의 성세도 실제로는 비단으로 얻어진 평화라고(Pax Serica)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¹²⁾

8세기 중반 안사란(安史亂) 이후에는 당조가 일방적으로 유목민족에게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유목세력의 위협은 거의 대부분 비단을 주는 것으로 대처했다. 우선 난 평정에 공이 큰 회홀 군주에게 주는 상이 많았고, 공주를 시집보내는 비용도 컸다. 회홀과의 견마무역(絹馬貿易)도 당조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말 한 필의 값은 견 40 내지 50필이었고, 한꺼번에 수 만 필을 몰고 오기도 하는데 비루먹어서 부릴 수 없는 말이 많았지만 당조는 이를 거절할 힘이 없었다. 그리하여 말 값으로 지불하는 비단은 당조의 재정을 압박할 정도로 막대했다. 예를 들면 790년(당 덕종 정원 6년)에는 30만 필, 792년 7만 필, 822년 19만 필, 827년 20만 필, 다음해 23만 필 등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값지 못한 말 값이 180만 필이었다고 한다.¹³⁾ 이렇듯 경제 관계는 활발했지만 이 지역과의 문화적인 교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는 달리 당조와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일본 사이의 경제 교류는 빈약해서 지급되는 비단은 겨우 몇 백 필을 넘지 않았다. 비교적 많은 수량으로 637년(당 태종 정관 11년) 백제가 사절을 파견하여 철갑(鐵甲)과 조부(雕斧)를 바치자 당 태종이 채백(綵帛) 3천단과 금포(錦袍)를 준 일이 있고,¹⁴⁾ 731년(신라 성덕왕 30년) 신라가 우황 금 은 등을 바치자 ‘의의지향(仁義之鄉)’이고, ‘군자지풍(君子之風)’이 있는 나라로 추어올리면서 신라왕에게 능채(綾綵) 5백 필과 백(帛) 2,500 필을 준 사례가 있을 뿐이다.¹⁵⁾

이렇듯 삼국 및 통일신라와 중원 사이의 경제적인 교류는 미미한 수준인데 비하여 서적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유교와 율령, 불교를 받아들이는 등 문화적인 교류는 활발했던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학문을 중시한다.”든가 “군자의 나라다.” 등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면 당 태종이 삼국에 사신으로 파견되는 주자사(朱子奢)에게 훈계하기를 “해동[海夷]은 학문을 중시하니 경은 대의(大誼)를 강론하되--.”¹⁶⁾라고 하고 있다. 또한 737년(당 현종 개원 25년)에는 당조의 황제가 조문 사절에게 “신라는 군자의 나라로 불리며, 자못

12) 김택민, 「당 전기의 全盛과 비단[絹帛](Pax Serica)」, 『中國學報』 60, 2009, 12.

13) 『舊唐書』 권195, 回紇傳, 5208-5212쪽, 『新唐書』 권217상, 回鶻傳上, 6122쪽.

14) 『舊唐書』 권199상, 百濟傳, 5330쪽.

15) 『三國史記』 권8, 聖德王 30년조.

16) 『新唐書』 권198, 朱子奢傳, 5647쪽.

학문을 알아서 중화와 유사한 데가 있소. 경의 학술이 강론에 능하기 때문에 이번의 사신으로 선발하여 보내는 것이오. 그 나라에 가서 경전을 천양(闡揚)하여 대국의 유교가 성대함을 알게 하시오.”라고 말했다.¹⁷⁾ 이 같은 예는 당조가 사신을 교환한 70여 개의 국가 중 다른 민족의 국가들에 관한 기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6. 율령의 본질과 전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원의 유교, 한자, 율령, 불교가 한반도와 일본, 그리고 베트남에 전파되어 이른바 동아시아문화권을 형성했다. 그 가운데 율령의 본질과 전파의 실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율은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의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금기(禁忌)를 제시하고 그것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적 장치이다. 율을 제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황제에게 귀속된다.

율은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불평등법이다. 형법상의 신분은 크게 분류하면 황제의 친속과 관인 및 관인의 친속을 포함하는 특권신분, 서인, 천인의 세 신분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천인의 인격은 부정되어 가축에 비견되며, 천인을 살해한 죄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천인이 주인을 범한 경우 극형에 처하지만 천인을 가해한 주인에 대한 처벌은 극히 경미하거나 죄를 묻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율은 남계 혈통 중심의 유교적인 가족윤리를 지탱하는 보루의 성격을 띤다. 자식이 부모를 범한 행위는 극형에 처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모를 욕하거나 고소 고발한 자는 교수형에 처하고 구타한 자는 참수형에 처하며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대신 부모가 자식을 범한 경우 죄형이 면제되거나 극히 가볍다. 또한 친족 내의 존비장유(尊卑長幼)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존장을 가볍게 처벌하고 비유를 무겁게 처벌하는 차등법이 치밀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법 규정들은 가족윤리를 체제유지의 근간으로 삼기 위해 규정된 것이다. 또한 부부 사이에도 남편의 형법상 지위가 부인에 비해 월등하다. 그 밖에 동성불혼법과 근친혼 금지법도 엄격하다.

영(令)은 행정법이며, 그 본질은 황제지배체제를 보증하고 인민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지만, 형식은 시대에 따라 편차가 있으므로 그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당령(唐令)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17) 『舊唐書』 권199상, 新羅傳, 5337쪽.

당령은 십 수차에 걸쳐 반포되었는데, 각각 편수와 조문 수에 차이가 있다. 당령의 1편은 관품령으로 관인의 품계를 정한 법이고, 2-7편은 관부와 그 직원의 설치령이다. 이 영에 따라 중앙 정부에 3성육부(실제는 6성·9시·1대·5감·18위)와 기타 관청이 설치되었다.

나머지는 20개 내지 23개 편의 영(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각종 제도에 관한 것으로 각 관부의 직원들이 관장해야 할 직무에 해당하며, 국가사회의 체제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규범 전반을 정한 것이다.

다시 영에 규정된 제도들을 나누어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황제의 신변을 보호하고 권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황제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한 관료제로 관료 선발과 고과 및 봉작과 녹봉 등이다. 그 다음은 사람과 토지를 관리하고 조세를 징수하며, 무기와 곡식의 창고 및 가축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중원과 이웃하는 초원과 산악의 유목지대에는 중원왕조가 제정한 율령들이 전해진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본래 정착생활을 하는 농경지역의 윤리와 법이 이동 생활을 하는 유목지역의 그것과 서로 맞지 않고, 또한 대개 10세기 이전까지 유목지역에는 통일적인 전제왕권국가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가 과밀한 중원 지배를 위해 만들어진 유교와 율령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는 달리 한반도의 삼국과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와 조선, 일본의 고대왕조, 발해, 베트남 같은 농경지역에서는 유교와 율령을 수용하였다. 다만 이들 지역들은 역사 환경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각각 수용의 정도와 시기에 차이가 있다. 또한 유교와 율령을 수용하더라도 전면적이라기보다 지역의 고유한 윤리와 제도가 온존한 위에 필요한 만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왕권 강화를 꾀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은 모두 고유법을 근간으로 하고 율령 형식의 법을 제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삼국에서는 살상죄에 대해 재물로 죄 값을 치를 수 있었으나,¹⁸⁾ 중원 왕조의 율에서 살상죄는 반드시 실형에 처해야 하고 재물로 죄 값을 치를 수 없었다.¹⁹⁾ 살상죄에 대한 죄 값을 재물로 치르게 하는 법은 유목 계열의 법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²⁰⁾ 이렇듯 삼국의 법은 유목적 전통을 이은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전통은 율령을 반포한 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던

18) 고조선의 법에서 “남을 상해한 경우 곡물로 배상한다.”(『漢書』 권28, 地理志8, 1658쪽.) 백제의 법에서 “살인자는 노비 3인으로 죄를贖할 수 있었다.”(『舊唐書』 권199상, 東夷 百濟, 5329쪽. 『新唐書』 권220, 東夷 百濟, 6198-6199쪽.)

19) 김택민, 『중국고대형법』(新題 『동양법의 일반원칙』), 아카넷, 2002, 675-676쪽.

20) 시마다 마사오(島田正郎) 지음, 임대희 등 역, 『아시아법사』, 서경문화사, 2000, 243-248쪽.

것 같다.

한편 삼국의 사회는 혈연 신분에 따른 엄격하고 치밀한 차등주의를 기저로 하는 중원의 율령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 사회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지 않다. 원래 조선은 도적이 없어 문을 닫지 않았고 부인은 절개가 있었으나 한이 낙랑군을 설치한 후 한의 장사치들이 와서 밤에 도둑질을 하니 풍속이 점차 야박해져 법이 60조로 증가했다²¹⁾는 사실은 유명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이들 지역은 중원처럼 아직 그렇게 인구가 과밀하지 않아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지 않았기에 고유법을 중원의 법으로 대체해야 할 만큼 절박함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친속관계와 혼인제도가 중원과 달라 신라는 근친혼이 일반적이었으니,²²⁾ 동성불혼 및 근친혼을 금하는 당의 율령을 적용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영(승)도 또한 고유 제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품령과 직원령인데, 삼국과 통일신라의 관직과 관품을 보면 당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흔적을 찾기 어렵다.

일본 고대에는 네 차례에 걸쳐 율령이 제정되었고, 그 가운데 718년에 제정된 양노율령의 일부가 남아 있다. 양노율령은 조문 일부를 삭제하고,²³⁾ 용어를 일본의 제도에 맞게 고쳐 쓴 것 외에 당의 율령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일본에서는 율령이 제정되고 그 법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대국가를 율령제국가로 부르고 있지만 율령이 법조문대로 시행되었는가는 의문이 많기 때문에 재고해 보아야 한다. 즉 율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관철시킬 수 있는 군주의 절대 권력과 권위가 확보되어야 했을 터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또한 일본 사회의 제도는 중원의 그것과 같지 않았다. 특히 근친혼이 일반적이었고, 친속 관계도 전혀 달랐다.²⁴⁾ 따라서 중원의 율령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21) 『漢書』 권28, 地理志8, 1658쪽.

22) 河廷龍, 「新羅上代 王位繼承 研究-王室內 近親婚을 중심으로-」, 『新羅文化』 12집,

23) 예를 들면 養老律 名例律 6조는 八虐인데, 이는 唐律 名例律 6조의 十惡 가운데 不睦과 內亂을 제외한 것으로 아마도 일본의 친속제도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당률의 不睦은 시마친 이상의 친속을 살해하려고 모의하거나 남편이나 대공친 이상의 존장이나 소공친 존장을 구타하거나 고소 고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같은 변칙한 규정이 일본의 친속제도와는 걸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 唐律의 內亂은 근친상간을 금하는 규정인데 일본은 최근까지 근친혼이 있었으므로 이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24) 關口裕子, 『日本古代婚姻史研究』(상)(하), 嵩書房, 1993.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소농민경영

안병우(한신대학교)

1. 농업생산력의 발전

(1) 논 농사의 발달과 농경지의 확대

이 시기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농업상의 가장 큰 변화는 밭농사 중심의 농업구조가 논농사 중심으로 전환한 점이다. 강남의 논 개발이 대표하는 논농사의 발전으로 농업에서 논농사의 비중이 밭농사의 그것을 상회하게 되었고, 동아시아가 쌀 농사지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논농사의 발전은 평연지의 개간, 수리관개시설의 발전, 품종 개량, 시비법의 발달 등 여러 현상을 수반하였다.

논농사의 발전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송에서 명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발된 강남의 수전이다. 당말에서 송대에 걸친 농업생산력의 눈부신 발전은 ‘농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획기적인 것이었는데, 그 핵심은 바로 강남의 水利田 개간과 그와 관련된 농업기술의 발달이었다.

강남에서는 용수지 관개에 의한 선진 농업이 선상지와 하곡의 평야지대에서 전개되고 양자강 중하류 델타지역의 저습지가 개발되어 새로운 농경지가 대규모로 출현하였다. 이러한 농경지 개발 양상은 산언덕에 사다리밭(梯田)을 개간하던 북송이나 고려전기의 개간 모습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圩田(圍田, 湖田), 櫃田, 塗田, 架田(葑田), 沙田 등은 강남에서 개발된 다양한 수리전이다. 대표적인 수리전인 우전은 湖沼를 둘러 제방을 쌓고 그 가운데를 농지로 만든 것으로, 官이 만든 것과 民이 만든 두 종류가 있었으며, 萬春圩는 官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우전은 전호가 주로 경작하였다. 그러므로 수리전의 개발은 지주전호제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수리전 개발로 경지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송사』 식화지의 農田條에 희녕 연간(1068-77년)의 墾田이 455만 여 경인데 “隱田이 10분의 7인 점을 고려하면 간전수는 무려 3천여 만 頃이나 된다.” 고 하였다. 지역별로 간전의 분포를 보면 民田은 회남로(96만여 경), 강남서로(45만여 경), 강남동로(42만여 경) 등 양자강 중하류지역, 즉 강남에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견해, 즉 송대에 蘇州와 湖州 부근의 델타지역에서는 제방으로 둘러싸인 圩田 또는 圍田으로 불린 수리전이 대규모로 개발되었고, 그곳에서는 集約多肥의 米麥 이모작을 하였으므로 그곳이 당시 최선진농업지대였다는 강남도작에 대한 통설적 이해에 관하여는 이론이 제기되어 있다. 우전이나 위전은 수리조건이 갖추어진 집약적 도작을 한 장소로 보기 어렵고, 도작의 선진지대는 델타지역이 아니라 많은 지류가 산간부에서 흘러내리는 곳에 형성되는 支谷평야지대였으며, 태호 주변의 델타지대가 도작 선진지대가 되는 것은 명대에 이르러서였다는 주장이다. 강남도작은 송대 지곡평야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에서 명대 이후 델타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로 변화했으며, 그 결과 15세기 중엽부터 “湖廣에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하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호북과 호남을 비롯한 양자강 중류 유역이 논농사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양자강 중류지역은 14세기만 해도 강소와 절강에 비해 농업생산력이 크게 뒤진 지역이었다. 그러나 15세기 중엽 이후 외부에서 인구가 많이 들어왔고, 이들 客民이 토착인과 경쟁하며 山野를 개간하고 강변과 호수 주변 저습지에 圩堤나 垸堤를 축조함으로써 농경지가 확대되고 농업이 안정되어 곡창으로 변화하였다. 도작의 중심지가 지곡평야에서 대하천 하류로 옮겨가고 저습지가 지속적으로 개발된 것은 이 시기에 발생한 큰 변화이다.

고려에서는 12세기 무렵부터 수리관개 시설을 통한 개간이 활발해졌다. 이 시기 수리관개시설의 특징은 군현 단위의 소규모 제언을 많이 만들고 저습지와 간척지 개발을 위한 河渠와 방조제를 건설한 점이다. 몽골의 침입을 피해 섬으로 들어가면서 해안의 농경지 개발은 오히려 촉진되었다. 그리하여 고려 후기에는 “비옥한 땅이 연해지에 조금 있다”고 표현될 정도로 연해지 개간이 성과를 거두었다.

왜구로 인해 주춤하였던 연해지 개발은 조선 초기에 다시 활기를 띠었는데, 15세기의 저평지 개간에서 16세기에는 저습지 개간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간척사업인데, 대규모 간척사업은 국가가 주도하였다. 몽골의 침입을 피해 강화도로 피난하였을 때 만든 좌우둔전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선에 들어와 권세 있는 양반층은 노비나 일반농민을 역사시켜 서해안과 남해안에 堰田이라 불린 간척지를 만들었다. 한편 재지양반은 산간의 평평한 지역으로 이주하여 지속적으로 신전을 개발하였다. 16세기에는 대규모 하천을 막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새로운 수리시설(洑, 川防)도 축조하였다.

이렇게 개간된 농경지는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었다. 그 결과 『세종실록』 지리지의 전결수를 보면 전국 336개 군현 전체의 수전 비율이 27%인데 비해 경상, 전라, 충청, 경기 4개 도 연해지역 68개 군현의 경우는 평균 50%에 도

달할 정도로 논의 비중이 높았다.

일본에서도 중세에서 근세초기에 걸친 시기는 최대의 개간시대였다. 개간의 주 대상은 대하천 중하류의 충적평야지대와 해안부의 간척지였고, 그에 따라 벼농사의 중심지가 산간지역의 평지에서 平野로 이동하였다. 전국기와 근세초기에 걸친 대규모 치수 관개 사업으로 평야부의 경지 안정도가 높아졌고, 집약적인 벼농사가 차츰 가능하게 되었다.

농경지 특히 논의 대개간 현상은 베트남에서도 나타났다. 토지를 적극적으로 개간하고 지형의 특성에 따라 紅河를 비롯한 대하천 변에 제방을 축조하였고, 논에 관개하기 위한 수로도 새롭게 굴착하였다. 특히 찐(陳)조에서는 해안 구릉지대 개간을 중시하였으며, 개간을 감독하고 개간된 둔전을 관리하는 관직을 설치하였다. 제방은 범람으로 인한 수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洪德堤처럼 홍하 다이하의 하구지대에서 해수의 역류를 막는 역할도 하였다. 물을 신속하게 빼기 위해 준설도 시행했다. 거의 5백년 가까이 되었지만 이들 수리시설의 자취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2) 농업기술의 발달과 집약농법의 실현

농지 개간과 함께 농업기술도 발전하여 조방적 농업에서 집약적 농업으로 전환하였다. 농지 이용기술의 발달, 시비법과 품종의 개량 같은 중요한 성취가 이 시기에 달성되었다. 그러나 집약농법의 실현 여부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다.

농작물의 품종이 개량되고 새로운 품종이 보급되었다. 특히 벼 품종이 다양해졌는데, 占城稻의 전래와 재배는 동아시아 벼농사에 획기적인 영향을 주었다. 점성도는 단위수확량에서는 재래종보다 떨어졌으나, 가뭄이나 냉수, 열악한 토양에 잘 견뎌내고 시비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며, 조생종인 까닭에 윤작과 二期作이 가능하였다. 이런 이유로 12세기 말에 이르면 강남지역 수전의 8,90%가 점성도를 재배하였다.

고려에서는 매미가 울 때 수확한다는 선명도가 조생종으로 재배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수리조건의 열악함을 견딜 수 있는 인디카계통의 赤米 품종이 13세기에 중국에서 도입되었다. 적미 도입으로 수리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야지대를 개발할 수 있었으며, 15세기에는 전국에 보급되어 미곡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렸다.

이 시기 새롭게 보급된 품종으로 주목할 것은 면화이다. 면화는 복건 광둥에서 양자강유역까지 재배되기에 이르렀고, 이후 점점 더 널리 보급되어 고려

말에는 한반도에 유입되었다. 일본은 무로마치시대에 조선에서 목화씨를 도입하여 목면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면화의 보급과 생산은 면직업의 발달을 가져왔고, 의류생활에 혁명을 초래하였으며, 조선에서는 면포가 화폐로도 사용되었다.

북중국의 인구가 강남으로 이동함으로써 맥작이 강남에 보급되었고, 왕조 교체와 주민 이동에 의해 화북지역에도 벼농사가 널리 보급되는 등 농업의 교류현상이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보리와 콩이 널리 재배되고, 채소의 종류가 증가하였으며, 가마쿠라시대에 도입된 차 재배가 시작되어 급속히 퍼져나갔다.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작법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에서는 조생종의 보급에 의한 이기작과 함께 벼와 맥의 이모작이 송대에 성립하였다. 논농사에서는 직파법 대신 이식법이 일반화되었고, 논갈이에 犁, 耙와 함께 새로 발명된 耖를 사용하였으며, 모내기과 김매기용 농기구가 보급되었다. 관개를 위해 용골차, 筒車 같은 양수기구를 사용하였으며, 이기작 이모작과 관련하여 시비법이 발달하였다. 밭농사지역인 화북지역에서는 조 보리 콩류를 조합한 2년3모작이 보급되었다. 노동생산성은 물론 토지생산성을 최대한 높이는 집약농법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고려시기의 경지 이용에 관하여는 휴한법의 극복 시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세종 때 편찬한 『농사직설』에 수록된 수전의 경지이용도를 볼 때, 당시에 매년 경작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였고, 한전의 경우는 하삼도에서 2年3毛의 輪作法과 간중에 의한 연 2모 윤작법이 확립되었다. 그런데 『농사직설』과 통일신라기에 건립된 개선사 석등기의 ‘畦田’ 기록 등을 근거로 고려말 조선 초기에 연작상경이 달성되었다는 견해와 고려전기 ‘平田’에 대한 해석과 신라말의 수리시설 축조 등을 근거로 이미 고려시기에는 연작상경 단계에 도달하였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나아가 『농사직설』에 수록된 조선전기의 농업수준과 성격에 대하여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있다. 즉 중국 화북지방의 농업권에 속하였다는 견해(김용섭), 강남에서 유래된 습윤지 농법의 시비법을 중심으로 한 집약농법이었던 견해(이태진), 소가족을 농업경영의 기본단위로 하는 선진적인 집약적 소농경영이었다는 견해(宮嶋博史), 다수의 축력에 기반을 둔 노동생산성 중심의 노동절약적 토지집약적 기술에 근거한 조방농법이며 대농경영이 위주였다는 견해(이호철) 등이다.

조선전기의 농법을 둘러싸고는 이렇게 논란이 분분하지만, 고려후기에 이앙법이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牛馬廐肥糞 등을 비료로 활용한 사례를 볼 수 있

으며, 品官層 같은 지방 유력자들이 이러한 선진농법의 도입에 앞장서서 토지 소유규모를 확대한 모습도 나타난다.

일본에서는 벼농사에 이어 보리를 경작하는 이모작이 선진지대를 중심으로 보급되었고, 소나 말을 사육하는 농민이 늘었으며, 초목의 재와 우마의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하게 되었다. 무로마치시대에 이르러는 논농사에서 濲種法, 못자리 이용, 이모작이 전국에 보급되고, 수차 보급과 용수로 확대 같은 관개 시설이 비약적으로 발달하여 가뭄의 피해를 줄이고 신전 개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런 현상은 도작에서 집약농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가마쿠라시대 이후 수확량이 점차 증가하였다.

(3) 농업정책과 농서 간행

국가는 토지개간을 주도하거나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농업발달을 유도하였다. 송은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간에 적극적이었으며, 인종 경력 4(1044)년에는 수리에 관한 최초의 조서를 지방관에게 내려보냈다. 왕안석이 신법을 시행하면서 三司條例司를 설치하여 농전과 수리에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중원을 차지한 요와 금도 농업발전에 힘을 기울였다. 금은 한인을 동북 각지로 이주시켜 황무지를 개간하게 하여 동북지방의 농업 발전을 촉진하였다. 유목민족인 원도 농업을 중시하여 중앙에 大司農司를 설치하여 농업과 수리를 담당하게 하였다.

고려와 조선도 군대나 백성을 동원하여 둔전 등의 형태로 직접 토지를 개간하거나 개간지에 대한 면세조치를 통해 개간을 유도하였다. 이미 고려초기에 주인이 있는 토지를 개간하는 경우에도 개간자의 경작권을 인정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몽골과의 장기전으로 황폐해진 농지를 복구하기 위해 사패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가마쿠라막부는 낭인을 모아 황무지를 개간하는 등 개간정책을 추진하였고, 무로마치시대에는 다이묘(大名)들이 부국강병책의 일환으로 농지개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리시설을 확충하였다. 개간지에는 일정 기간 세와 역을 면제하는 제도도 만들었다(鋤下年季). 베트남에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토지를 개간하고 수리시설을 축조하였다.

선진적인 농법을 정리하고 보급하기 위해 농서도 편찬하였다. 송의 진부는 『농서』를 썼고, 원에서는 大司農司가 『農桑輯要』를(1273), 王禎이 『농서』를 편찬하였다(1313). 중국의 농서는 다른 지역으로도 전파되었으니, 宋本 『제민요술』이 고려와 일본에 전래되어 널리 활용되었고, 『농상집요』는 공민왕 때 고려에서 간행하였으며, 조선에서는 이를 이두로 번역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종 때 정초가 조선 최초의 농서 『농사직설』을 편찬하였고, 이후 강희맹의 『금양잡록』 등의 농서가 잇달아 편찬되었다. 이들 농서는 각기 다른 농업현실을 반영하였다. 일본에서는 17세기 전반기에 최초의 농서라고 할 수 있는 『淸良記』가 쓰여졌다.¹⁾

2. 농업경영형태 : 대농경영과 소농민경영

동아시아에서 농업경영 형태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하였는데, 경영 규모로 볼 때 흔히 대경영(대농경영, 지주경영)과 소경영(소농민경영)으로 구분한다.

대농경영은 가족의 노동력만으로는 경작할 수 없는 규모의 토지를 타인의 노동력을 부려 경작하는 농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농경영지와 그 주체는 대개 고려와 조선전기에는 농장과 지주 혹은 농장주로, 일본 중세에는 장원과 영주로 불렸다. 송대 이후의 대농지와 그 주체는 장원과 지주로 불려 지주의 영주적 성격은 부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농민경영은 自家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농업경영 규모와 형태를 말하며, 경작하는 농지가 소유지이든 차경지이든 문제로 삼지 않는다. 물론 일시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노동력을 빌리지만, 이것은 서로 협조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두 경영 형태는 병존하면서 대항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소농민경영이 대농경영의 기반으로 대경영에 포섭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다. 두 경영형태의 비중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랐으며, 각각의 경영 모습도 매우 다양하였다.

(1) 대농경영의 여러 모습

① 송 이후 지주제의 전개

송대 농업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은 농업생산관계와 농촌사회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대토지 소유자가 출현하고 지주제가 발달하였으므로, 남송대의 토지소유관계의 중심을 지주전호제로 규정하는 데에는 별 이견이

1) 『淸良記』는 南伊予의 三間盆地를 다스리던 무장 土居淸良의 일대기로 당시 南伊予지방의 사회상을 상세하게 서술했다. 1629-54년 사이에 서술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 30권 가운데 제7권이 농업에 대한 서술이다. 7권만을 독립시켜 『親民鑑月集』이라고도 한다. 土居淸良의 자문 요구에 老農 松浦宗案가 농업에 대하여 상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뒤이어 『百姓傳記』(1682), 『會津農書』(1684) 등이 각지에서 저술되었다(飯沼二郎, 『農具』 74-5쪽).

없다. 지주제 내부에서도 부재지주가 등장하였으며, 지주와 직접생산자(전호) 사이의 관계도 선진지역인 강남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경영관계로 변화하고, 전호의 지위가 상승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관계는 이후 명청대의 기본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었다.

전호의 성격에 대하여는 농노로 보는 견해와 자유로운 농민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전호를 어떻게 보는가는 송을 중세사회로 보는지, 근세사회로 보는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前田直典과 周藤吉之, 仁井田陞 등 일본의 송대 중세봉건제사회론자들은 토지제도와 법제, 신분제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송대 생산관계의 기초는 지주전호제이며, 지주의 대토지소유는 장원으로서 幹人(幹僕)을 두어 관리하였고, 경작은 노비와 전호가 담당하였다고 설명하고, 전호를 농노로 규정하였다. 그에 비해 송을 근세사회로 보는 宮崎市定 등의 교토학파는 송의 기본적 사회경제관계를 지주전호제로 파악하지만, 대토지소유는 장원이 아니라 영세한 토지의 집합에 불과하며, 전호는 완전한 자유인으로 지주와 토지대차계약을 맺고 소작인이 되었고, 전호 가운데는 지위를 상승시켜 지주와 소작인의 중간경영자인 業主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그 경영은 오히려 근세적 자본주의적 경영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지주제의 성격과 전호의 신분적 예측성이 논쟁의 핵심이다. 전호의 예측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노동력이 풍부한 곳에서 나타난 지주가 전호를 교체하는 割田, 전호의 頑佃抗租, 그리고 명청대 보급된 一田兩主 관행의 맹아로서의 소작권의 존재 등은 전호를 속박된 농노로 볼 수 없게 한다.

실제 송대의 佃作형태는 官莊法, 合種法, 租佃法 등이 있었지만, 관전의 경우 官司는 토지만 제공하고 정액의 租를 징수할 뿐 경종의 비용은 일체 전호가 부담하는 조건법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그 다음이 관사와 농민이 토지와 소, 농기구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고, 제공한 바에 따라 수확을 나누는 합종법이었다. 관청이 재산이 없는 유망민을 모집하여 집단적으로 경작하는 관장법은 가장 비중이 낮았다. 민전의 경우에도 비슷하였으며, 합종법은 주로 화북의 발농사지대에서 유행했다. 부재지주는 주로 조건법을 택하였고, 향촌에 거주하는 지주는 합종법(分種制)을 선택하여 전호가 主家 주변에 모여서 거주하였다.

② 고려와 조선전기의 대농경영

한국사에서 대농의 대표적인 현상은 고려후기에 발달한 농장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지배층은 대토지를 소유하였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규모나 경영형태 등에 관하여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국유지인 둔전 경영에서 둔전민에게

토지를 나누어주고 일정액의 수확물을 거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유지 경영에서 일종의 전호제가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전이 된 사유지를 개간할 경우 개간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수확을 分半하는 관계가 법적으로 공인되었으므로, 일종의 지주전호제가 민전에서 존재하였다.

고려후기의 농장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수조지 탈점을 통해 형성된 이른바 권력형 농장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요인으로 형성된 사적소유지형 농장이다. 후자는 대체로 권력형 농장에 비해 규모가 작았을 것이다. 농장은 여러 곳에 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따라서 부재지주가 많았다.

농장은 대개 노비를 시켜 경작하였다. 농장주가 본래 소유하던 노비도 있었지만, 토지를 겸병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만들어진 노비들도 많았다(壓良爲賤). 이들은 본래 양인이었지만, 농장주의 강압에 의해 혹은 조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자신의 토지를 기탁하고 노비로 전락한 농민이었다. 농장주는 莊頭를 두어 농장을 관리하고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 경작민으로부터 조용조 삼세를 수취하였으며,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농장 안에서 노비 농민이 가졌던 토지에 대한 권리나 경작 형태는 분명하지 않다.

권력형 농장이 1391년의 사전개혁으로 혁파되었지만 사적 소유지형 농장은 그대로 존속하였으며, 16세기까지 노비를 이용해 농장을 경영하였다. 사유지형 농장의 경영형태를 보여주는 파주의 安牧 농장과 태조가 방우에게 사급한 문서에는 作介制가 존재하였다.

농장 경영에 노비를 이용하였으므로 노비 인구는 고려후기 이래 16세기까지 계속 증가하였다. 전국적인 노비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15세기 말경 ‘노비가 거의 반’이라는(『용재총화』 권9 ; 『성종실록』 권91, 성종 9년 4월 기해) 서술이나 광해군 6(1614)년의 울산부 호적대장을 분석한 결과 양인이상이 51.4%, 천인이 48.6%(이 중 공천 12.9%, 사천 35.7%)를 차지했다는 연구²⁾를 통해 노비의 비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노비가 많고 대토지경영에 동원된 점은 송, 명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특이한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의 노비 대부분은 호를 구성하고 스스로 재생산활동을 하는 처지였으므로, 노비는 소농민경영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양인농민이 지주의 토지를 차경하는 병작반수제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대토지소유자는 자경을 우선하였으며, 자경의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를 병작제로 경영하였으므로, 조선전기에도 병작제는 보편적인 관행으로 성장하지는 못하였다. 병작제가 보편적인 생산관계로 되기 위해서는 소농민경영이 안정되어야

2) 이수건,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사회의 일연구」 『한국사학』 9, 정문연, 1987, 72쪽

하는데, 아직 자립재생산이 가능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농의 경우 차경하더라도 농업경영은 主家에 의존하였으므로 주가의 간섭이 심하였다. 병작제는 조선후기에 일반화된다.

③ 장원공령제와 領國經濟 하의 대농경영

일본의 토지소유관계는 독특한 길을 걸었다. 이 시기에 莊園 公領制가 형성되고 율령국가체제가 마비되었으며, 다시 다이묘(大名)의 領國經濟체제로 이행하였다. 그리고 16세기 말은 근세로 이행하는 과도기였다. 그러므로 토지소유관계와 소농의 지위에도 변화가 적지 않았다.

10-12세기 平安시대 중후기에 백성 부호층이 토지를 적극적으로 개간하면서 장원이 급속히 늘어났고, 이때부터 16세기까지 장원과 율령국가의 국유지를 계승한 國衙領(公領)이 병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토지제도를 장원공령제라고 한다.

장원의 영주는 귀족, 사원, 神社, 지방 호족 등이었고, 한 영주의 장원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있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그 규모는 다양하였다. 개간에 의해 단순한 사유지로 출발한 장원 가운데 불수불입권을 인정받는 것이 생기면서 토지소유권과 다르지 않았던 장원주의 권한은 영주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연공징수권은 징세권으로 변하였다. 한편 지방호족이 장원을 권세가나 寺社에 기진하여 장원이 권문세가에 집중되었고, 그로 인하여 영주에도 本家職과 領家職, 실질상의 영주와 명의상의 영주 같은 복잡한 계층이 생겼다.

장원의 지배조직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대개 영주와 莊官, 莊民으로 구성되었다. 장원에서는 중앙의 장원영주가 임명한 莊官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했고, 國衙領은 國司의 지휘를 받는 郡司나 鄉司 등의 公領 영주층이 지배했다. 庄司, 下司, 地頭 등으로 불린 장관은 영주가 파견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현지 토호가 임명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본래의 개간자로서 토지를 기진하고 장관으로 임명된 자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실력을 인정받고 장관직을 세습하였다. 장관은 소정의 분배를 받거나 일정한 토지(給田)를 용익하였으며, 연공과 公事(곡물 이외의 雜稅)를 면제받았다.

장원의 토지를 경작하고 年貢과 公事, 課役을 납부하는 장민은 백성이었다. 平百姓, 脇百姓, 小百姓, 間人 등으로 불린 백성층은 가옥과 토지를 보유한 자유민, 소농민이었으며, 그들의 권리는 作手職 百姓職으로 불렸다. 이들 작인층 가운데서는 지주화하여 연공부담자로 상승하는 자도 나타났다.

묘슈(名主)는 영주에게서 장원 구성의 기초단위인 묘덴(名田)의 소유를 인정받은 상층 장민으로, 장관도 대개 유력한 묘슈가 임명되었다. 묘슈는 묘덴

의 年貢(1反 당 3-5두) 등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납부하는 책임을 졌고, 자신의 몫으로 가지시(加地子)를 취득하였다. 가지시는 연공에 필적하거나 그것을 상회하였으므로 묘슈는 지주로서의 성격을 가졌고, 그 권리는 상속과 매매가 가능한 사적 권리로 인정받았다.

일반적으로 묘텐은 장원 안에 산재하는 영세농경지의 집합체였다. 묘슈는 下人 從者 등 예속민을 이용하여 묘텐을 직접 경영하거나 다른 농민에게 경작하게 하였으므로, 묘슈의 경영에는 가부장적 관계가 내포된 동시에 소작관계도 존재하였다(請作). 그런데 점점 후자의 형태가 증대하여 묘슈는 지주적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되었으며, 무사가 되어 농경에서 벗어나는 신흥 묘슈층도 나타났다.

장원공령제는 무사의 성장과 지배관계의 변화로 인해 쇠퇴하였다. 장원 발달로 율령국가체제가 와해되면서 불안을 느낀 영주들이 군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지방토호 출신의 무사들이 율령귀족인 源씨와 平씨에게 의탁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주종관계가 형성되었다. 가마쿠라막부에서 각국에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슈고(守護)와 장원 및 공령의 토지관리, 조세징수를 담당하는 지토우(地頭)를 배치하자 명령 계통을 달리하는 두 개의 지배권이 하나의 토지와 인민에 미치게 되었다. 지토우가 일종의 조세청부제도(請所制度)를 운영하면서 영주는 장원지배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정액 연공만 받는 존재가 되었다. 반면 지토우와 슈고의 권한은 점차 강화되었고, 토지관리권과 조세징수권, 토지처분권까지 갖게 된 슈고는 마침내 무로마치시대에 다이묘가 되었다. 이에 따라 중층적인 토지 지배관계는 戰國大名에게 일원화되었고, 장원공령제와 묘텐, 묘슈의 가지시 수취권은 약화 내지 소멸하였다. 또한 새롭게 형성된 자치촌인 惣村은 행정촌으로 개편되고 자치권은 약화되었다.

최고권력자 쇼군(將軍)은 토지를 직접 지배하지 않고 주로 조세에 의존하였으며, 다이묘 역시 그렇게 되었다. 일반무사는 지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그 토지는 公的인 所領으로 되었고, 마침내는 兵農이 분리되어 主君에게서 녹미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서민은 凡下, 지계닌(地下人), 土民으로 불렸으며, 대부분 농민이었다. 田地를 所持한 백성은 請作人이라기보다 지주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轉作(又作)도 단순히 소작으로 불리게 되었다. 大名의 재정이 궁핍하게 되면서 田租率은 전반적으로 높아져, 전국시대에는 70% 이상의 중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戰國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82년부터 1598년까지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 가신을 파견하여 토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太閤檢地), 촌락단위로 모든 토지를 통일적인 도량형과 등급에 따라 조사하고, 직접 경작자를 檢地帳

에 등록하였다. 이 조치를 통해 石高制가 성립되고 근세 촌락이 형성되었으며, 소농이 제도적으로 성립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병농이 분리되었으며, 장원 공령제가 최종적으로 붕괴되고 惣村제도 빠른 속도로 해체되었다. 근세로의 이행이 시작된 것이다.

(2) 소농민경영의 형성과 성장

소농민경영은 광범위하게 존재하였으며, 그 존재형태는 역시 다양하였다. 송이나 고려, 조선전기의 농업경영을 대농 위주로 설명하고 그 성격을 지주(전호)제로 규정하는 견해와 달리 당시의 소농민경영을 강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농민 경영이 농업경영에서 중심이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① 송 이후 소농민경영의 추세

송 이래의 토지소유관계의 특징을 지주(전호)제로 규정하면, 소농민경영은 부차적으로 취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자기의 토지를 소유하고 가족노동력으로 경작하는 농민은 송 이래 계속 존속하였다. 더욱이 소농민경영의 범주에 자경지를 소유한 자작소농민 이외에 차경민도 포함시키면, 그 범주와 비중은 훨씬 커진다. 소농민은 낮은 토지생산성, 지주의 겸병 위협, 정부의 과도한 수탈로 인해 몰락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상승 자립해 간 사례들도 있다. 소농민층은 몰락과 상승을 계속 반복하였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상당수의 자작농민층은 항상 유지되었다.

소농민경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소작민이었다. 지주제의 내부에 소농민경영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송대의 전호를 농노로 규정하는 연구도 있지만, 자유민으로 규정하는 연구가 좀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송대의 전호는 대부분 독립하여 농지를 경영하는 소농민이었다. 그러한 점은 원, 명대에도 기본적으로 같았다. 물론 지주가 官人이거나 사대부(혹은 紳士)로서 신분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고, 전호는 신분적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둘 사이에 경제외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면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관계는 대등한 입장에서 맺은 계약관계였다. 그러므로 지주제의 바탕에는 소농민경영이 자리잡고 있었고, 소농민경영이 지주제에 포섭된 형태로 존재하였다. 송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농업생산력은 이들 소농민의 자립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에 바탕하여 자작 소농민이나 차경소농민은 자기의 책임 아래 농지를 경영하고, 조세나 지대를 납부하였다.

소농민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화북과 장강삼각주 지역을 연구한 黃宗智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소농경제가 중심이 된 사회였다고

주장한다. 장강삼각주 지역은 관개농업이 지배적이었고, 1인당 곡물생산량도 더 많았으며, 고도로 상업화한 농업경제가 발달하였고, 토지소유의 집중도도 높았는데, 여성과 아동의 보조적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다층적인 노동력 구조를 가진 가정식 농장의 순수익이 경영식 농장보다 높았다고 한다. 그래서 지대와 소작료가 높은 곳에서는 경영식농장이 발달할 수 없었으며, 상품화와 도시화의 진척도 소농가정의 생산을 촉진시킨 반면 경영식농장의 쇠퇴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주요 요인은 중국 소농경제의 가장 큰 특징인 많은 인구였다.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는 단위로서 가정식농장은 최대이윤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생산을 하였기 때문에 생산성과 관계없이 총생산량을 중시하여 일정한 단위면적에 지속적으로 잉여 노동력을 투입하였고, 그 때문에 노동생산성은 점차 감소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중국 소농에서는 ‘Involution(內卷化, 過密化)’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³⁾

일본의 중국사 연구자들 가운데도 중국 농민농업문제 이해의 중심 기준을 자영농에 의한 소농경영, 정확히는 소경영생산양식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⁴⁾

인구문제를 생각할 때, 중국에서 가족문제와 농업경영의 家庭化는 소농의 생존노력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⁵⁾ 그러나 송대 이후 자영농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경제 선진지대인 강남지역에서 현저하게 발달한 지주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자영농에 의한 소농경영을 기본적인 생산관계로 설정한다면 당송변혁 이후의 비약적인 생산력 발달의 계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

② 고려와 조선전기의 소농민경영

고려와 조선시기 대농경영의 한쪽에는 역시 소농민경영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소농민경영이 토지소유와 농업경영에서 기본적인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전시과체제나 과전법체제에서 조세와 力役 부과와 기본 대상은 소경영농민이었고, 국가의 물질적 기반은 그들에게서 수취하는 조세와 공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농민경영은 시기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소농민경영의 대체

3) 본래 이 개념은 Clifford가 인도네시아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혁명 전 러시아 소농 경제를 분석한 Chayanov도 가족이 생산단위이나 소비단위이므로 농민들은 노동의 한계생산보다는 평균 순생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신들의 노동대가가 시장임금의 평균수준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노동집약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는데, 황종지는 이 주장을 수용하여 중국 소농을 설명하였다.

4) 中國史研究會 編, 『中國史像の再構成 : 國家と農民』 文理閣, 1983

5) 인구압력과 경지이용, 경작형태와 생산성을 등을 분석적으로 연구한 것으로는 Kang Chao, Man and Land in Chinese History : An Economic Analysi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6.

적 추세를 보면 다음과 같다.⁶⁾

고려전기 전시과가 제정되고 제대로 작동하던 시기에는 소농민의 토지 소유와 경영이 그런대로 잘 유지되었으나, 토지소유 규모가 영세한데다가 국가의 수취와 지배층의 수탈로 인하여 소농민경영은 불안정하였다. 후기 농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농민의 토지는 권세가에게 침탈되고 농민이 농장 노비로 전락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권세가의 토지점병은 양반전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였으나, 농민의 토지도 예외가 아니었다. 또한 분급받은 토지라 하더라도 경작자이자 실제 주인은 농민이었으므로, 권세가들이 수조권을 집적하는 와중에 농민은 여러 수조권자(田主)에게 전조를 납부해야 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농민 경작자는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권세가의 농장에 투탁하기도 하였다. 국가로부터 사패를 받은 경우에도 그 속에 농민의 토지를 포함시키는 불법을 자행하였다. 이 시기 소농민 경영은 자연히 크게 위축되었다.

조선은 다시 소농민을 국가의 사회경제적 기반으로 삼는 정책을 폈다. 소농민은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고 군역을 부담하여 재정과 국방을 떠받치는 지반이었으며, 국가에 예속된 존재였다. 과전법체제 초기 자영농의 비중은 농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고, 그 기준적인 토지규모는 1-2결 정도였다. 세조 4(1458)년 당시 토지가 없는 농민이 10분의 3이라고 하였으므로,⁷⁾ 대략 70%가 농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대토지 소유자(지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소농민이었을 것이다. 세종 18(1436)년 강원도의 토지소유 규모를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10결 이상 소유자는 15%, 6결 이상은 32.5%이고, 나머지 67.5%는 5결 이하의 소유자였던 데서 농지소유자의 대부분이 자영 소농민이었음을 알 수 있다.

自家경영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가족노동에 의하여 그것을 경영하는 자영농이 소규모 개별 경영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당시 소농민의 자립도는 낮았다. 생산력이 낮고 소유 규모가 영세한데다가 척박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확대재생산 기반을 축적하기는 어려웠고, 생계조차 불안정하였다. 그런 까닭에 소농민경영으로서 자립할 수 없었던 2호 정도의 小戶(狹戶)들이 보다 충실한 생산수단과 생산의 안정성을 가진 主戶에 예속되는 編戶의 경영 형태를 취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소농민은 소를 거의 갖지 못하였고, 부족한 농지를 보충하기 위해 간중법도 시행하였으나, 군역 부담, 조세 수탈, 지배층의 토지집적, 고리대, 흉년 등으

6) 김태영, 「조선전기 소농민경영의 추이」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8

7) 『세조실록』 권11, 세조 4년 정월 병자

로 인해 몰락 위험에 노출된 존재였다. 더욱이 세종 6년 토지매매가 허용되고 15세기 말-16세기로 접어들면서 권세가의 침탈이 가혹해지자 자영농은 토지를 상실하고 流散하거나 권세가에게 예속되는 佃戶로, 신분상으로는 노비로 전락하는 형세가 나타났다. 그 결과 1533년에는 “백성 가운데 전지를 가진 자가 없고, 전지를 가진 자는 오직 부상대고와 사족 가문일 뿐”이라고⁸⁾ 할 정도로 소농민은 몰락하였다. 토지를 집적하면서 지주로 성장한 전형적인 존재는 관인지주였다.

③ 장원공령제와 領國경제체제에서 소농의 성장

일본사에서 소농의 성립 시기에 관하여는 봉건제 성립과 관련하여, 헤이안 시대 말기(12세기)라는 견해, 중세초기(13세기)라는 견해, 그리고 근세초기인 17세기 초기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헤이안시대 말기 견해에서는(戶田芳實 등) 묘슈(名主)는 소농을 예속시킨 가부장제적 농노주이며, 묘슈에 예속되지 않은 소농은 봉건적 예속농민으로 본다. 이들이 묘슈에게 가지시를 납부함으로써 묘슈의 지주화가 진행되었다.

17세기 초 견해는 묘슈에게 종속되었던 비자유민이 성장하여 농노화함으로써 太閤檢地 이후에 봉건제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본격적인 소농의 성장은 이 시기 이후, 농업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장원공령제와 영국경제체제에서 활동한 묘슈를 가부장적 노예소유자로, 그에게 예속된 농민을 노예로 파악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소농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성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묘슈에게 가지시를 납부한 농민은 독립 가옥을 갖고 독립적으로 경영하였으므로 묘슈에게 인신적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며,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가졌다. 묘슈는 下人 등의 비자유민을 별도로 거느렸으며, 백성들에게서는 묘덴에 부과된 연공과 役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책임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자기몫으로 가지시를 수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묘슈의 가지시 수취는 지대 수취로 간주되었으며, 묘슈의 지주권은 상속되고 매매 양도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묘슈에게 가지시를 납부한 백성은 일종의 佃作 예속농민으로 볼 수 있다.

소농민의 지위는 촌락의 형성과 領國경제체제를 거치면서 점차 상승하였고, 소농민경영은 안정되어 갔다. 가마쿠라막부 말기 이후로 장원공령제와 묘덴이 쇠퇴하고 地頭와 守護가 장원공령의 지배에 개입하면서 토지에 대한 중층적 지배가 확산되자 백성들이 권력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지연적인 결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촌락이 형성되었다(惣村). 惣村의 주민은 지배계급인

8) 『중종실록』 권75, 중종 28년 7월 을묘

宮座의 대표들과 일반백성(地下人)으로 나뉘어졌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묘덴을 중심으로 한 지배체제가 쇠퇴하고 다수의 일반백성이 자립하였다. 그리하여 15세기 이후에는 소농이 주민자치체인 宮座에 참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소농들이 별도의 宮座를 구성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소농은 총촌의 구성원으로서 총촌 단위로 영주가 부과하는 연공(地下請)을 납부하였는데, 15세기 중기 이후로 영주 혹은 守護와 정치군사적으로 대립하여 惣村이나 惣村들이 연합하여 봉기하기도 하였다(一揆). 거의 매년 발생한 一揆은 막부 권력을 약화시켰다.

분산되어 있던 토지소유권이 戰國 다이묘에게 귀속되면서 大名領國이 성립하고, 領國경제 구조가 형성되었다. 다이묘의 所領은 점차 백성(농민)의 소유가 되었으며, 백성은 대영주에게 직속되었다. 장원영주의 토지와 인민 지배관계는 소멸하였고, 惣村의 자치권도 약화되었다. 그러나 촌락에서 소농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새로운 묘슈로 등장하는 자도 나타났으며, 농민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장원영주제하의 作職에서 소유권에 가까운 것으로 발전하였다. 大正 文祿 연간에 시행된 太閤檢地는 중층적인 토지 지배관계를 부정하고 토지 지배관계를 영주의 권리(領知)와 名請農民의 권리(所持)라는 양자관계로 정리함으로써 중세와 근세를 가르는 분수령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 顧菊英·周良霄, 『元史』 上海人民出版社, 2003
- 宮嶋博史, 「東アジア小農社會の形成」 『長期社會變動』 東京大學出版會, 1994
- 한국사연구회 편,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上』 지식산업사, 2008
- 김태영, 「조선전기 소농민경영의 추이」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8
- 潼澤武雄, 『日本の貨幣の歴史』 吉川弘文館, 平成 8년
- 大山喬平, 「莊園制」 『岩波講座 日本通史 7권 中世I』 岩波書店, 1993
- 리보중 지음, 이화승 옮김, 『중국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책세상, 2002
- 服部英雄, 『武士と莊園支配』 山川出版社, 2004
- 三浦圭一, 『日本中世の地域と社會』 思文閣出版, 1993
- 안병우, 「고려후기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농장」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1994
- 梁庚堯, 『南宋의 農村經濟』 聯經出版事業公司, 1984
- 오금성, 「明代 양자강 중류 三省地域의 사회변화와 紳士」 『대구사학』 30, 1986
- 오금성, 「중국 근세의 농업과 사회 변화」 『동양사학연구』 41, 1992
- 오금성 외,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
- 위은숙, 『고려후기의 농업경영』 혜안, 1998
- 이경식, 「16세기 장시의 성립과 그 기반」 『한국사연구』 57, 1987
- 이경식, 『한국중세토지제도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2011학년도 통계 동아시아사 교원 연수(대구)

- 이범학, 「송대의 사회와 경제」 『강좌중국사 III』 지식산업사, 1989
- 이영훈, 「조선 전기의 토지소유와 농업경영」 『한국사 7 : 중세사회의 발전』 한길사, 1994
- 이태진,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1994
- 이태진, 『의술과 인구 그리고 농업기술』 태학사, 2002
- 이호철, 『조선전기농업경제사』 한길사, 1986
- 일본역사교육자협의회편 송완범등 옮김, 『동아시아 역사와 일본』 도서출판동아시아, 2005.
- 全漢昇, 「略論宋代經濟的進步」 『中國經濟史研究(下)』 稻鄉出版社, 1991
- 佐佐木銀弥, 『莊園の商業』 吉川弘文館, 1964
- 中國史研究會 編, 『中國史像の再構成』 文理閣, 1983
- 황명수, 『일본경제사』 교학연구사, 1981
- 張家駒, 『兩宋經濟中心的南移』 湖北人民出版社, 1957
- 荻生茂博, 「日本에 있어서의 新儒敎의 수용과 小農社會의 성립」 『韓國實學研究』 5, 2003
- 한국고문서학회 엮음, 『동아시아 근세사회의 비교』 혜안, 2006
- 宮嶋博史, 「朝鮮農業史上における十五世紀」 『朝鮮史叢』 3, 1980
- 김용섭, 「前期 農書의 증보와 그 농업사상」 『조선후기농업사연구II』 일조각, 1974
- Huang, The Peasant Family and Rural Development in the Yanzi delta: 1350-1988,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長江三角洲的小農家庭與農村發展 1350-1988), 中華書局, 2002)

근세 일본의 전개와 동아시아

윤병남(서강대학교)

1. 일본사의 전개와 ‘근세’

일본사의 시대구분: 고대 - 중세 - 근세 - 근대 - 현대

근세(Early Modern Period) : 16세기 중엽 직풍(織豊)기 - 19세기 중엽(메이지 유신 전)
에도막부(江戶幕府) 성립

동아시아사에서 일본의 ‘근세’가 가지는 의의

- 1) 전시기에 비해 직접적인 관계나 교류는 제한적
- 2) “독자적 전통의 형성”기에 해당
관계와 교류에 더하여 비교의 관점 필요
- 3) “국민국가의 모색”기인 근대와의 관련성
일본의 근대적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서양의 충격’을 중심으로 한 외부적 요인의 강조
‘초기 근대’로서 근세의 일본의 근대적 변화에서의 역할
정치적 변혁을 주도하는 세력의 배출
일부 도자마번의 하급무사세력
근대적 변혁의 경제적 토대
전근대적 성장의 경험과 그 과실
번정개혁에 성공한 웅변의 대두
재정수익을 토대로 한 근대적 군제개혁
근대적 변혁의 사상적·정보적 토대
주자학과 준황사상을 토대로 한 막부권력의 상대화
대외적 시각의 변화를 촉발한 정보와 지식의 통로 보유

2. 막번체제(幕藩體制)의 성립

무가지배사회: 무사가 지배계급이고 군사적 성격이 강한 국가지배체제 형성

막부와 번(藩)의 권력 분점 - 막번체제(幕藩體制, 바쿠한 타이세이)

- 1) 幕府(바쿠후) + 藩(한) (大名領國) -->幕藩(바쿠한)
- 2) 封建制
 - (1) 지방분권적 정치제도: 王(중앙)과 封建領主(지방)
일본의 경우 “집권적 봉건제” (centralized feudalism)
 - (2) 사회, 경제적 구조
고쿠다카(石高)제: 모든 토지(전, 답, 택지)를 미곡의 생산력으로 표시함
생산력 파악의 효율성과 지배력의 향상

수입 및 부담(세금)의 기준

檢地(토지조사)의 필요성

兵農分離: 무사계급을 자신의 근거지에서 벗어나서 성하정(城下町)에 집중하도록 하여 다이묘의 가신단에 대한 장악력 증대를 꾀함

백성들의 자치공간으로서 무라(村)의 등장

農商分離: 농업지역인 무라와 상업지역인 마치(町)의 구분

농민의 농촌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함

신분제: 士農工商의 구분

무사계급의 가격제(家格制): 무사 신분내에서도 신분적 구분 존재

가격에 따른 수입과 역직의 차이 존재

하급무사들의 불만

3) 용어의 변천

일본적 봉건제: 세계사의 보편성 강조

幕藩體制: 일본적 특성의 강조

幕藩國家: 1970년대 국가론의 대두와 천황과 공가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배경으로 대두. 무가관위제 등 근세의 권위체제에서 천황의 역할 인정

4) 통일정권기(織田, 豊臣) + 江戸(徳川)時代 --> 近世(킨세이)

5) 江戸幕府(에도 바쿠후): 중앙정부 + 직할령(텐료)을 보유한 번적 성격

고도로 조직화된 관료기구 보유

복수 또는 다수가 동일한 관직을 보유 - 합의제, 당번제

막부의 군사력: 직할 가신단 + 동원된 다이묘군사력

6) 藩政과 幕藩관계

(1) 藩(大名領國)의 종류(막부와외의 친소관계)

親藩(심판), 譜代(후다이), 外樣(토자마)

후다이 다이묘의 막정참여 - 막부의 고위직을 차지하여 영주와 관료로서 이중적 역할 수행

(2) 藩의 지배영역: 에도저택, 거성과 城下町, 농촌지역

(3) 幕府의 大名통제: 領地의 처분(재승인, 몰수, 삭감, 이동, 창출)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將軍이 보유

제반 제도·법령의 의한 규제

一國一城領: 만일의 사태에 대비

武家諸法度: 대명통제의 원칙 천명, 다이묘 간의 결당 금지가 주된 포인트

軍役: 유사시의 군사동원

御手傳普請: 막부의 성곽축성, 하천보수 등의 노력 동원

參勤交代制(산킨코오타이): 다이묘가 격년으로 에도의 저택에 머물러야 하는 제도

3. '경제사회'의 성립과 발전

*근세의 경제적 변화를 보는 두 가지 시각 - 근세의 농민을 보는 관점의 차이

유물사관의 관점: 대기근에서의 대량 아사, 빈발하는 농민의 저항

근대경제학적 관점: 경제성장의 증거들에 대한 적극적 평가

농민의 경제성장, 상품작물의 재배와 유통에서의 주도적 역할
18세기 일본의 인구정체를 농민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로 봄
비교적 상세한 경제·인구관련 사료의 존재

*거대시장의 등장, 화폐경제 및 신용경제의 발전을 토대로 한 경제의 순환구조 형성

*원산업화(Protoindustrialization) 단계로서 근세의 경제 발전

근대적 성장의 토대로서의 전근대의 경제성장 (Premodern economic growth)

*도쿠가와 지배체제의 확립에 따른 평화의 시대(*pax Tokugawa*) 도래

경제발전과 전쟁의 관계: 일본의 전국시대

*원리적으로 무가지배의 사회였으나 지속된 평화로 인해 이러한 사회적 원리가 일상의 삶속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갔다고 볼 수 있음.

무사계급 내부에서의 변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역학관계의 변화

1) 농업생산력의 획기적 증대

쌀생산의 확대, 新田개발의 확대, 생산기술의 발전

상업작물 생산의 확대

농민수입의 증대: 정면제(定免制)에 의한 잉여생산분의 확보

2) 상업·수공업의 발전

어용상인

도매업자

동업조합

3) 광산업의 발전

은, 구리광산이 중심

막부의 직할광산과 번운영광산

화폐제도와 대외무역의 토대

번에게는 막대한 현금수입의 기회 제공

4) 화폐제도와 금융제도의 정비

막부화폐(금화, 은화, 동전)의 주조

金座, 銀座, 銅座

세 화폐의 교환비율의 변동과 화폐교환상(兩替屋)의 대두

신용제도의 성립

금융대부업의 발전

막부와 번이 상인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차입

5) 중앙시장의 출현과 전국적 유통망의 확립

大阪: 쌀시장, 주요 제품의 공급지

京都: 수공업 중심지

江戸: 거대 소비도시

지방 유통의 거점으로서의 성하정

參勤交代制(산킨코오타이)의 경제적 역할

거대소비도시 에도의 출현

- 다이묘의 화폐수요 증대
 - 국산품(國產品)의 중앙시장 판매와 화폐획득
 - 여행경비 지출의 증대
 - 번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6) 교통의 발달
 - 5街道의 정비와 세키쇼(關所)의 설치
 - 參勤交代制(산킨코오타이)에 필수적임
 - 물자 수송로로서 해운로선의 성립
 - 飛脚제도 - 통신·택배제도
 - 오카게마이리(이세신궁참배) 등 서민의 여행의 활성화에도 기여
- 7) 해외무역의 발전
 - 수입품(생사, 인삼 등) 확보의 필요성
 - 귀금속(금, 은 등)의 수출
 - 국내경제에서 해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매우 큼
 - 주요 상품(생사, 비단, 인삼 등)의 유입 경로
 - 유통화폐의 대량 유출과 그에 따른 화폐부족사태 초래
 - 막부의 수입 축소 노력과 화폐의 빈번한 개주(저품위 화폐의 주조)
 - 18세기 중엽의 수입대체의 실현과 해외무역의 쇠퇴
- 8) 조닌(町人) 계급의 성장
 - 商人+職人
 - 병상분리에 의해 상인에 의한 상업적 이익의 독점
 - 농업소득의 정체와 상업소득의 비약적 증대 - 병상의 경제적 차이 초래
 - 무사계급의 소비지출의 증대 - 재정의 만성적자
 - 막부에서 개별 무사에 이르기까지 무사계급의 채무자화
 -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증대
 - *동시대 한국·중국의 지배계급의 경제력과의 차이
- 9) 경제전문가의 출세기회 증대
 - 막부와 번이 만성적 재정적자에 직면하여 관련 전문가 등용의 필요성 증대
 - 막부: 직제의 분업화(노중, 감정봉행), 특별승진을 위한 족고(足高)제
 - 번: 재정전문가의 영향력 증대

4. 대외관계의 재편 - 江戸幕府는 鎖國정책을 실시했는가?

- 1) 幕藩체제와 '鎖國'의 대외관계
 - 근세의 대외관계에 대한 재평가
 - 동아시아적 시각과 '海禁論'의 등장
 - 동시대의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대외정책과의 비교적 관점
 - 명·청기 중국의 '해금'
 - 조선의 '해금'과 공도(空島)정책
- 2) 근세일본의 대외관계
 - 通信의 國: 朝鮮, 琉球

通商의 國: 중국, 네덜란드 (아이누)

대외관계에서의 번의 주도적 역할

대마(對馬)번: 조선관계

살마(薩摩)번: 유구관계

송전(松前)번: 아이누관계

3) 16세기 대외관계와의 비교

일본인의 해외도항금지

주인선(朱印船) 무역의 금지와 일본정(日本町)의 쇠퇴

카톨릭 금령과 박해 - 宗門改, 寺請제도

무역상대의 축소

포르투갈인의 추방과 무역상대로서 네덜란드인의 선택

나가사키의 데지마

왜 幕府는 서양세력과의 무역관계의 유지를 원했는가?

4) 해외정보의 통로로서의 대외관계

외국상인에 대한 정보보고서 제출 요구 - 風說書

네덜란드 상관이 있던 나가사키를 통한 서양 과학기술의 도입 - 蘭學

5. 서민문화의 성립과 발전

경제적·사회적 변화 속에서 지배계급의 문화적 참여에 더하여 피지배계급이 문화의 발전에 서도 주요한 역할 수행

1) 겐로쿠(元祿) 문화

겐로쿠 시기(1688-1703)에 막번체제의 안정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토대로 함학문, 문화의 새로운 경향으로 무사와 町人(호상)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

上方(오사카, 교토)지역이 중심이 됨

현실적 경향이 강하고 합리주의적 탐구를 지향하고 현세공정의 풍조를 떨

문학에서 자유로운 인간성을 추구한 작품이 다수 등장

미술에서 화려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추구한 작품이 많음

다양한 공예품: 염색, 마키에(칠기), 도자기, 조각 등

대표적인 장르: 산문(소설), 각본, 가부키, 인형조루리, 우키요에 등

대표적인 인물: 이하라 사이카쿠, 치카마츠 문자에몬, 히시카와 모로노부 등

2) 카세이(化政) 문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발생한 문화

에도 중심, 정인이 주도적 역할 수행

문화의 서민화와 지방화가 빠르게 진행됨

서민을 독자로 한 출판업의 등장

대본업소의 등장

서민들 사이에서 고전 읽기 유행

소설 및 회화의 상업적 출판의 확대

목판 및 다색도 판화 기술의 도입과 발전

비판정신의 고양과 퇴폐적 경향이 동시에 나타남

대표적 장르: 소설(유행작가의 등장), 회화 (우키요에)

대표적 인물: 산토 교덴, 짓펜샤 잇큐, 시키테이 산바, 다키가와 바킨 등

스즈키 하루노부, 키타가와 우타마로, 도슈사이 샤라쿠, 안도 히로시게

3) 서민문화 발전의 토대로서의 근세의 ‘문자사회’

병농분리정책이 문자사회의 성립을 촉진함

무사의 성하정 집주와 그에 따른 촌인의 식자능력의 필요성 증대

정책 수립기에 식자능력자의 존재 필요

촌(무라)의 자치는 문필에 밝은 다수의 촌인을 필요로 함

농업경영의 유지를 위해서도 농서를 읽는 식자능력은 필수였음

테라코야(寺子屋)로 불리는 사립의 서당이 전국에 걸쳐 다수 존재

교육하는 것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전문직이 등장

산수와 주판의 학습도 이루어짐

상당히 높은 문자해득률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임

전국에 걸쳐 상급교육기관으로서 사숙(私塾)이 등장하여 호학의 젊은이들을 끌어

모음 -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며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였음

6. 변혁의 기운과 명치유신에 이르는 길 - 내우외환과 위기의식의 고양

1. 대내적 위기

빈발하는 흉작과 기근 - 전국에 걸친 백성의 저항(一揆)

도시하층민의 생활의 불안정성 - 도시민의 우치코와시

2. 외세의 압력 증대와 대외위기의 고양

서양제국의 문호개방 요구

북: 러시아, 남: 영국, 미국

아편전쟁 소식의 전파와 일본의 위기의식의 고조

3. 幕藩體制의 균열: 幕藩의 이해대립

武士계급의 곤궁화 --> 상인층의 부의 증대

농민一揆의 격화

大鹽平八郎의 난 (1837) - ‘구민’의 기치를 내걸

4. 사상적 변화

존황사상의 대두: 幕府비판과 天皇중심론, 국수주의와 海防論, 水戶學派

吉田松陰 - 극단적 존왕론

개혁파 - 佐久間象山 (1811-1864) 개국론을 설파

5. 막부의 개혁시도 - 천보(天保)개혁(1841-43)

老中 水野忠邦이 주도한 막부중심의 복고주의적 개혁

사치풍조 억제와 사풍의 진작, 풍속의 규제, 棄捐令, 물가인하령

株仲間の 해산, 농촌부흥책, 人返令, 江戸, 大阪 주변의 上知令(1843)

다이묘와 기본층을 비롯한 각층의 불만

水野의 실각과 개혁의 실패

6. 번정(藩政)개혁과 옹번(雄藩)의 대두
 - 1) 번정개혁: 熊本(細川), 米澤(上杉), 秋田(佐竹)
검약, 新田개발, 國産品장려, 재정개혁, 藩校
 - 2) 옹번(雄藩)의 개혁
長州藩: 村田清風, 藩債정리, 재정재건
薩摩藩: 調所廣郷, 藩債정리, 설탕의 전매제, 琉球무역
유능한 인재의 등용, 재정재건, 洋式軍備의 도입
7. 開國과 불평등 조약
 - 페리함대의 내항과 개국 요구(1853. 6, 1854. 2)
 - 美日和親條約 (1854. 3)
 - 美日修好通商條約 (1858. 6)
 - 막부에 대한 비판의 고조: 천황의 유희 문제
 - 비판에 대한 막부의 강경책 - 안정대옥(1858)
8. 尊王攘夷운동의 격화와 막말의 동란
 - 天皇의 대두
 - 존왕과 志士의 등장
 - 과격행동: 幕府 지도자 및 외국인에 대한 테러
 - 외국군대의 보복: 가고시마 포격, 시모노세키 포격
 - 攘夷論의 유지 또는 포기
 - 어떻게 위기를 타개할 것인가?
 - 公武合體
 - 討幕
 - 長州藩·薩摩藩의 주도적 역할
 - 무진(戊辰)전쟁과 신정부의 발족(명치유신) 1868-9
 - 신정부군의 에도성 무혈입성(1868. 4)
 - 판적봉환(1869. 6)
 - 폐번치현(1871. 7)

일본의 불교

이근우(부경대학교)

1. 일본불교의 특색

1) 외래종교로서의 불교

우리와 마찬가지로 불교란 일본사회의 입장에서 보아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종교였다. 그것도 발생지인 인도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중국에서 중국적인 변용을 거친 불교 즉 중국불교를 수용하였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것은 후한 명제 때인 67년이라고 하지만, 기원 전후한 시기에는 이미 서역으로부터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해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처음에는 일부 귀족이나 지식계층 사이에 보급되었으나, 후한말부터 위·서진시대에 이르러, 인도 및 서역에서 건너온 승려들이 불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특히 후한이 멸망한 후에 오호십육국시대(五胡十六國時代)에 들면서 불교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다. 후조(後趙)의 석호(石虎, 재위 334-349)는 불도징(佛圖澄)의 감화를 받아 불교를 신봉하게 되었으며, 335년에는 한족의 출가를 용인하였다. 이를 계기로 비로소 한족에 의한 불교 교단이 성립되었다. 오(吳)의 지겸(支謙), 서진(西晉)의 축법호(竺法護) 등을 비롯하여 서역에서 온 구마라십(鳩摩羅什) 등이 많은 경전을 번역하여 중국불교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6세기에는 달마(達磨)가 선종을 전해, 임제종(臨濟宗)과 조동종(曹洞宗)의 양대 유파가 생기게 되었다. 수(隋)에 들어서 지의(智顓)가 『법화경(法華經)』을 근본경전으로 삼아 천태종(天台宗)을 열었으며, 길장(吉藏)이 삼론종(三論宗)을 대성하였다. 당대에는 정토종(淨土宗)·법상종(法相宗)·화엄종(華嚴宗)·진언종(眞言宗) 등이 성립하여 중국불교의 황금시대를 맞았으나, 회창(會昌)의 법난(法難, 842)을 계기로 점차 중국불교는 쇠퇴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불교는 중국문화와 타협한 결과, 여러 가지로 원래의 인도불교와는 다른 특징을 갖게 되었다. 먼저 중국을 지배하게 된 북방민족들이 한민족(漢民族)의 유교(儒教)를 대신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채택한 것이 불교였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구제보다는 국가의 진호(鎮護)를 목적으로 한 호국불교

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조영된 대형불상들이 당시의 지배자의 얼굴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사실은 그러한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또,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로 쓰여진 경전들을 표의문자인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복잡한 개념어로 사용된 불교교리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그런 문제들이 적잖이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불교 경전들이 인도에서 성립된 시기와 관련없이 모두 석가가 설법한 내용으로서 유입되어 번역된 결과, 이들 경전을 어떻게 하면 모순없이 배열하여 그 내용들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 하는 작업 즉 교상판석(敎相判釋)이 커다란 문제였으며, 이러한 교판(敎判)을 기반으로 하여 각 종(宗)이 성립되었다. 그 이외에도 중국적인 사회현실에 적응하기 위하여 원래 인도에는 없었던 새로운 경전들을 만들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원래 불교에서는 중시되지 않았던 효(孝)에 관해서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을 만들어 불교에도 효라는 관념이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 나아가서는 이미 중국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유교적인 장례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하였다. 이런 중국불교의 특징이 이후 일본불교에도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다.

한편 불교가 외래종교일 뿐만 아니라, 일본어와 언어체계가 크게 다른 한자로 번역된 경전에 의거하여 불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교가 갖는 원래 모습이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불교 경전이 방대하기도 하고, 또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류도 있었기 때문에 경전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뛰어난 학승들이나 일부 승려를 제외하고는 불경에 근거하여 불교교리를 연구하기보다는, 주술이나 장례의례 등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인 측면에 대부분의 승려들이 치중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또 한자로 된 불경을 일본어로 번역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또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정확한 교리가 일반대중에게 전달되지 못하였으며, 결국 현재까지도 불교와 신도, 유교 등이 각 개인이나 가정 속에서 혼재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남의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가 일본열도에서는 토착적인 원시신앙과 마찬가지로 보다 효험이 있는 새로운 주술로서 받아들여졌다. 원래의 교리를 무시하고 시대적인 상황이나 민간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한 여러 가지 종파들도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불교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불교가 외래종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2) 국가불교

불교가 발생할 당시에는 인도의 민중 사이에서 먼저 퍼져나갔으며, 교리 자체도 민중의 구원을 우선하였다. 그러나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이를 먼저 받아들인 사람은 중국 사회의 지배자층이었다. 지배자들에게 불교의 교리보다도 주술력이 의미가 있었으며, 불교건축·불상 등은 신앙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배를 합리화하거나 화려하게 장식하는 수단으로도 인식하였다. 지배자를 부처와 동일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황제를 재림한 부처로 여기기도 하였고, 불상의 얼굴을 현실적인 지배자의 얼굴을 본따서 만들기도 하였다. 한편 황제·귀족·평민·노예 등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엄격한 현실적인 차별과 그에 따른 고통도, 불교 교리에 따라 자신의 공덕과 업보에서 비롯된 것(因果應報)으로 설명하여, 차별받고 있는 인간들이 그러한 차별과 불평등을 참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輪回說). 즉 중국과 한국 일본에 처음 수용된 불교는 지배자를 위한 불교였던 것이다. 이러한 불교를 흔히 호국불교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호국불교라는 용어는 ‘진호국가(鎭護國家)’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때의 국가란 현재와 같이 국민을 포괄하는 국민국가가 아니라, 지배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으로 여기는 ‘국가’였다. 그러므로 ‘진호국가’란 지배자의 개인적인 재산인 사직(社稷)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킨다는 의미였던 것이다. 그 외부의 위협은 다른 국가인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백성들도 그 속에 포함되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배자가 인식하고 있는 불교는 백성들을 위압하고 복종시킬 수 있는 수단이었던 셈이다. 거대한 사찰과 화려한 불상을 건립한 목적은, 중세 유럽의 성당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백성에게 경외감을 심어주어, 사찰을 건설한 주체인 지배자에게 감히 항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교사원은 당시 중국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로, 우선 높은 기단을 쌓고 그 위에 초석을 놓은 다음 굵은 나무로 기둥을 세웠다. 다시 그 위에는 지붕을 바치기 위한 구조물을 복잡하게 얹은 다음 마지막으로 흙으로 구운 기와를 올렸다. 이러한 사원은 건물의 규모가 일단 일본의 지배층들이 살던 굴립주건물¹⁾보다도 월등히 클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반 지하식의 수혈 주거지에 살던 일반인들로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이 구조물이었다. 기둥에도 붉은 색을 칠하였고 신비한 느낌을 주었고, 기와지붕은 햇빛을 받아 빛을 발하였을 것이다. 기와들도 쓰이는 장소에 따라서 연꽃무늬나

1) 掘立株建物. 땅에 구덩이를 파고 직접 기둥을 묻는 형식의 건물. 지붕은 주로 노송나무의 껍질로 덮었다. 초석이 없기 때문에 큰 건물을 짓기가 어렵고 또 기둥이 빨리 썩어 내구연한이 짧았다. 현재에도 신사건물 등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도깨비얼굴 등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사람의 마음을 압도하는 건물 안에는 다시 청동이나 나무로 만든 불상이 안치되었는데, 종종 금박을 입힌 경우도 있었다. 불상의 얼굴도 역시 그들이 지금까지 접한 적이 없는 이국적인 것이었다. 또한 불교의 승려들은 머리를 삭발한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심리적인 동요를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동요는, 전혀 새로운 건축물과 이국적인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국가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의 고대불교도 지배계층 내부에서는 정신적인 위안과 구원을 목적으로 한 종교로서, 혹은 보다 강력한 주술력을 가진 새로운 신에 대한 믿음으로서 기능하였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설명하는 논리이자, 지배자의 권위와 힘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장치였다. 고대의 인간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차별보다도 더욱 극단적인 차별에 직면해 있었다. 천황을 정점으로 하고 중앙과 지방호족들이 사회의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그 아래 농민이나 해민(海民)²⁾, 산민(山民)³⁾들이 있었고, 다시 천민(賤民)⁴⁾들이 있었다. 신분이 고정되어 있는 고대에서 특히 천인들은 가혹한 노동과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현실 속에서 지배층이나 일반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실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불교에는 천인들의 차별을 설명해주는 논리가 들어있다. 즉 현실에서 천인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서 지은 죄에 대한 업보라는 것이다. 즉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라서 천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이 전생에 지은 죄를 심판 받은 결과이며, 그것은 결국은 천인 개개인의 책임인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쌓은 공덕에 따라 내세에는 더 낮게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짐승이나 아귀 심지어는 지옥에 태어날 수 있다고 불교는 가르친다. 그렇게 되면 현실에 차별받고 있는 인간들도 일단은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덕행을 쌓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결국 불교는 고대 사회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차별을 모두 개개인의 잘못으로 돌려, 그들이 사회체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체제안정의 논리를 갖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일본에서 전해진 불교란 도입단계에서는 새로운 주술이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2) 바다를 무대로 어업 제염 운송 상업 등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가르킨다. 고대 중세에는 천황이나 섭관가 신사 등이 이들에게 특권적인 어업권 해상통행권을 부여하는 대신, 각종 해산물을 바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3) 산을 무대로 벌목 채광 수렵 목기제작 솥굽기 등을 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화전민들을 포함하는 말.

4) 고대에는 공사(公私) 노비를 비롯하여 능호(陵戶) 관호(官戶) 가인(家人)을 지칭하였는데, 같은 신분 사이의 혼인만 허용되었으며, 양인과는 결혼할 수 없었다. 중세에는 장례 등 일반사람들이 꺼리는 일을 맡아 처리하는 비인(非人)들이 가장 낮은 신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승려들도 민간에 불교를 전파하는 일보다 지배자들이 필요로 하는 종교의례를 집행하는 일을 주로 하였으므로 지배층과 유착될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지배자층이나 귀족층 출신들이 승려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의 불교는 처음부터 지배자층과 유착되어 발달하였기 때문에, 많은 변천을 거친 현재에도 그러한 성격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배자·권력자·부유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그 보호를 받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에도 진언종은 일본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천황의 의복을 빌려 해마다 천황의 건강과 국가의 평안을 위한 종교의례를 거행하고 있다.

3) 주술적인 성격

고대의 일본인들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인 행복이나 불행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산이나 강 숲이나 나무 등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령들이 무수히 존재하고 있으며, 조상의 혼령이나 죽은 자의 영혼도 인간의 행불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정령을 카미(神)라고 불렀으며, 카미의 음덕을 입기 위해서 혹은 카미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의례가 필요하였으며, 새롭게 수입된 불교의 종교의례는 토착신앙에 따른 의례보다 탁월한 효험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불교의 주술은 현재 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도의 주술은 신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하거나, 풍년을 기원하거나, 새로운 건물이나 배를 만들었을 때 안전을 기원하는 등 재해의 예방에 주로 동원되는 데 대하여, 불교의 주술은 이미 발생한 재해 예를 들어 질병의 치료나 기우제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종교나 주술에 대해서 관대한 불교의 성격 때문에, 우주 자체가 부처라고 하는 범신론적이며 주술적인 밀교(密敎)가 성립되었고, 일본에 도입된 밀교는 불교적인 특질을 상실하고 주술적인 측면만이 강조되기도 하였다. 헤이안시대 이래 천태종(天台宗)과 진언종(眞言宗) 내부에 수용된 밀교는 조정이나 귀족들을 비롯하여 일반인들의 주술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련종(日蓮宗)의 경우도 무로마찌 장군가의 주술기도에 응하였으며, 선종계 사원도 무사들을 위한 기도를 행하는 기도소로서 기능하였다.

불교의 주술로서 일본에서 널리 유행한 것은 호마(護摩)⁵⁾로 주로 부동명왕

5) homa. 산스크리트어로 불 속에 물건을 넣어 태워서 공양한다는 소시(燒施)를 뜻한다. 오탁이나 향유 꽃을 불에 넣어 태우면 불의 정령이 신에게 날라준다는 의미에서 바라문교에서 행하던 불의 의식을 밀교가 도입한 것이다. 제액초복을 위한 기도행위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방법으로 쓰였다. 부동명왕을 중심으로 하여 5명왕을 모셔놓고 5명의 승려가 각각의 본존에게 공양을 하는 이른바 오단법(五壇法)은 원래 천황만 주재할 수 있었다. 『자식부일기(紫式部日記)』나 『영화물어(榮華物語)』 등에도 안산(安産)을 위해서 호마를 행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不動明王)을 모시고 화려한 주술을 행하였다. 또 아이들을 잡아먹다가 부처의 감화를 받은 귀신으로 전하는 귀자모신(鬼子母神)도 자식을 점지하는 신으로 널리 신앙되었다. ‘나무아미타불’·‘나무관세음보살’이나 ‘나무묘법연화경’과 같은 주문도 주술적인 효과를 가진 것으로 믿어 민간에서 널리 암송되었다. 이처럼 결국 일본에서 불교는 토착신앙인 신도와 더불어 또 하나의 주술로서 크게 유행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4) 장례의례의 발달

일본문화 속에서 죽음이 갖는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불교 속의 장례의례는 주목할 만하다. 일본인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산 사람에 대하여 해를 끼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죽은 자의 영혼이나 그 주위를 맴도는 악령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특별한 출구를 만들거나, 출관(出棺)한 직후에 빗자루로 방을 쓸거나, 멀리 돌아서 묘지로 가거나, 소금을 뿌리는 의식을 행한다. 죽은 자에 대해서 특별히 음식물을 바치는 것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뒤통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특히 부자연스러운 죽음 예를 들어 살해, 자살, 사고 등으로 죽은 자의 영혼은 원령(怨靈)⁶⁾이 된다고 믿었으며, 원령은 커다란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여겼다. 대표적인 원령으로는 스가와라노미찌자네(菅原道眞)⁷⁾의 원령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원령을 달래기 위해서는 특별한 종교의례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편으로는 죽은 자를 추모하는 의식도 강하다. 죽은 자의 영혼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저 세상에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고, ‘카미’가 되고 ‘조령(祖靈)’이 되며, 조령은 가문이나 마을을 수호신으로서 자손의 행복이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또 조상의 영혼은 정해진 때 후손의 집을 찾아온다고 믿었다. 그 시기의 하나로 여겨지는 오분(お盆)도, 인도의 통속신앙이 불교와 함께 중국에 전해져서 일단 중국적인 변용을 거친 다음, 다시 일본으로 전

6) 나라시대부터 원령(怨靈)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난다. 반란을 일으켰다가 패사한 후지와라노히로쓰구(藤原廣嗣)를 비롯하여, 정쟁으로 희생된 이노우에내친왕(井上内親王)과 그 아들 사라라친왕(早良親王), 스가와라노미찌자네(菅原道眞) 등이 대표적이다. 교오토의 어령신사(御靈神社)나 북야신사(北野神社) 등은 어령신앙에 입각하여 원령들을 달래기 위해서 지은 신사들이다. 원령신앙은 일본인들의 사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7) 845-903. 헤이안시대 전기의 문인이자 공경(公卿)으로, 우다(宇多) 다이고(醍醐) 천황의 신임을 받아, 우대신(右大臣)의 지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901년 후지와라노토키히라(藤原時平)의 모략으로 큐우슈우로 좌천되었다가 거기서 죽었다. 이후 조정에 재역이 끊이지 않자, 그의 원령(怨靈)이 저주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의 영혼을 진정시키는 의례를 치르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이 나중에 어령신앙(御靈信仰)으로 연결된다. 그는 천만천신(天滿天神), 학문의 신, 문화의 신으로 추앙되었으며, 현재는 천만궁(天滿宮)의 본산인 큐우슈우의 대재부(大宰府) 천만궁에 모셔져있다.

해져서 일본의 고유한 관습과 융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죽은 자에 대한 장례의례나 추모의례는 집안의 권세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행해졌다.

이처럼 죽은 자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념을 매개로 하여 불교와 민간의 장례의례가 결합하게 되었다. 원래 불교의 장례의례는 극히 간소한 것이었으나, 일본 불교에서는 화려하고 복잡한 의례로 발전하게 된다. 사후에 죽은 영혼에 대한 공양으로는 49일, 100일, 1주기, 3주기, 13주기, 33주기 등에 행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양은 대개가 일본에 만들어진 의례로서 한꺼번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점차 수가 늘어나 카마쿠라시대 말에 대체로 현재와 같이 정해졌다고 한다.

그 중에서 죽은 지 49일이 되는 날 행하는 칠칠재(七七齋)는, 인간이 죽은 후 그 다음 세상으로 태어날 때까지 중간적인 상태(中有 혹은 中陰이라고 함)로 있게 되는데, 그 기간 중에 특별한 의례를 베풀어 더 나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5) 세속화

일본불교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불교 교단이 신앙과 교리를 중심으로 한 순수한 종교단체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세속적인 권력집단으로 변모하였다는 점이다. 주로 종파를 단위로 하여, 자신들의 세속적인 지분을 확보하거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여 기존의 종파와 다투거나 새롭게 생겨난 종파를 박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또 무사의 등장과 더불어 일본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권력이 없어지게 되자, 불교교단도 봉건세력의 하나로서 무력투쟁에 가담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의하여 사원의 무장해제가 달성된 1585년까지 지속되었다.

또 새로운 종파의 교리 속에는 종종 다른 종파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내용이 보이는데, 그런 내용들은 더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교세의 확장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가 없지 않다. 예를 들어,

그러한 대표적인 사원세력으로는 히에이산(比叡山)⁸⁾의 연력사(延曆寺), 미이(三井)의 원성사(園城寺)⁹⁾, 나라(奈良)의 흥복사(興福寺)¹⁰⁾ 등을 들 수 있으

8) 교토시와 시가현(慈賀縣) 사이에 있는 848m의 산. 에이잔(叡山) 혹은 호쿠레이(北嶺)이라고도 한다. 천태종의 총본산인 연력사(延曆寺)가 정상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옛날부터 산악신앙(山岳信仰)의 대상이 되었다. 헤이안시대에 사이쇼오(最澄)이 입산하여 천태종을 열었으며, 822년에 대승계단(大乘戒壇)을 만들었으며, 823년에 당시의 연호인 연력(延曆)을 딴 연력사라는 액호(額號)를 받았다. 연력사는 황족과 귀족들의 신앙을 모아 광대한 영지를 소유한 권문사원(權門寺院)으로 성장하여, 헤이안시대 후기에는 강소(強訴)를 하는 등 세력을 떨쳐 산법사(山法師)라고 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1571년에 오다 노부나가 절 전체를 불태워 그 세력을 진압하였다.

며, 봉건세력으로까지 성장한 예로는 정토진종(淨土眞宗)의 일향일규(一向一揆)¹¹⁾를 들 수 있다. 또 무사세력이 사원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원세력을 동원하여 전쟁을 벌인 경우도 있었다. 1532년에 호소카와 하루모토(細川晴元)은 일련종(日蓮宗) 신도들을 동원하여 일향종(一向宗) 신도들과 싸웠으며, 1536년에는 연력사의 승도들이 교토에서 일련종 신도들과 싸움을 벌여 그들을 내쫓는 과정에서 교토 시가지의 1/3이 불타기도 하였다.

2. 일본불교의 전개

6세기 중엽에 백제로부터 공식적으로 불교가 전해졌다. 불교 수용 문제를 둘러싸고 조정 내부의 갈등이 있었으나, 소아씨가 주도하는 형태로 일단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후 요오메이천황(用明天皇)의 아들이었던 쇼오토쿠태자(聖德太子)는 불교흥성에 힘을 기울여, 『법화경』 등 세 가지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저술하고(三經義疏), 또 법륜사 사천왕사 등 많은 사원을 건립한 것으로 전한다. 나라시대에는 동대사를 비롯하여 각국에 국분사(國分寺)가 건립되었고, 남도육종(南都六宗)이라고 하여 불교교리에 대한 연구가 성행하였다. 남도육종이란 삼론종, 법상종, 성실종, 구사종, 화엄종 율종을 가르치며, 이 시대에는 아직 교단을 형성한 것이라 아니라 교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아스카시대부터 나라시대까지는 진호국가를 목적으로 한 학문불교적인 색채가 진하였지만 헤이안시대가 되면 사이쇼오(最澄)이나 쿠우카이(空海)에 의하여 당에서 천태종과 진언종이 전해져서 히에이산(比叡山) 연력사(延曆寺, 엔랴쿠지)와 고야산(高野山)의 금강봉사(金剛峰寺, 곤고오) 등이 세워졌다.

카마쿠라시대가 되면 불교가 일반 민중 사이에도 널리 보급된다. 헤이안시대 말기로부터 말법사상(末法思想)이 유행하면서 정토사상이 급속하게 보급되었고 겐신(源信)이나 호오넨(法然)에 의한 ‘염불(念佛)’이 무사와 서민 사이에 유행하였다. 카마쿠라시대에는 신란(親鸞)도오겐(道元) 에이사이(榮西), 니찌렌

9) 운쵸오지. 미이데라(三井寺)라고도 한다. 사가현(慈賀縣) 오오쓰시(大津市)에 있는 천태종 사문파(寺門派)의 총본산으로 859년에 엔젠(圓珍)이 연력사 별원(別院)으로 삼았다. 993에 엔닌(圓仁) 문도와 엔젠 문도의 대립으로 연력사로부터 분리되면서, 연력사를 산문(山門) 원성사를 사문(寺門)으로 부르게 되었고, 이후 양자의 대립이 계속되었다.

10) 코오호쿠지. 나라시(奈良市)에 있는 법상종(法相宗)의 총본산으로, 720년에 후지와라씨(藤原氏)의 씨사(氏寺)로 건립되었다. 후지와라씨의 정치적인 성장과 더불어 세력을 크게 확장하여, 연력사와 더불어 대표적인 권문사원이 되었다.

11) 잇코오잇키. 센코쿠시대(戰國時代)에 정토진종(일향종)의 문도를 주체로 한 종교전투집단. 정토진종 본원사파는 렌뇨(蓮如) 때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사원을 중심으로 하여 토호무사와 상인 농민들을 규합하였다. 본원사를 중심으로 잇키는 100여 년에 걸쳐서 본원사의 가르침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사세력과 항쟁하였다.

(日蓮) 등 각 종파의 개창자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불교 즉 카마쿠라 신불교(新佛敎)가 성립되었다.

무로마찌시대가 되면 불교가 확실하게 세력을 확장하기는 하였지만, 카마쿠라시대처럼 혁신적인 불교는 탄생하지 않았다. 다만 오산(五山)을 중심으로 선승(禪僧)들의 독특한 미술이나 문학이 생겨났다. 센코쿠시대(戰國時代)에는 히에이산 고야산 혼간지(本願寺) 등 대사원들이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의 철저한 박해를 받기도 하였으나, 에도시대 초기에는 각 사원 모두 재건되었다.

메이지유신 직후에는 신도를 국가종교로 삼는 과정에서 폐불훼석(廢佛毀釋)이라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전후에는 다시 불교계통의 신흥종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1) 나라시대의 불교

나라시대는 일본이 율령제에 입각하여 고대국가를 형성하고 확립한 시기였다. 그 때문에, 불교는 정치적인 통일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었고, 국가진호(國家鎮護)를 위한 불교라는 성격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 결과, 나라불교는 교리의 이해라는 측면에서는 불교계의 지식인들의 불교에 머물렀으며, 한편 정치적인 지배자인 천황·귀족들이 신봉한 귀족불교였다.

승려들은 진호국가(鎮護國家)를 위한 법회 및 기도를 행하는 동시에, 인도 및 중국에서 생겨난 다양한 불교이론의 연구를 발전시켰다. 그와 함께 나라(奈良)의 여러 큰 절(大寺)에는 남도육종(南都六宗)¹²⁾으로 불리는 여러 학파가 형성되었다. 육종이 확인되는 것은 750년 경이라고 한다. 당시, 종(宗)은 중(衆)이라고 쓴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록 종(宗)이라고 해도 후세의 종파와는 달리, 학파라고 해야 할 성격이었다. 사원에는 각 종이 섞여 있었으며, 승려도 여러 종을 겸수(兼修)하는 예가 많았다. 예를 들어 동대사에는 육종을 연구하는 승려집단들이 모두 존재하였다. 각 종은 대립하여 논쟁도 했지만, 또한 서로 협력하여 연구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법상종과 삼론종의 대립은 나라시대 말기에 격심하게 되었으며, 양자의 대립은 헤이안시대까지 계속되어, ‘삼론·법상종의 해묵은 다툼’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이다. 양종의 대립을 요약해 보면, 먼저 삼론종의 중관적(中觀的)인 무(無)와 법상종의 유식적(唯識的)인 유(有)가 대립한다. 삼론종의 중심이론은 용수(龍樹, 150-250년 무렵)에 유래한다. 이른바 존재에 고정적인

12) 나라불교(奈良佛敎)의 6학파. 삼론종·성실종·법상종·구사종·화엄종·율종. 현재의 교토(京都)인 헤이안경(平安京)으로 천도한 이후, 남동쪽에 있는 나라를 남도(南道)라고 하였다.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일체개공(一切皆空)의 사상과 중도(中道)의 가르침이다. 제법(諸法, 제현상)의 본질을 공(空)이라고 하고, 연기(緣起)에 의하여 제법(諸法)은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삼론종은 관념론적이며 논리의 불교이다. 이에 대하여 법상종은 일체의 현상을 식(識, 심리작용)의 드러남으로 보는 유식(唯識)의 철학을 근본으로 한다. 그것은 제법의 본질(法)보다도 현상형태(相)를 중시하며, 심리주의적인 유식이론을 전개하여, 이지적이고 조직적인 이론구성을 갖추었다. 법상종은 현실주의적이며 실천의 불교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불성(佛性)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불성론(佛性論)에 있어서는 유성무성(有性無性)의 문제를 두고 대립하였다. 삼론종은 “일체의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는 평등주의에 선다. 법상종은 “오성은 각각 다르다(五性各別)”이라는 차별주의에 서서, 인간의 선천적인 성질에 따라 다섯으로 구분하고, 그 마지막을 “불성을 갖지 못한 중생(無性衆生)”이라고 하여 성불할 수 있는 소질을 갖지 못한 자로 보았다¹³⁾. 이러한 대립은 인도불교에서 생겨났으며, 중국·한국·일본을 통하여 다툼을 계속해 온 불교의 근본문제였다. 일본의 삼론·법상 양종의 대립, 법상종과 화엄종 및 천태종 등의 대립은 이러한 불교의 오래고도 긴 논쟁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남도육종은 원래 중국에서 발생한 여러 종파를 그대로 수입한 중국불교이다. 그때까지 알지 못하였던 높은 수준의 교학(敎學)이었으므로, 승려들이 협력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신앙이라는 실천의 문제보다는 내용 자체에 대한 연구와 이해에 급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도육종의 성립과정에는, 당나라에 파견된 사신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간 많은 학문승을 비롯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삼론종을 전한 고구려의 승려 혜관(惠灌, 625-81), 화엄종을 전한 신라 승려 심상(審祥), 고난을 무릅쓰고 건너와 계율(戒律)을 전파한 당나라 승려 감진(鑑眞) 등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승려의 활동은 국가의 엄한 통제도 있어 일반적으로 사원 안으로 제한되어 민간에 대한 포교는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았다. 사원 밖으로 나가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죄복(罪福)의 인과를 설법하는 일조차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백성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일로 간주하였

13) ‘오성각별(五性各別)’은 『해심밀경(解深密經)』에 의한 법상종의 교의로, 중생이 본래 다섯 가지 성질 중 어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성질은 결코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다. 오성은 각각 성문중성(聲聞種性), 연각중성(緣覺種性), 보살중성(菩薩種性), 부정성(不定性), 무성유정(無性有情)이다. 성문 연각 보살중성은 각각 아라한과(阿羅漢果) 벽지불과(辟支佛果) 불과(佛果)를 얻을 수 있게끔 정해져 있어서 결정성(決定性)이라고 하며, 네 번째 부정성(不定性)은 과(果)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무성유정은 삼승(三乘)의 종자를 갖지 못하므로 아라한(阿羅漢) 이상의 과를 얻을 수 없다고 한다.

다. 물론 교우키(行基)와 같이 정부의 단속을 받으면서 농민을 위한 용수시설 및 교통시설을 만드는 등 포교와 사회사업에 힘쓴 승려도 있었다. 이처럼 승려와 일반백성이 일상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어디까지나 불교를 국가가 백성을 통치하는 수단인 일부라고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백성들은 웅대한 건축물과 이국적인 문화를 경이로움과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허용되어 있었을 뿐이고, 구체적인 교리에 접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또 감진(鑑眞)이 계율을 전하게 된 배경에도 국가권력에 의한 사원통제라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753년에 감진이 일본으로 건너오자, 동대사에 계단(戒壇)을 세우는 동시에 감진으로 하여금 수계(受戒)를 전담토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계제도를 엄격히 하고, 하야국(下野國)의 약사사(藥師寺)와 축자국(筑紫國)의 관세음사(觀世音寺)에도 계단을 만들어, 이 세 곳에서만 승려들에게 수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결국 승려에 대한 수계권을 국가권력이 완전히 장악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수계권을 둘러싼 문제는 헤이안시대에 들어서 새로운 종파가 출현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한편 741년에는 전국 각지에 국분사(國分寺, 율령국가의 지배이념이었다고 할 수 있는 불교를 지방에 전파할 목적으로 각 지방에 설치한 사찰)를 건립하는 명령을 내렸다. 각 국(國)마다 금광명사천왕호국지사(金光明四天王護國之寺)라는 승사(僧寺)와 법화멸죄지사(法華滅罪之寺)라는 니사(尼寺)를 각각 하나씩 세우고, 승사에는 남자승려 20명 니사에는 여자승려 10명을 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남녀 승려들로 하여금 매월 8일에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을 강독토록 하였다. 『금광명최승왕경』은 『법화경』 『인왕경』과 더불어 호국 경전으로 중시되었는데, 이 경전을 가지고 공양을 하면, 사천왕의 도움으로 환란을 잠재우고 마을을 지켜주며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러한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743년에는 노사나대불(盧舍那大佛)를 조영토록 하고, 753년에 전국의 국분사를 총괄하는 동대사(東大寺)에 이를 안치토록 함으로써, 형식적으로나마 전국의 사원들을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노사나불은 『범망경』과 『화엄경』에 나오는 부처로, 일체를 통일하는 동시에 역으로 일체로 화현(化現)하여 어디에나 충만한다는 교리에 따라, 국가통일과 안정에 대한 원망(願望)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

동대사 및 국분사와 마찬가지로 천황가와 유력호족들이 세운 사찰들도 아스카에서 나라로 이견되면서 관대사(官大寺)로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용성하였다. 텐무와 지토오가 발원한 대관대사(大官大寺, 후의 大安寺)와 약사사를 비롯하여, 등원씨(藤原氏)의 씨사(氏寺)인 흥복사(興福寺), 원흥사(元興寺), 감진(鑑眞)이 일본에 건너와 계율을 전하면서 건립된 당초제사(唐招提寺, 759)와 쇼오토쿠천황(稱徳天皇)이 발원한 서대사(西大寺, 765) 등이 동대사와 함께 나라 7대 사찰이었다.

그러나 나라불교가 실제로 수행한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이나 귀족들을 위해서 진호국가(鎮護國家)와 제액초복(除厄招福)을 위한 주술적인 기도를 해주는 것이었다. 그 결과 쇼오무천황(聖武天皇, 재위 724-56)의 시대에 나타난 사회불안 및 정치적 혼란과 맞물려, 나라불교는 부패·타락하였다. 승려들이 제액초복이나 질병치료 등을 명목으로 천황이나 귀족들과 깊숙이 연관되었기 때문에, 나라시대 말에는 도오쿄오(道鏡)처럼 정치에 개입하는 승려도 나타났다. 물론 나라불교는 법상종과 삼론종·화엄종의 대립을 통하여, 불교 교학의 문제점을 명백히하고 이해를 깊이하여, 불교가 일본적으로 대승화(大乘化)·민중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한편으로는 산 속에 들어가 수행하는 승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움직임은 결국 헤이안시대의 신불교(新佛敎)의 모체가 되었다.

2) 헤이안시대의 불교

헤이안시대에 들어가 정부는 불교계에 대한 단호한 숙정쇄신에 나섰다. 코오닌(光仁)과 칸무(桓武) 양대에 걸쳐서 승니들의 행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한편, 사찰 건립을 억제하고, 또 수도 주변의 사찰에 토지를 시입(施入)하거나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사찰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도 금하였다. 출가나 수계의 조건도 강화하여, 경전의 암송에 그치지 않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남도불교에 대한 통제책이 강화되는 한편에는 현세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기도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증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가권력과 사회의 요구에 답한 것이 헤이안 불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사이쵸오(最澄, 767-822)와 진언종의 쿠우카이(空海, 774-835)였다. 사이쵸오는 나라불교가 정치화하고 세속화함으로써 빠져들어간 수렁에서 불교를 건져내고, 신앙을 다시금 확립하고자 하였다. 첫째 승려들을 규제하는 승강제도(僧綱制度)를 부정하여 왕권 및 속권(俗權)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둘째 논(論)에 의하지 않고 경(經)에 의거한 종파를 세우고, 셋째 원밀계선(圓密戒禪)으로 불리는 불교 내부의 네 흐름을 융합시킨 궁극적이고 종합적이며 통일적인 불교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시도를, 나라불교와 관련시켜서 보면, 나라불교에 있어서의 법상종과 다른 학파 간의 대립을 지양·종

합하는 것이며, 중국불교의 직수입한 데 그친 나라불교를 뛰어넘어, 일체의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一切皆成)고 하는 교리에 철저한 일본적인 대승불교를 전개한 것이다. 그 때문에 순수한 구도적인 자세를 견지한 사이초오는 나라의 남도불교(南都佛敎)와 격렬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신앙과 이론의 두 측면에서 신불교를 건설하고자 시도한 사이초오에 대해서, 쿠우카이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실천과 신앙의 문제를 축으로 하고 구도자의 실천심리를 통하여, 불교 교리의 의미를 마음속으로부터 체험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깨달은 사람(佛果)에 이르는 인간의 정신적인 발달과정을 10단계로 분석한 『십주심론(十住心論)』(830)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모든 불교사상을 각 주심(住心)에 안배하고 상하로 단계를 지위상위의 주심은 하위의 주심을 포섭·지양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진언밀교(眞言密敎)를 제10위의 최고단계에 위치시켜, 진언밀교에 모든 사상 및 가르침(敎)의 대립을 지양·종합하였다. 이러한 쿠우카이의 진언종은 밀교이기 때문에 주술과 결합되어 민간생활에 과고들어간 데다가, 쿠우카이는 정치성이 강하고 포용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이초오처럼 구불교와 날카롭게 대립하지는 않았다. 사이초오와 쿠우카이의 활약은 나라불교에 내재된 문제와 대립을 해결하면서 일본 불교를 크게 진전시켰다.

그러나 천태종의 현실을 보면, 천태종은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겸학겸수하기에 이르러, 순수한 대승불교로부터 어느 틈에 이탈하게 되었다. 또한 교학의 최고권위이며 신앙의 중심이 되면서 천태종은 조정 및 귀족과의 결합을 더해갔다. 또 천태종의 밀교화는 지배계급의 생활과의 결합을 심화시켰다. 천태종은 귀족불교가 되면서 세속화되어 타락하였다.

헤이안시대의 불교계가 위와 같은 성향을 심화시켜가고 있을 때, 일본은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아, 전란과 천재지변에 의한 혼란이 잦아지면서 말법시대(末法時代)의 도래를 사람들은 확신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남도북령(南都北嶺)¹⁴⁾의 구불교는 신앙이 상실되어 가는 상황을 탄식하고 비난하면서 점차 독선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불교계의 현상에 의문을 나타내고 불법과 구제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여, 신앙과 국가 및 사회, 신앙과 교단의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흐름이 카마쿠라 신불교로 전개되어 나갔다. 그 제일단계가 정토종 호오넨(法然, 1133-1212)의 등장이다.

일본 불교는 처음에는 왕권과 결합하여 왕권을 장식하는 도구로서 기능하

14) 南都是 平安京(현재의 京都)에 대하여 平城京 즉 현재의 나라를 가리키며, 北嶺은 京都의 북동쪽에 위치한 比叡山 정상에 延曆寺를 가리킨다.

였다. 특히 고분을 대신하는 왕권에 대한 새로운 상징물로서 이용되었던 것이다. 왕권의 도구였던 불교의 위상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쇼오무천황이 자신은 부처의 종이라고 한 발언이다. 천신(天神)의 후손이자 현인신(顯人神)이기도 한 천황이 스스로 부처를 섬겨야 할 자임을 자처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일본의 토착적인 신들이 모두 부처의 구제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격하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후 불교는 왕권의 도구가 아니라 왕권을 보호하는 우월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천황이나 천황가나 귀족이 병에 들면 앞다투어 불력을 빌어 병을 치유하고자 하였으며, 전란이 생겨도 부처에 의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불교가 천황가나 국가를 보호한다는 관계는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승려와 천황 및 귀족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영속적일 수는 없었다. 천황을 비롯한 지배층이 질병구제 등의 현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부처에 의존하면서도, 그런 지배층의 비호와 원조없이 불교사원이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배권력과 불교는 언제나 유착된 상태였다.

이러한 관계가 결정적으로 변한 것은 사원이 승병으로 무장하고 국가권력에 대항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헤이안시대 후기인 11세기에 들어서 나라의 흥복사(興福寺) 승도와 교오토의 연력사(延曆寺)의 산법사(山法師)가 각각 춘일신사(春日神社)의 신목(神木, 신보쿠)과 일길신사(日吉神社)의 신여(神輿, 미코시)를 메고 나와 당시의 현실적인 권력자였던 상황(上皇) 즉 원(院)에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강소(強訴, 고오소)를 행하였다. 더 이상 불교는 국가의 보호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현실의 국가가 불교의 옹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국가의 오랜 비호를 받던 불교조차도 국가에 반기를 드는 상황을 당시 사람들은 말법(末法)의 도래, 말법악세(末法惡世)의 시대로 간주하게 되었다. 아울러 일반백성들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비참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 구제의 문제가 비로소 첨예하게 인식되면서, 일반백성들의 개별적인 구원을 주장하는 새로운 주장이 나타나게 된다. 카마쿠라시대의 신불교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이며 종교적인 각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3) 카마쿠라시대의 불교

카마쿠라시대에는 불교의 새로운 종파가 앞뒤를 다투어 탄생하여,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헤이안시대부터 계속된 사회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이 의지할 곳을 찾게 되었다. 호오넨(法然)과 신란(親鸞)은 염불을 외우는 일이, 사람들을 평등하게 구원해준다고 하는 아미타불의 소원과 합치한다는 가르침

을 내세워, 전란과 기근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염불은 아미타불이 구원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신란은, 부처를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자신의 죄를 자각한 악인 이야말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악인정기설(惡人正機說)을 전개하였다. 불교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남녀와 신분의 상하에 관계없이, 염불을 외우는 것만으로 누구든지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설한 잇펜(一遍)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춤추는 염불에 의한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니찌렌(日蓮)은 법화경(法華經)이야말로 부처의 참다운 가르침이며, 그 이름을 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카마쿠라를 주된 포교의 장으로 삼았던 니찌렌은 외국의 침략과 내란을 예언하고, 개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국가 및 사회가 올바르게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을 저술하여 호오조오 토키요리(北條時賴)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배층을 비롯한 무가사회에 널리 받아들여진 것은 좌선(坐禪) 등 자력(自力)에 의한 수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설한 선종(禪宗)이었다. 히에이산에서 수행한 뒤에 두 차례나 송(宋)에 건너가 선종을 전래한 에이사이(榮西)는 주로 카마쿠라에서 포교하여 막부의 보호를 받았다. 도오겐(道元)도 송(宋)에서 선을 배워 귀국하였다. 그는 권세를 가까이하지 않고, 선(禪) 이외의 모든 가르침을 용인하지 않았다. 이처럼 선종이라는 새로운 종파가 유행되자, 필연적으로 그 수행도량인 선종사원을 건설할 필요가 있었다. 에이사이는 1202년에 교오토에 건인사(建仁寺)를 세웠으며, 1243년에는 동복사(東福寺)가 건립되어 엔니(圓爾)가 주석하였다. 선종발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선사(南禪寺), 그리고 무로마찌시대에 들어서 창건된 무소오소세키(夢窓疎石)의 천룡사(天龍寺)나 상국사(相國寺) 등도 대표적인 선종사원이다. 이들 5개의 임제종 사원을 나중에 경도오산(京都五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편 무가정권인 막부가 위치한 카마쿠라에도 정묘사(淨妙寺), 수복사(壽福寺), 건장사(建長寺), 원각사(圓覺寺), 정지사(淨智寺) 등의 선종 계열의 사찰이 건립되었다. 그 중에서도 건장사는 전형적인 선종양식의 건축물로서도 이름이 높을 뿐만 아니라, 널리 중국의 학문을 연구하는 장으로서 전국에서 학도들이 몰려들어 그 시대 문화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선종의 발전에 자극을 받아서 구불교 측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승려 칸진(鑑眞)이 전한 율종(律宗)은 서대사(西大寺, 사이다이지)의 에이손(叡尊)에 의하여 부활되었다. 법상종의 죠오케이(貞慶), 화엄종의 코오벤(高弁) 등도 계율을 중시하고, 그 부흥에 힘썼다. 에이손 및 카마쿠라에 내려간 닌쇼오(忍性)는 도로의 복구 및 교량건설 등의 사회사업에 진력하였으며, 비

인(非人, 천민) 및 병자 구제를 위한 시설을 만들었다. 닌쇼오는 호오쥬오씨(北條氏, 카마쿠라시대의 執權家)의 보호를 받아 카마쿠라의 극락사(極樂寺, 코쿠라쿠지)를 거점으로 활약하였다.

카마쿠라시대는 회권물(繪卷物)¹⁵⁾의 황금시대이기도 하였는데, 불교와 관련된 작품들도 다수 제작되었다. 카마쿠라 신불교의 개조(開祖)들의 전기를 그린 것으로 법연상인회전(法然上人繪傳) 및 일편상인회전(一遍上人繪傳)이 있다. 이러한 회권(繪卷, 에마키)은 사실성이 뛰어나, 묘사된 의상이나 동작에서 이 시대의 풍속이나 관습을 알 수 있다. 아귀초자(餓鬼草子)¹⁶⁾ 병초자(病草子)¹⁷⁾ 지옥초자(地獄草子)¹⁸⁾ 등은 이 시대 사람들이 지옥이나 기근 질병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가를 보여준다. 한편 동대사(東大寺) 재건을 위해 동원된 운케이(運慶)¹⁹⁾ 및 카이케이(快慶)²⁰⁾ 등 나라 지역의 불사(佛師)들도 사실적이며 힘이 넘치는 많은 불상 조각을 만들었다.

이전 시대의 불교가 중국불교를 수입한 외래불교에 그쳤다고 한다면, 카마쿠라시대에는 일본적인 불교가 성립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불교교리의 전개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불교의 일본적인 전개가 현재에도 일본불교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형성하였다. 악인이야말로 부처의 구원을 받을 원래의 대상이라는 가르침이야말로, 전쟁을 일삼는 무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였으며, 평소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는 보통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교리였던 것이다.

15) 에마키모노, 회권(會卷). 어떤 줄거리가 있는 내용을 두루마리에 그린 것. 그림의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많다. 처음에는 불교설화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에 시작된 것으로 생각되며, 그후에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을 주제로 그리기도 하였다. 현재 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원씨물어회권(源氏物語會卷)이다.

16) 가키조오시. 헤이안 후기에서 카마쿠라시대 전기 사이에 제작된 에마키로 2권이 전하고 있다. 여러 가지 불경에 이박하여 아귀도(餓鬼道)에 빠진 사람들의 고통과 그들을 구제하는 내용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17) 야마이조오시. 헤이안말기부터 카마쿠라 초기에 걸쳐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 에마키. 현재는 23개의 장면만이 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질병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그리고 있다.

18) 지고쿠조오시. 헤이안 후기부터 카마쿠라 초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 에마키로, 불교의 경전에 입각하여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고통을 그리고 있다.

19) 카마쿠라 전기에 불상을 만들던 기술자(佛師). 강건한 사실주의에 입각한 카마쿠라시대의 양식을 완성하였으며, 동대사 남대문의 인왕상(仁王像)을 비롯하여, 원성사(圓成寺, 엔쥬오지)의 대일여래상, 흥복사 북원당(北圓堂)의 불상 등을 제작하였다.

20) 카마쿠라 초기의 불상 조각가. 동대사 재흥시에 운케이와 함께 인왕상을 제작하였다. 그의 작품은 유려한 형식미를 갖춘 것으로 유명하며, 현재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미륵보살상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4) 무로마찌 시대의 불교

천태(天臺) 진언(眞言) 등의 구불교는 그 보호자였던 조정 및 공가(公家)²¹⁾의 몰락과 장원의 붕괴 등으로 점차로 세력이 쇠퇴해갔다. 이에 비해 카마쿠라시대에 성립된 신불교의 각 종파는 무로마찌시대에 이르면 신불교의 창시자들이 종교적 정열로 이룩한 교리 그 자체는 크게 발전된 것이 없었으나, 무사·농민·상공업자 등의 신앙을 얻으면서 도시와 농촌 등으로 퍼져나가 교단만은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다. 이 시기에 전국 각지에는 신자의 기부에 의해 많은 절이 세워졌고, 그 지역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되어갔다. 선종의 오산파는 쇼오군(將軍) 및 슈고(守護)²²⁾의 보호를 받아 활발히 활동했지만 막부의 쇠퇴와 함께 쇠약해져 갔다. 이에 비해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추구하여 지방포교를 지향한 선종의 여러 종파(林下)²³⁾는 지방무사 및 민중의 지지를 얻어 각지로 퍼졌다.

요시미쯔(義滿)는 조부 타카우지를 본받아 교오토에 상국사(相國寺, 쇼오코쿠지)²⁴⁾를 세웠다. 또한 남송(南宋)의 선종 오산(五山)²⁵⁾의 제도를 따라서 교오토와 카마쿠라에 다섯 개 절을 각각 지정하여 막부가 보호하였다. 교오토의 남선사(南禪寺, 난젠지)²⁶⁾는 별격(別格)으로 인정하여 오산(五山)의 위에 있게 하였고 상국사(相國寺)의 주지는 선종(禪宗)의 모든 승려를 통제하는 권한을

21) 조정에 출사하는 관인들을 총칭하는 말이었으나, 카마쿠라 막부가 성립된 이후에는 쇼오군과 그 신하인 무사들을 무가(武家)라고 부르는 데 대하여, 조정에 출사하는 문관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대비적으로 사용되었다. 에도시대에는 각 가문의 가계(家格)가 고정되면서 천황이 거처하는 전각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른바 전상인(殿上人)들을 가르키게 되었다.

22) 카마쿠라무로마찌시대의 무가의 직명. 국(國) 단위로 설치되어 처음에는 주로 군정(軍政)을 담당하였으나, 행정적인 통제력을 강화하면서 각 영국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다이묘(大名)로 변화해간다.

23) 린카. 무로마찌막부의 보호하에 있던 오산파(叢林)에 대하여, 센코쿠다이묘(戰國大名)이나 재지무사 세력과 연계되어 지방에서 성장한 선종의 제종파를 가리킨다. 교오토의 대덕사(大德寺)나 묘심사(妙心寺)를 비롯하여 지방의 영평사(永平寺), 총지사(總持寺) 등이 대표적이다.

24) 1382년 아시카가요시미쯔(足利義滿)가 막부에 인접한 곳에 세워, 무소오소세키를 개산(開山)으로 삼았다. 이후 쇼오군가의 위패를 모시는 등 무로마찌막부와 밀접한 연관을 유지하였다. 특히 녹원원(鹿苑院)은 역대 승록(僧錄)을 관장하는 등, 오산 총림의 행정적인 중추로서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25) 남송에서 들어온 관사제도(官寺制度)로, 최고의 선종사원 5개를 지정하여 조정이나 막부가 주지를 임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카마쿠라시대부터 카마쿠라의 사원을 오산으로 지정하였으나, 건무신정(建武新政) 당시에는 의도적으로 교오토를 중심으로 남선사(대덕사도 동격), 동복사 건인사 건장사 원각사의 순위로 오산을 지정하였다. 무로마찌막부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공가선(公家禪)과 무가선(武家禪), 교오토포와 카마쿠라포 사이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장사·남선사, 원각사·천룡사, 수복사, 건인사, 동복사와 정지사의 7개의 절을 오산으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오산 본래의 의미가 변화되어, 가장 높은 다섯단계의 사격(寺格)을 나타내게 되었다. 요시미쯔에 이르러서 상국사를 창건하면서, 남선사사를 오산 위에 두고, 교오토와 카마쿠라에 각각 5산을 지정하면서, 그 사격이 후대까지 이어졌다.

26) 교오토시 좌경구에 있는 임제종 남선사파의 총본산. 1291년 카메야마천황(龜山天皇)이 자신의 이궁(離宮)을 기진하여 사찰로 삼은 데 기원하며, 1334년에 고다이고천황(後醍醐天皇)은 오산(五山)의 첫 번째에 올렸으며, 1386년에는 요시미쯔가 다시 오산보다 상위에 두었다. 카마쿠라시대부터 요시미쯔시대에 걸쳐서 많은 탁월한 승려들을 많이 배출하여, 황금시대를 맞이하였다.

부여받았다. 상국사는 막부의 외교사무를 취급하는 권한도 부여받아, 외교 사절로는 거의 오산의 선승을 임명하기도 하였다. 명(明)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천룡사(天龍寺)²⁷가 독자적인 교역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 오산의 선승들 중에는 한시문이나 유학에 조예가 깊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 종교로서의 입제종의 성격을 많이 변화시켰다. 이리하여 입제종은 권위종교, 특권종교가 되어버렸다.

또 조정과의 연계를 더욱 다지고 교토에서 세력을 확대한 정토종(淨土宗)은 더욱 토오고쿠(東國)²⁸로 포교활동을 넓혀갔다.

니찌렌(日蓮)으로부터 시작된 법화종(法華宗) 또는 일련종은 국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여 일본을 불교의 중심지로 삼고, 신앙이 위정자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보호한다고 주장하였다. 니찌렌은 법화경을 특히 존승하여 ‘나무묘호렌게쿄오(南無妙法蓮華經)’라는 주문만으로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격정적인 성격의 니찌렌은 그의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에서 다른 종파를 사교(邪敎)라고 맹렬히 비난함으로써 다른 종파의 공격을 받았고 카마쿠라막부로부터도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무로마찌시대에는 장군가의 신봉을 획득하여 천하태평 사해안전(天下太平, 四海安全)을 기원하는 밀교적인 경향으로 흘렀다.

니찌렌이 죽은 뒤 한동안 분파운동(分派運動)으로 교세가 약화됐으나 렌노(蓮如)와 거의 같은 시기에 닛신(日親)이 나타나 교세가 다시 활발해졌다. 특히 교토로부터 쥬우고쿠(中國) 지방과 큐우슈우(九州) 지방 등으로 종파의 세력을 넓힌 닛신(日親)은 다른 종파와 격심한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종종 박해를 받았다. 교토에서 재력을 비축한 상공업자 중에는 일련종의 신자가 많아져서, 그들은 1532년 교토를 전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화일규(法華一揆, 교토 町衆에 사이에 만들어진 법화종도의 결합체)을 맺고 일향일규(一向一揆, 15세기 말에서 16세기말에 걸친 本願寺 문도들에 의한 일규)와 대결하여 지역의 정치를 자치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1536년 법화일규(法華一揆)는 연력사(延曆寺)와 충돌하여 화공을 받아 한때 교토에서 내쫓겼다. 이 전투를 천문법화(天文法華)의 난이라고 한다.

신란이 죽은 후에 정토진종(淨土眞宗 혹은 一向宗)은 교세의 확장이나 발전

27) 교토시 우경구(右京區)에 있는 입제종 천룡사와 총본산. 아시카가타카우지(足利尊氏)와 타다요시(直義) 형제가 고다이고천황(後醍醐天皇)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1345년에 완성되었는데, 그 사이에 조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과의 무역을 위한 천룡사선(天龍寺船)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28) 아즈마노쿠니. 나라시대까지 도움이 있었던 나라 주변의 키나이(畿内)에서 보아 동쪽에 있는 지역이라는 뜻으로, 시대에 따라서 그 범위가 조금씩 달라진다. 가장 넓게는 이세(伊勢, 현재의 미에현)와 미노(美濃, 현재의 키후현) 이동지역을 가르키는 경우를 비롯하여, 시나노(信濃, 나가노현)과 토오토우미(遠江, 시즈오카현) 이동을 가르키는 경우, 사가미(相模, 카나가와현)의 아시가라고개(足柄坂) 이동과 코오즈케(上野, 군마현)의 우스이고개(碓氷峠)의 동남에 있는 지역을 가르키는 경우, 미나모토노요리토모(원외조)에게 동국행정권이 부여되었던 지역을 가르키는 경우가 있다.

은 없었으나, 교토의 오오타니(大谷)에 본원사(本願寺, 혼간지)가 만들어져, 시모쓰케국(下野國)의 전수사(專修寺, 센쥬우지)와 함께 교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농민 이외에도 각지를 이동하면서 생활을 하는 상인과 교통업자 및 수공업자들에게도 널리 받아들여져서 퍼져갔다. 진종은 본원사파(本願寺派)와 전수사파(專修寺派)로 갈라졌는데, 전자는 신란의 후손이 중심이 되고 후자는 제자가 중심이 되었다. 본원사파에서는 렌노(蓮如, 1415-99)가 나타나 40년에 걸쳐서 거대한 조직을 완성하였는데, 신도들의 종교적인 통합체로서 말사(末寺)를 두고 그것들이 교토의 본원사에 예속되는 계층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응인(應仁)의 난 때 렌노(連如)는 아미타불의 구원을 믿어 염불을 외면 누구라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점을 평이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강(講, 신불에 참여하거나 또는 기부를 하기 위한 단체)을 조직해서 총촌(總村, 주민들이 단결하여 자치를 행하는 촌락)을 직접 파악해갔다.

렌노를 중심으로 하는 정력적인 포교활동에 의해 본원사(本願寺)의 세력은 호쿠리쿠(北陸) 토오카이(東海) 킨키(近畿)지방으로 퍼졌고, 각 지역마다 강하게 결속하여 강대해졌다. 카가(加賀)의 수호대명(守護大名)을 타도하고 오랫동안 그 지방을 통치한 일향일규(一向一揆)는 이러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렌노는 만년에 오오사카(大阪)에 석산방(石山坊)을 세워 은퇴하였었다. 렌노가 머물렀던 이시아마(石山)의 본원사(本願寺)는 재력면에서나 정치적인 권위면에서 대명 세력과 맞먹을 정도였으며, 그 때문에 농촌의 지배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던 대명(大名, 각 지방의 봉건영주) 세력과 문도(門徒, 그 종파에 속한 신도) 집단이 충돌하여 각지에서 일향일규(一向一揆)가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카가(加賀)의 일향일규(一向一揆)였다. 뒤에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조차도 이를 쉽게 제압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종교집단을 형성하였다. 이리하여 본원사의 문주(門主)는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지배자가 되었다.

이러한 신불교에 공통되는 점은 실천적이며 실질적(정신수양, 신앙분위)이고, 일반적(평민적, 대중적)이며 활동적(街道에의 진출)인 면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신불교가 재래불교에 대한 반발로서 생겨난 것인 만큼 나라의 구불교 측에서도 각성의 기운이 일어났다. 화엄종의 묘오에(明惠, 高辯이라고도 함)는 교토의 (梅尾)에 고산사(高山寺)를 세워 명리를 버리고 염불적인 불교를 주장했고, 법상종의 게다쓰(解脫, 貞慶라고도 함)도 염불적인 경향을 도입해 야마시로(山城)의 카사기야마(笠置山)에 중흥의 토대를 쌓았다. 율종의 닌쇼오(忍性), 에이손 등은 나라과 카마쿠라에서 질병치료, 고아구제, 교량가설 등 사회사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무로마찌시대에는 막부의 소재지가 교토였기 때문에 교토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발전하였다. 현재 교토에 남아있는 많은 문화재들이 대체로 무로마찌시대에 성립된 것이다. 금각사(金閣寺)나 은각사(銀閣寺)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밖에도 이 무로마찌시대는 카마쿠라시대에 만들어진 신불교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으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각종 예능이 성립된 시기이기도 하다. 능(能)이나 광언(狂言), 차를 마시는 풍습, 일본식 주택의 원형 등이 이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무로마찌 문화 중에서도 동산문화(東山文化)는 불교의 선종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선의 정신과 생활태도라고 할 수 있는 유현함과 한적함 그리고 간소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근현대사와 동아시아

노영순(한국해양대학교)

근현대시기 동아시아의 공통된 역사적 경험은 유감스럽게도 동아시아 밖에서 시작된 변화와 도전인 제국주의, 제1·2차 세계대전, 냉전과 탈냉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사건들이 동아시아의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만들어내고 그 사건들이 동아시아 각국에서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¹⁾ 그러나 이는 외부로부터의 동인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동아시아 내부의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역사발전의 원동력을 무시하기 십상이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고자 부심하는 각국의 개별적인 노력만 강조될 뿐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상호 가지게 되는 관계(텍스트)/관련(컨텍스트)성이 희생되기 쉽다. 따라서 관계된 역사적 경험을 추출해 내는 작업은 동아시아의 근현대사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서로 관계를 통해 구성되지 못했던 가까운 과거를 상기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역사적 과제를 수행했으며 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래의 발전적인 동아시아상을 구축한다는 설계에서도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근현대사에서 동아시아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관계된(이해관계나 비전의 일치)이 전제된) 역사적 경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관계된 역사적 경험은 적지 않았다.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청불전쟁과 청일전쟁으로 인한 동아시아적 국제질서(邦交, 조공-책봉관계)의 붕괴, 식민·반식민 극복을 위한 아시아연대 운동과 사상, 일본의 점령, 자유주의권과 공산주의권 간의 분열과 적대 등이 있다.²⁾

물론 공통되거나 관계된 역사적 경험만이 동아시아사의 내용을 구성하는

- 1) 근현대시기 동아시아의 밖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 역사경험의 외연을 결정지은 몇 중요한 사건이 베트남사를 구성시키는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 19세기 중반에 시작되어 20세기 직전에 마무리되는 프랑스 식민지화와 항불투쟁 ㉡ 베트남에서는 佛屬시기로 불리는 식민지 시기와 민족주의운동 ㉢ 제2차 세계대전기 일본점령과 8월혁명 ㉣ 탈식민화와 냉전 시기: 제1·2차 인도차이나전쟁 ㉤ 탈냉전시기
- 2) 동아시아 간 관계라는 측면에 강조점을 두면서 베트남 근현대 역사를 구성한다면 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 동아시아세계로 부티의 이탈과 해외 프랑스화 ㉡ 근대국가 형성을 위한 기반 확립이라는 여타 동아시아국과의 동일한 과업의 수행과정 ㉢ 두 번의 독립과 두 국가(일본, 중국)의 점령 ㉣ 베트남 발전과정에서의 동아시아 각국과의 갈등과 협력

필요충분요소가 될 수는 없다. ‘알고 가르치는 자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 각국사 간의 관련성과 역사 전개 과정에서 보이는 평행성, 유사성과 독자성을 찾아내고 설명할 수 있어야 진정한 동아시아사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네 국민국가(여러 비판과 해체도중에 있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의 개별적인 역사적 전개 과정 그리고 그 국가 내에서의 하위 집단들의 상호작용 또한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데 전제조건이 됨은 물론이다.

동아시아 근현대사에 베트남사를 위치시켜 이해하고 동아시아 각국사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주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베트남의 근현대사를 다음과 같은 시기와 주제로 나누어 정리했다.³⁾

I. 베트남 근대사의 형성: 응우옌왕조와 전통 베트남의 패망

1. 응우옌왕조(阮朝, Nguyễn triều, 1802-1945)

- 띠에 쩌(Tây Sơn) 왕조를 패하고 자롱(Gia Long 嘉隆; 1762-1820)황제가 황위에 오른 1802년에 시작

- 바오 다이(Bảo Đại)가 베트남민주공화국에 권력을 이양한 1945년까지 143년 동안 지속

- 자롱황제의 통치기에 이 국가의 명은 월남(Việt Nam, 越南), 민망(Minh Mạng 明命; 1791-1841)통치기부터는 다이남(Đại Nam, 大南)으로 불림

- 응우옌 왕조시기 역사 구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랑스식민주의

(1) 전사: 레왕조시기((Hậu) Lê, (後)黎朝 남북조 분열기 응우옌가

(2) 응우옌왕조의 초기: 국내체제, 주변국과의 외교, 서구와의 관계

(3) 응우옌 황제들의 서구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응우옌왕조의 대유럽 외교정책 기조는 쇄국이였다. 초기 특히 자롱기에 있었던 프랑스에 대한 예외(프랑스인들의 관직 임용, 가톨릭 선교와 무역 활동의 자유 인정)는 응우옌왕조 설립과정에서 논의가 오고간 베르사이유조약건과 아드란 주교의 활약에 대한 보답과 배려라는 차원에서 존재했다. 유교문화에 대한 우월감과 서구 침략으로부터의 왕조를 지키려는 ‘보수열망’은 제2대 황제 민망에 와서는 철저한 배외사상으로 강화되었다. 이는 서구 제국의 통상관계 거절, 카톨릭포교 금지 그리고 가톨릭선교사와 교도 박해로 나타났다.

이렇듯 베트남의 대응은 피상적으로 보았을 때 동아시아 왕조들의 반응과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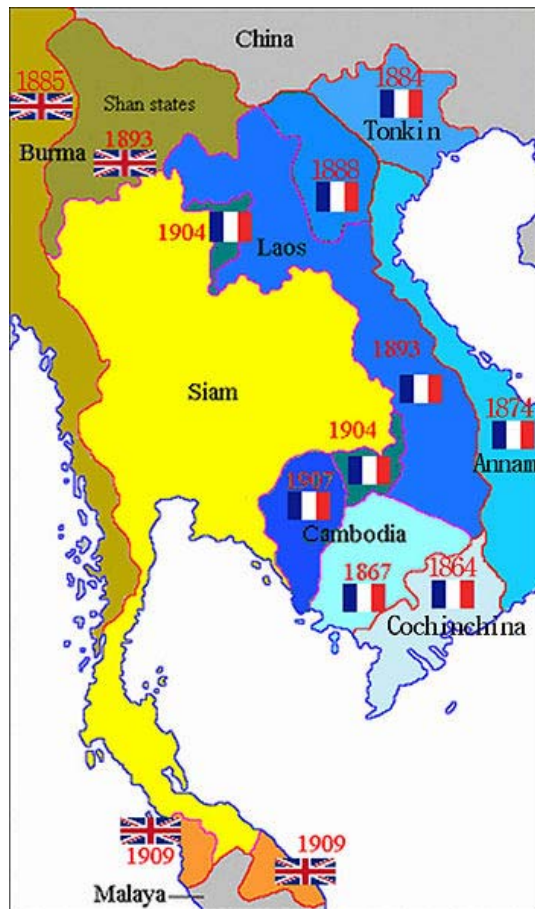
3) 각국사를 해체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비교사를 위한 논의의 주제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제국주의의 도전에 대한 응전과 더불어 개혁이 갖는 의미 ㉡ 근대국민국가 형성의 기초로서의 민족주의의 등장과 주제 및 성격 ㉢ 국가이데올로기로서의 베트남공산주의가 수립되는 과정 ㉣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과 전쟁 ㉤ 역사적 유산으로 남겨진 현존 갈등과 화해를 위한 방안

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구체적인 실상은 다소 달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민망은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의 정세 파악을 위해 청, 인도네시아, 인도, 남양군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선박을 파견하고 무기 수입은 물론 유럽에서 출판된 서적을 구입케 하고, 여러 프랑스 신부를 관직에 임명하여 통역사로 외국과의 통상과 외교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선교금지와 함께 모든 선교사를 후예에 불러들여 번역을 하게 했다. 둘은 ‘쇄국’의 본질이다. 자료를 통해 보건데 응우옌의 왕들이 전면적으로 서구와의 통상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통상을 끝내고 돌아가는 형식이 아니라 머물면서 거주지를 형성하는데 대한 거부감, 이들과 현지인들과의 접촉에 대한 불안감, 아시아에 대한 도전의 두 개의 축인 통상과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와 잇몸의 관계, 관계형성을 통해 서구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 간섭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에는 근거가 있었다. 국내에서 발생한 여러 반란과 청에서 발생한 아편전쟁(1차: 1939-1842, 2차:1956-1860), 남경조약과 천진조약의 체결을 겪으면서 베트남 황제들의 쇄국관은 경화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동아시아 전체를 시야에 넣었을 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은 아편전쟁이다. 이 전쟁은 ‘청’의 사건만이 아니라 베트남의 사건이었다고 본다. 아편전쟁이 아시아 전체 역사에서 의미를 가지는 맥락은 이에 동원된 영국군(19,000+11,000)과 프랑스군(6,700)이 동남아시아 특히 버마, 말레이, 인도차이나를 식민점령하게 되는 기본군사력이었다는 점까지도 포괄되어 연구·교수되어야 한다.

2. 프랑스의 식민화 과정

프랑스의 나폴레옹3세는 청과의 전쟁을 위해 파견한 부대가 天津條約의 체결로 여력이 생기자 선교사 탄압을 구실삼아 1858-59년 중부의 다낭과 남부의 자딘(Gia Dinh, 嘉定)지방을 점령했다. 2차아편전쟁이 끝나자 1860-61년 프랑스군은 베트남 남부를 유린하고 강화조약을 요구했다. 1862년에 맺어진 제1차 사이공조약으로 인해 기독교 포교 자유와 항구 개항 그리고 통상이 인정되었으며 베트남 남부의 3성을 비롯한 영토가 할양되었다. 1863년 캄보디아를 보호령으로 삼은 프랑스는 이와 인접한 남부의 나머지 3성을 정복할 의지가 있었는데, 이 성들에서 조정이 원조하는 반불저항운동이 계속되자 1867년 이를 핑계로 서부 3성을 점령하고 베트남남부(코친차이나)를 프랑스의 식민지로 선언했다.

중국 운남으로 통하는 무역로로 북부의 홍하가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북부에 진출하고자 했던 프랑스는 1873년 장 뒤퓌(Jean Dupuis)사건을 구실로 하노이를 점령했다. 베트남 조정은 당시 그 북변에 활거하고 있던 太平天國의



잔당 중 劉永福세력을 회유하여 공동으로 프랑스군에 적극 대응했다. 1874년 프랑스군이 북부에서 철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코친차이나 6성에 대한 프랑스의 주권을 인정하고 북부의 개방을 인정한 제2차사이공조약이 체결되었다. 북부에서 약탈을 일삼고 있는 태평천국의 잔당을 토벌해 달라는 뜨득의 요청으로 파견된 청군이 잔당을 토벌하지도 철군하지도 않은 채 홍하의 내왕을 방해하자 프랑스는 1882년 하노이를 점령하고 증원군을 보내 1883년 수도 지역을 점령했다. 당시 베트남조정은 화평과와 항전파의 갈등과 뜨득의 사후 왕위계승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 와중인 1883년 8월 베트남은 프랑스의 보호국임을 인정한 제1차후에조약에 서명했다. 1년 뒤인 1884년 6월 약간의 수정을 가한 제2차후에조약이 맺어졌다. 1883년 9월 청은 왕(히엡호아)을 시해한 반신을 주벌하고 정통의 국왕을 세운다는 명목 하에 진군을 명령했다. 사실 진군명령은 청으로서의 프랑스로부터 ‘변강이라는 대문을 지키기 위한 自守之策’이었다. 청과 프랑스 간의 갈등이 전쟁(청불전쟁, 1883-1885)으로 비화되었다. 전쟁 결과 제1·2차 천진조약이 맺어져 청은 중부인 안남(Annam, 安南)과 북부인 통킹(Tonkin, 東京)에 대한 프랑스의 보호권을 승인하는 대신 중국과 베트남 간의 국경영토 분쟁지대 몇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II. 베트남 현대사의 발전: 프랑스식민주의(1858-1945)와 베트남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

1. 프랑스 식민주의와 프랑스령인도차이나

(1) 프랑스 식민주의

- 프랑스제국주의의 특징
- 프랑스 식민사상: 동화(assimilation), 협력(collaboration), 자치(self-government)
- 프랑스 식민세력(colonial lobby)

(2)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건설

1841년 이후 남중국해에 계속 포진해있던 프랑스 해군은 파리의 암묵적인 승인을 받아 끊임없이 간섭했다. 1847년 선교사의 석방을 구실로 두 프랑스 전함인 다낭(Da Nang, Tournae)을 폭격해 5 베트남의 선박을 파괴하고 약 10,000베트남인을 죽였다. 제2제정의 나폴레옹3세의 명시적인 지시를 받은 프랑스해군은 1858년 말 다낭을 1959년 초 차딘(Gia Dinh, Saigon)을 점령했다. 1863년 그랑디에르 제독(코친차이나 총독)은 캄보디아왕에게 사이공조약으로 인해 프랑스가 베트남의 캄보디아에 대한 권리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보호령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했다. 1867년 6월 제독은 서부 3성을 장악함으로써 코친차이나 병합을 완료했으며, 다음 달 사이암 정부는 앙코르와 바뎀방 두 캄보디아 지방을 사이암에 넘기는 조건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프랑스의 보호령을 인정했다.

제3공화정시기인 1873년 프랑스 해군 장교 가르니에가 이끄는 해군이 하노이 요새를 공격했으며 그 결과 프랑스는 코친차이나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고 홍하강을 개방하는 조약에 서명해야 했다. 페리에 의해 1881년 시작된 제3공화국의 식민정책은

- 1893년 인도차이나의 프랑스당국이 전함으로 방콕을 위협해 메콩강의 동부에 있는 라오 영토의 양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이암은 나머지 영토에 대한 주권을 존중받는 대신 버마 동북부 산지역을 영국에 라오스를 프랑스에 양도했다. 프랑스는 1904-1907년 사이암에 압력을 행사해 루앙프라방 방대편 메콩강 서안, 라오스 남부 참파삭, 그리고 캄보디아의 서부를 양도받았다.

(3) 프랑스의 베트남식민지 지배정책의 특수성과 보편성

2. 베트남민족주의 운동의 전개

(1) 전통적인 항불투쟁: 근왕운동

프랑스의 침입과 때를 같이 해서 식민 점령과 지배를 물리치고 응우옌(阮) 왕조를 회복하기 위한 저항운동인 반불항쟁이 시작되었다. 반불투쟁의 전국성과 지속성 그리고 성격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쯔엥 쑹 딘(Truong Cong Dinh, 張公定)은 1861년 자신의 지방 군대를 이끌고 메콩델타에서 1864년까지 결사 항쟁했다. 1년 만에 3명의 황제를 폐했던 조정의 함 응이(Ham Nghi, 咸宜)를 추대하고 1885년 프랑스 군대에 대한 기습을 가했다. 반격을 받은 황제는 5,000군사를 데리고 궁을 빠져나와 勤王습을 발표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 이 때에 황제에게 충성을 바칠 것을 호소한다”는 이 칙령을 계기로 전국에서 황제를 지지하는 문인들과 농민들이 반불운동에 결집하게 되었다. 1888년 함 응이는 프랑스에 체포되어 알제리에 유배되지만 근왕(Can Vuong)운동은 계속되었다. 그 대표적 인물이 판 딘 풍(Phan Dinh Phung, 潘廷逢)과 호앙 호아 탐(Hoang Hoa Tham, 黃花探)이다. 전자는 과거에 합격한 문신으로 중부의 하 띠엔 중심으로 하여 팡 빈, 응예 안, 타인 호아의 4성을 무대로 1895년 죽을 때까지 무력 투쟁을 전개했다. 후자는 농민으로 톤킹델타에서 중국과의 국경지대를 근거지로 하면서 1909년까지 항불 투쟁을 계속했다. 1차세계대전을 전후해서는 타인 타이(Thanh Thai, 成泰), 주이 띠엔(Duy Tan, 維新)帝가 식민체제 전복을 기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항불투쟁은 프랑스 측의 강력한 무력동원과 가혹한 탄압방식에다가 저항세력의 무력과 전략의 열세, 지도자들의 비전과 자질의 한계, 조직과 연대의 부족, 그리고 이미 무력화된 왕조와 황제에 충성한다는 의식적인 한계가 상호작용하면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항불투쟁의 성격은 왕조의 복원보다는 베트남 국가의 독립을 목적으로 한 근대적인 민족주의 운동으로 바뀌게 된다.

(2) 근대적 민족주의 운동의 성장

서구의 정치사상, 중국과 일본에서 일어난 정치적 변화(중국 變法運動과 辛亥革命의 성공, 일본의 明治維新的의 결과와 1905년 露日戰爭에서의 일본의 승리)에 자극을 받은 베트남 근대적 민족주의자들의 모토는 혁명과 개혁이었다. 판 보이 쩌우(Phan Boi Chau, 潘佩珠)는 입헌군주제를 옹호하고 중국과 일본의 힘을 얻어 무력으로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타도하는 혁명을 꿈꾸었다. 쩌우는 아시아혁명 네트워크 구축을 중시했으며 梁啓超,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와 같은 아시아주의자들과 베트남문제를 논의했다. 일본의 개혁과 성공에 감명을 받은 쩌우는 維新會를 결성(1904)하고, 동 주(Dong Du, 東遊)운동

(1906-1908)을 일으켜 300여명의 베트남 청년을 일본에 유학 보내 새로운 문물과 베트남 독립방안을 배워오도록 했다. 자신 또한 ‘사람의 가장 커다란 비극은 나라를 잃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시작하는 『越南亡國史』 등 많은 책을 써 민족적·반식민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했다. 무력에 의한 식민정권의 타도를 추구했던 그는 1908년 무장봉기를 시도했으며, 1912년 광둥에서 베트남光復會(손문의 동맹회+ 안중근의 이토 암살사건 영향)를 조직하고, 일본, 광둥, 방콕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광역 해외혁명기지를 건설했다. 그는 또한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세계와의 연대도 모색해 1925년 세계피압박·저개발인민연합의 베트남지부를 결성하려다 체포되었다. 반면 ‘부패한’ 조국의 몰락을 목도한 판 쩐 쩐(Phan Chu Trinh, 潘周楨)은 공화제를 지지했으며, 프랑스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개혁을 추구하여 베트남의 근대화를 이룬 다음 독립을 실현하려 했다. 쩐은 군주제를 비롯한 구체제를 타파하고 사회·문화적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프랑스식민정부와 접촉하는 한편 그의 영향으로 문을 연 진보적인 애국청년을 육성하는 장인 동 켌(Dong Kinh, 東京)의숙(1908)을 비롯한 사립학교에서 신학문과 베트남의 전통문화를 가르치고 베트남의 문자(Quoc Ngu, 國語)확산에 노력했다. 또한 각종 강연회와 출판물을 통해, 군주제를 비판하고 베트남 문화 속에 서구적 가치의식이 흡수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베트남의 문제는 새로운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1922년에는 카이 딘 황제에게 하야를 요구한 공개서한 ‘七點表’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프랑스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베트남 사회의 개혁과 계몽에 나섰던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3) 급진적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

1920년대 중반은 베트남 독립운동사에 중요한 전기로 주목받는다. 프랑스 지배 하에서 근대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과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탄생한 노동자 그리고 식민경제 하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한 농민과 소농민, 1차대전 시 유럽전선에 보내져 거기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사상을 알고 돌아온 이들이 주체가 되어 독립을 위한 조직과 강령을 만들고 행동하는 급진적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민족자결, 민족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보편의 이념으로 무장하고 프랑스 식민당국에 책임을 묻고 자신이 질 책임을 인정한 이들은 이제 베트남민족주의는 외국의 지원을 받는다거나 프랑스식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인 스스로가 기반이자 주체가 됨을 인식했다. 이들의 중요한 조직적인 표현이 베트남국민당과 베트남공산당이였다.

응우옌 타이 혹(Nguyen Thai Hoc, 阮太學)은 1926년 사회개혁을 추구한

서적을 출판한 남동투샤(Nam Dong Thu Xa, 南同書社)를 설립하고 1927년 “베트남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무력 혁명으로 프랑스 지배 체제를 전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베트남국민당(Viet Nam Quoc Dan Dang)을 결성했다. 민족적·민주적 혁명의 완성과 더불어 세계의 억압받고 있는 민족들에 대한 원조를 주장하는 명확한 강령을 가진 베트남국민당은 조직과 전략 면에서도 중국 국민당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는 1929년 초 베트남노동자를 남부의 고무 농장이나 해외 프랑스식민지에 알선해 주던 프랑스인 바쟁(Bazin) 살인사건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무력봉기를 결정했다. 1930년 옌 바이(Yen Bai)의 프랑스군 막사를 총공격하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옌 바이 사건은 베트남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야기된다. 이로 인해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공산당에 가입하거나 비공산주의자들은 통합된 조직으로 서지 못한 결과 공산주의자들이 베트남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930년 호찌민(Ho Chi Minh, 胡志明)은 여러 공산주의 세력(1925년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가를 훈련시키고 공산당의 핵을 만들기 위해 광동에서 조직된 타인 니엔(Thanh Nien, 靑年)의 발전·분열과정에서 탄생한)을 베트남 공산당으로 통일시켰다. 베트남공산당의 중심 과제는 독립이라는 정치적인 혁명과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경제·사회적 혁명을 모두 의미하는 ‘베트남혁명’이었다. 즉 “프롤레타리아가 선도하는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며,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타도하고 민족독립을 달성하며, 토지개혁을 실현하고, 공산사회를 지향”하는 혁명이었다. 베트남공산당으로 인해 베트남은 세계공산주의 운동권으로 편입되었으며, 중국혁명을 돕고 남양공산당·태국공산당·필리핀공산당 창당에 관여하게 되었고 라오스와 캄보디아 공산주의 운동을 지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국제공산주의 노선의 변화에 따라 강조점은 달라졌지만 베트남의 독립은 공산당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이었다. 1930-31년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경제투쟁’은 전국 25개 성에 걸쳐 1000건이 넘는 노동자 파업, 농민 데모, 학생과 상인의 데모와 집회를 결과했다. 이 운동의 최고조는 응예 띵 소비에트(Nghe Tinh Soviet)의 건설이었다. 이로 인해 대대적인 탄압을 당한 공산당은 1930년대 국내외에서의 재건운동에 힘을 다했다. 1934년 말에 재조직을 일단락하고 1935년 3월에는 처음으로 당대회를 개최한 공산당은 1935년 코민테른 7차대회와 1936년 프랑스인민전선의 승리를 계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공개운동과 합법운동의 기치 아래 ‘문화 투쟁’을 전개하여 공산주의 이론을 저변에 확산시켰다. 또한 소금과 술에 대한 정부의 전매권 폐지,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 보장, 교육제도 확대를 포함한 민주적인 개혁 운

동에도 매진했다. 그러나 1939년 프랑스 인민전선정부가 실각하자 탄압은 재개되었으며 대다수의 지도자가 체포되고 조직망은 와해되었다. 살아남은 농촌의 기반도 1940년 말 남부에서 일어난 남 끼(Nam Ky) 봉기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4) 아시아민족주의 운동에서 차지하는 베트남민족주의 운동의 특징

III. 베트남 현대사의 전개

1. 1945년 두 차례의 독립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자, 일본은 중국전선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유럽의 식민지인 동남아를 점령하려는 야욕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일본은 프랑스와 교섭하여 1940년 9월에는 북부 베트남에, 1941년에는 남부에 군을 진주시켰다. 일본군과 협력하여 프랑스식민정부를 타도하고자 하는 정치 세력(까오 다이, Cao Dai, 高臺와 호아 하오, Hoa Hao, 和好)들이 신장했다. 일본의 진입과 함께 프랑스 식민주의와 일본의 파시스트와의 투쟁을 준비한 베트남공산당은 1941년 베트남 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해 베트남의 모든 계급과 정당, 단체를 규합한 광범위한 민족독립통일전선인 베트민(Viet Minh, 越盟)을 결성했다. 1942년 7월에는 중국공산당과 연락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중국국민당에 잡힌 호 쯤 민은 10월 張發奎의 도움으로 1930년 이래 중국으로 망명했던 베트남국민당원들을 모아 베트남혁명동맹을 결성했다. 유럽전선에서 비시프랑스가 무너지자 1944년 12월 공산당은 베트남해방군선전대를 창설하고 전면 봉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1945년 3월 일본군이 프랑스식민당국과의 협력관계를 청산하고 프랑스와의 보호조약을 폐기케 함으로써 베트남의 독립은 갑자기 찾아들었다. 프랑스 지배를 종결시켰지만 이를 대신한 일본군정 하에서 ‘독립국’이 된 베트남의 명목상의 왕은 바오 다이(Bao Dai, 保大), 수상은 쩌 쩌 김(Tran Trong Kim, 陳重金)이 이끌었다. 일본군의 프랑스 타도가 베트남에 독립을 가져올 수 없다고 보고 계속 무력 투쟁을 진행시켜 온 베트민은 1945년 8월 초 일본의 패망이 가까워지자 총궐기를 결의하고 전국적인 봉기를 단행했다. 8월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봉기가 승리하여 9월 2일 호 쯤 민은 베트남의 독립을 선언하고 베트남민주공화국이 탄생했다.

[심화논의문제: 일본군국주의의 경험에 대한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적 기억과 인식의 문제]

2. 베트남의 독립 전쟁

그러나 2차대전 후 프랑스는 베트남으로 복귀했고, 베트남은 세계냉전 체제 속에서 프랑스에 대한 독립전쟁(제1차인도차이나전쟁)과 미국과의 전쟁(제2차인도차이나전쟁)을 치러야 했다. 즉 베트남에게는 30년간이나 지속될 독립전쟁이 남아 있었다. 베트남의 독립이 선언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위 16도선을 경계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목으로 북으로는 중국 국민당 군대가 남으로는 영국 군대가 진주했다. 곧 프랑스군은 영국군을 대신하여 16도선 이하 베트남에 대한 지배를 재개했다. 호찌민이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를 인정하고 프랑스는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자유국가로 인정하는 협상에 이어 중국 국민당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독립을 고수하려는 베트남과 식민지배를 재개하려는 프랑스가 급속한 냉전의 기류 속에서 전쟁으로 치달았다. 프랑스는 1950년 전 황제 바오 다이를 수반으로 한 베트남국(State of Vietnam)에 독립을 부여하여 반공적이거나 중립적 민족주의자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자를 대적하게 하여 이념을 무기화하여 갈등을 베트남화하려고 했다. 중국에서 공산당의 승리와 한국 전쟁의 발발로 냉전이 아시아로 확대되면서 미국은 프랑스를, 중국은 베트남을 지원했다. 결국 1954년 디엔 비엔 푸(Dien Bien Phu, 顛邊府)전투에서 북베트남에 패배한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했다. 그러나 제네바협정으로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베트남 국토는 분단되었다. 북부에는 베트남민주공화국이 존속하고 남부에는 바오 다이 정권 하에서 수상으로 재직했던 응오 딘 지엠(Ngo Dinh Diem, 吳廷燦)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공화국을 수립했다. 이후 남북베트남의 대외관계는 물론 이념과 경제, 문화적 틀은 두 냉전 체제의 이분법에 그대로 포섭되면서 발전했다. 한편은 중국, 북한,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과 다른 한편은 미국, 서유럽, 남한, 태국, 필리핀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 냉전의 국제연대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도 남베트남에 군을 파견하고 북한은 북베트남의 전투를 도왔다. 남베트남의 북베트남 대응 능력에 회의를 품은 미국이 1964년 통킹만을 폭격하고 1965년 다낭에 미육군을 파견함으로써 직접 전면적으로 전쟁에 개입했다. 남베트남에서 결성된 베트남민족해방전선(Viet Cong, 越共)과 힘을 합한 북베트남군이 벌인 구정공세(Tet Offensive)는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다. 4년간의 협상의 결실인 1973년 파리평화협정 체결로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했다. 베트남의 독립국가라는 염원은 달성된 것이다. 1975년 북베트남이 미국의 지지를 잃고 고립된 남베트남을 공격·점령함으로써 베트남은 통일되었다. 1976년 통일된 베트남은 사회주의공화국임을 선언하고 남부의 사회주의화 작업에 들어갔다.

냉전의 해빙기도 베트남에게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 사회주의권의 내과 과정에서 발생한 제3차인도차이나전쟁이라고도 부르는 전쟁 때문이다. 베트남은 1978년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주군과 1979년에는 중국과 전쟁을 치렀다. 1978년 베트남군은 중국을 배경으로 베트남인을 학대하며 남부베트남 지역으로 간헐적으로 침입하는 크메르 루주군을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캄보디아에 출병했다. 그리고 프놈펜에 친베트남 인사를 권좌에 앉혔다. 중국은 이런 베트남을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베트남에 출병했다. 중월전쟁에는 베트남에 대한 응징 외에도 여기에는 이념문제, 영토문제, 국경문제, 중국인(화인) 학대, 그리고 인도차이나에서 베트남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등의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심화논의문제: 베트남전쟁이 갖는 ‘아시아전쟁’으로서의 국면들]

3. 베트남의 체제개혁

1976년 이후 베트남은 특히 남부의 사회주의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1980년 중반에 이르러 심각한 국내의 정치·경제 문제의 부상과 세계 사회주의 체제의 변동에 대응해야 했다. 베트남공산당은 체제유지를 위해 근본적인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제한적인 정치개혁을 실시하게 되었다. 1986년 제6차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지도자가 된 응우옌 반린(Nguyen Van Linh, 阮文靈)은 도이 머이(Doi Moi, 刷新)를 주창했던 것이다. 개혁·개방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자유화와 개방화는 베트남을 동남아(1995년 아세안 가입), 한국(1992년 외교관계 정상화), 미국(1995년 외교정상화, 2000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비롯한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심화논의문제: 중국의 ‘개혁개방’과 베트남의 ‘도이머이’의 관계 그리고 북한사회의 개방문제]

위의 기술 내용은 베트남근현대사의 기본 프레임을 형성하게 된 정치적 사건과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기술되었다. 이는 동아시아 역사의 주요 구성 국가 중의 하나인 베트남의 근현대시기에 대한 우리들의 앎의 수준이 한·중·일에 대한 역사지식과 비교하여 많이 처져있다는 판단에서 연유했다. 그러나 강의의 목적은 베트남이라는 ‘공백’을 채워 동아시아의 근현대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야를 확보한다는 범위를 넘어서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충분과는 거리가 멀지만 베트남의 역사적 경험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갖는 의미와 맥락을 글 중에서 언급하거나 혹은 심화논의문제로 남기고 있다. 강의와 논의를 통해 쉽지 않은 이 문제를 사유하는 방법론을

하나씩 찾아가리라고 본다.

베트남의 근현대사역사에서 동아시아가 갖는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이 연수교재를 마무리하려 한다. 근현대사를 통해 베트남에게 동아시아가 갖는 의미는 각국이 당면한 사안과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다음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식민시기 독립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베트남에 동아시아는 연계하여 상호협력하거나 지원을 바랄 수 있는 대상이었다. 베트남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중국은 베트남의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 모두에게 반식민운동의 주요한 터전이였다. 베트남에게 일본은 러일전쟁 후 베트남의 개혁 모델로서 그리고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에 원군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대상 국가였다. 동유운동과 쯔엉 데의 활동 모두 이로부터 연유했다. 그 밖에도 조선을 비롯하여 여타의 다른 동아시아국가들도 반제연대에서 구체적이든 피상적이든 동지의 나라라는 위치를 점했다. 독립과정과 냉전의 시기에 베트남은 동아시아의 적대적인 태도와 마주했다. 일본의 베트남 점령과 통치, 1945년 8월혁명 이후 베트남에 결코 우호적이라고 할 수 없는 중국국민당의 북베트남으로의 진주, 베트남이 원하는 방식으로서의 혁명과 통일을 원하지 않았던 중국의 태도 등이 그 예이다. 제1·2차 인도차이나 전쟁 과정에서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적대적인 움직임에 대응해야 했으며 필리핀과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국가들로부터도 냉대를 받았다. 탈냉전의 시기에 베트남은 사회주의 형제국인 캄보디아, 중국과 전쟁까지 비화되는 역사를 경험했다. 현재는 중국과의 영토문제 일본과 한국과의 과거사문제가 잠재하고는 있지만 베트남이 동아시아 세계와 어찌 보면 역사상 가장 긴밀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 역사에 대한 심화 이해와 교육에 도움이 되는 기존참고서적]

- 『새로쓴 베트남의 역사』 (유인선, 민음사, 2002)
- 『베트남 역사 읽기』 (송정남,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0)
- 『베트남 들여다 보기』 (조재현·송정남, 2008)
- 『한국과 월남과의 관계』 (최상수, 한월협회, 1966)
-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사』 (오구라 사다오, 박경희 옮김, 일빛, 1999)

‘동아시아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신선호(교육과학기술부)

— < 내 용 목 차 > —

- I. 2009개정교육과정과 역사과
- II. <동아시아사> 신설 배경과 경과
- III.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이해
- IV.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V. 향후 과제와 역사교사의 역할

I. 2009개정교육과정과 역사과

1. 역사과의 미래

- o D. Layton의 교과변천론
 - 초기단계(탄생기)
 - 중간단계(성장기)
 - 최종단계(쇠퇴·소멸기)
 - ※ 역사과는 어느 단계에 해당될까?
- o 미래의 교육과 역사과의 운명
 - 미국 수능시험(SAT)에서 계산기 사용은 이미 수년 전부터 허용되었고, 몇 개 주는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PDA 휴대의 허용이 논의되고 있음
 - ※ 수능에서 인터넷 검색이 허용된 후에도 역사과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 o 수능 선택에서 소외되는 역사과

수능 연도	국사	세계사
2005 학년도	5위	10위
2006 학년도	6위	11위
2007 학년도	7위	11위
...
2010 학년도	7위	11위

○ 와그너의 7가지 교육 핵심기술

※ 미국 교육이 시험을 잘 보는 교육에 주력하고 있어 21세기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7가지 핵심기술을 제안

- 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
- 협동심 및 영향력 있는 리더십
- 적응력
- 이니셔티브 및 기업가 정신
- 효과적인 발표력 및 작문 실력
- 유용한 정보탐색 및 분석능력
- 호기심과 상상력

※ 역사과는 이러한 미래 교육 가치를 포괄하고 있는가?

2. 2009 교육과정 개정

○ 추진 배경

- 세계 환경과 국가 위상의 변화와 인재 육성 전략의 재조정 요청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를 지향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을 제안¹⁾

○ 추진 경과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미래형교육과정구상(안) ('09.8.17)
-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09년 2월부터 8차례)
- 2009 개정교육과정위원회, 고교 2·3학년 선택과목 수 8개 축소 권고('09.9.21)
- 고등학교 사회탐구 영역 선택과목 조정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세미나 ('09.9.30)
- 역사(교육)학계 36개 단체, '2009 개정교육과정 졸속 추진에 대한 역사(교육)학계의 입장' 성명서 발표('09.10.13)
- 도덕·사회과 선택과목 개정시안 공청회('09.11.25)
-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09.12.23 예정)

○ 추진 방향

- 학습부담의 경감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조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

○ 추진 내용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군을 7개로 조정
- 사회과와 도덕과를 통합하여 '도덕·사회과'로 변경
- 고교 2~3학년 선택과목 수를 4개영역(역사, 지리, 일사, 도덕)에 각각 2개씩 할당

1)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미래형교육과정구상(안), 제8차 국민대토론회 자료, 2009.7.24

3. 2014학년도 수능체제 개편 시안

현 행	개편 시안
윤리	윤리(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
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한국사, 세계사(세계사 + 동아시아사)
법과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일반사회(법과 정치+ 사회·문화), 경제
총 11과목(최대 4과목 선택)	총 6과목(최대 1과목 선택)

4. 역사과 교육과정의 변화

- 기본 방향
 - 10학년(고1)까지 '역사' 과목 유지
 - 11~12학년(고2·고3) 선택과목 수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축소
- 선택과목 조정 시안들 :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동아시아사 제외하는 방안
 - 한국문화사를 그대로 두고, 동아시아사를 세계역사의 이해 과목에 흡수하는 방안
 - 세계역사의 이해 과목을 동아시아사와 통합하여 새롭게 재구성하는 방안
 - 한국문화사, 세계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3개 과목을 완전히 해체·재구성하는 방안
 - 한국문화사와 동아시아사를 새롭게 통합하는 방안
- 논쟁점
 -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모순적 결합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 것인가?
 - 동아시아사를 살릴 것인가?
- 최종 확정·고시안
 - 결국 동아시아사는 살아남았다! 왜?

II. <동아시아사> 신설 배경과 경과2)

1. <동아시아사> 신설 배경

- 주변국의 역사왜곡
- 기존 역사교육에 대한 반성
 - 국사교육에서의 과도한 민족주의 문제
 - 세계사 교육에서의 지나친 서구중심성 문제
 - 재미없는 역사 교과서
- 유럽 교과서 대화의 성과
 - 독일-프랑스 공동역사교과서

2) 교육과정은 해당 시기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면서 개정을 거듭해 오고 있다.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국가사회적 요구, 학문적 요구, 학습자 요구로 나뉜다. 동아시아사 신설에 영향을 준 요소 중 주변국 역사왜곡 대처의 필요성은 국가사회적 요구에 해당되고, 기존 역사교육에 대한 반성은 학문적 요구와 학습자 요구에 해당된다.

- 독일-폴란드 공동역사교과서
- 한·(중)·일 공동역사교재 개발 경험의 축적
 - 『조선통신사』('05.4) : 한·일 지역 교사 모임간의 교과서 협력
 - 『미래를 여는 역사』('05.5) : 한·중·일 시민, 교사, 학자간의 역사 대화
 - 『마주보는 한일사』('06.8) : 한·일 전국역사교사단체간의 교과서 협력
 - 『한일교류의 역사』('07.3) : 학문적 차원의 차분한 역사대화의 결실

2. <동아시아사> 신설 경과

- 2006. 11. 27. 역사교육강화방안 부총리 결재
 - 중등 '역사' 과목 독립, 고교 1학년의 역사 수업시수를 3시간으로 확대
 - 고교 선택과목으로서의 <(가칭)동아시아사> 신설
- 2006. 12. 21.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안 토론회
 - 고교 선택과목에 <동아시아사> 포함
- 2006. 12. 26. 역사교육강화방안 발표
 - <동아시아사> 신설 공식 발표
- 2006. 12. 22.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개발 1차 회의
- 2007. 1. 27.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개발 토론회
- 2007. 2. 6.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교육과정 심의회에 상정
- 2007. 2. 19.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 보고서 제출
- 2007. 2. 28. 개정 교육과정 고시

3.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개발 개요

□ 개발 기간 : 2006년 12월~2007년 2월

□ 기본 방향(교육부 안)³⁾

-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 간 조성되고 있는 역사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 역사인식을 만들어 갈 필요성에 부합하는 내용
-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기반 마련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
- 동아시아사가 다루는 영역은
 - 공간적으로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고
 - 시간적으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전 시기를 포괄하며
 - 내용적으로는 한·중·일 3국의 교류와 갈등의 역사를 통해 한·중·일 역사 갈등 해결의 방향을 모색

□ 일부 수정안(개발진 안)⁴⁾

- <동아시아사>를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자 문화권에 속했던 베트남까지를 포함하되,

3) 내부자료, <(교육과정 개발의) 기본방향>, 2006. 12.

4) 안병우 외,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 2007

주제에 따라 범주의 변화가 가능

- <동아시아사> 신설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으로부터 한 발 벗어난 외부에서 3국이 포함된 세계를 볼 필요가 있음

Ⅲ.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이해

1.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동아시아사에 대한 접근 방향 세 가지⁵⁾

- ① 주변 나라의 역사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입장
 - 주변국가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균형감을 가지고 자기 역사를 이해할 수 없음
 - 예 : 미래를 여는 역사
 - 한계점 : 국가사의 관점에서 서술되어, 동아시아사로 통합되었다기 보다는 세 나라의 역사를 병렬적으로 모아놓은 데 지나지 않다는 비판 제기됨
- ② ‘동아시아’라는 틀 속에서 관계사는 물론 각국의 역사를 통합하려는 관점
 - 예 : ‘동아시아 문화권’ 개념
 - 한계점 : 기존의 국가를 단위로 한 내셔널리즘을 동아시아라는 단위로 확장한 것에 불과할 우려
- ③ 세계사적 맥락에서 동아시아를 파악하는 관점
 - 역사교육이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
 - 비판 : 일본의 진보 세력의 관점이나,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일본의 침략과 전쟁 책임을 회색시킬 우려

□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적용된 세 가지 접근 방향

이 세 가지 접근 방향은 서로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은 세 가지 접근 방식이 모두 적용됨

- ① 주변 나라의 역사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입장의 예
 - “(5)-① 각국에서 개항이 가지는 의미와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의 양상을 비교한다.”
- ② ‘동아시아’라는 틀 속에서 관계사는 물론 각국의 역사를 통합하려는 관점의 예
 - “(2)-④ 동아시아 외교 형식인 조공·책봉 관계를 각국의 상호 필요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
- ③ 세계사적 맥락에서 동아시아를 파악하는 관점의 예
 - “(5)-④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노력과 국제 연대에 대해 알아본다”

□ <동아시아사>의 성격

5) 김한중 외, 「한중일 공동역사교재 개발 연구」, 2007

- ‘나를 중심으로 국가<지역 세계<세계’로 점차 역사 인식의 범주를 동심원적으로 확대해 갈 때 자국사와 세계사의 중간에 위치하는 지역 세계사, 중간 범주의 세계사
 - 한국사를 포괄하는 개념이면서 동시에 세계사에 포괄되는 개념
 - <국사>와 <세계사>의 단절 극복
- 한국인이 쓰는 동아시아사, 우리의 시각에서 본 동아시아 지역사(주체성)
 - BUT 한국사의 배경으로서의 동아시아사 (×)
- 동아시아 각국사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 단위로서 역사 이해의 대상이자 실천의 대상이 되는 범주
 - BUT 배타적 지역주의 (×)
- 더 큰 세계를 향해 열려 있어야(개방성)
 -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

2.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구성⁶⁾

□ 구성 요소 및 특징

- <동아시아사> 교육과정도 다른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크게 ‘성격’ ‘목표’ ‘내용’과 기타 ‘교수·학습방법’ ‘평가’로 구성
- 이번 교육과정의 진술은 각 단원별로 대강화(大綱化)된 성취기준만을 제시 → 교과서 저작의 재량권을 강화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유도

□ 성격 및 목표(왜 배우는가?)

- 성격(과목 설정의 근거)
 - 지역 내 공동체 상호 간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나름의 정체성 형성(과거)
 -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 단위(현재)
 -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공동의 평화와 번영 이룩(미래)
- 총괄 목표(과목 설정의 목표)

‘동아시아사’ 과목은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전개 과정을 주체적이고 개방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이 지역의 특성과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목표를 둔다.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을 기르고,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 동아시아 지역의 특성과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지식·이해)
-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 하는 자세를 갖게 하는 것(가치·태도)
- 하위 목표(관점·태도)
 -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안목을 키움(주체성)
 - 다양성 탐구 →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개방성)
 - 교류와 갈등 요소 탐구 → 문제 해결의 방향 모색(실천성)
- 하위 목표(구성 방식) : 시대별·주제별 접근
 - 기존 역사 교과서의 망라적 서술은 학습자의 흥미를 감소시킴
 - 망라적 서술을 극복한 주제 중심의 구성

6) 교육과학기술부, 『동아시아사 해설서』, 2009 (예정) ; 정연,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 체계」, 『동북아역사논총』19호

※ 낱알 낱알 서말의 구슬 보다는 잘 켜어진 한 말의 구슬이 낫다.

□ 내용 체계(무엇을 어떻게 배우는가?)

○ 내용 선정의 기준(무엇을)

- 각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는 것, 지역 내 각 집단 간에 공통적이거나 연 관성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선정
- 지역적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를 중시
-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과 교류를 사실 그대로 인식하고, 역사적으로 동아시아가 긴밀한 교류를 통해 공통의 문화유산을 축적하게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류, 국제관계 등의 다양한 분야가 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배려
- 고등학생의 이해 수준과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너무 단순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주제는 배제하고 탐구학습이나 주제학습이 용이한 주제로 선정

○ 내용 조직의 원리(어떻게)

- 기본 교육과정인 역사에서 배운 통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주제별 구성
- 탐구학습, 비교학습 등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대단원 6 개, 성취기준 26개라는 비교적 적은 분량을 제시
- 대단원은 고대-중세-근대라는 시대 구분법을 탈피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커다란 사회변 화에 따라 크게 시기를 구분
- 각 대단원에서 다룰 시기범위는 현대에 가까울수록 촘촘하게 하되, 지역마다 사회 발전 의 정도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대체로’ 라는 표현을 써서 각 단원에서 다루어야 할 시기에 융통성 부여
- 대단원명은 ‘고대, 중세’, ‘형성, 발전’ 등과 같은 시대구분적 성격이 강한 용어를 피하고 해당 시기에서 다룰 내용을 함축하는 용어를 사용

<동아시아사>의 내용 요소

영역(대단원)	내용 요소	해당 시기	주요 왕조·사건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선사 문화, 농경과 목축, 국가의 성립과 발전	선사 ~기원 전후	고조선, 진·한, 남월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지역간 인구이동과 전쟁, 고대 불교, 율령과 유교에 기반한 통치 체제, 동아시아 국제 관계	기원전후 ~10세기	삼국 통일, 당, 일본의 성립, 베트남독립,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북방 민족,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소농 경영, 문신과 무인, 성리학	10~16세기	고려, 조선, 송,몽골,명, 무로마치 막부
국제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 은 유통과 교역망, 인구 증가와 사회경제, 서민문화, 각국의 독자적 전통	16~19세기	동아시아 전쟁, 청, 조선 소중화, 일 에도막부

국민 국가의 모색	개항과 근대 국민국가 수립, 제국주의 침략, 민족주의와 민족운동, 평화를 지향한 노력, 서구 문물의 수용과 변화	19세기중반 ~1945년	개항,아편전쟁, 대만·조선침략,중일 전쟁,태평양전쟁
오늘날의 동아시아	전후 처리 문제, 동아시아에서의 분단과 전쟁, 각국의 경제 성장, 정치 발전, 갈등과 화해	1945년 이후	국교회복, 전쟁, 경제성장,민주화

□ 각 단원별 주요 내용 및 서술상의 유의점

○ 1단원 :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 동아시아사 학습의 중요성을 확인한 후, 동아시아사 전개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 다양한 선사문화, 농경과 목축으로 대별되는 생산경제, 국가의 성립과 발전 등을 차례로 다룸
- 황하문명 혹은 중국 문명 중심의 단선적인 문명발전론이나 농경문화 우위론 같은, 지역 내 정치, 문화 집단을 우열로 구분하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동아시아 문명의 다양한 기원과 갈래를 있는 그대로 드러냄

○ 2단원 :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 각 지역에서 여러 국가와 정치 집단이 분열·통합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과 인구 이동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어 각 지역에 기반을 확고히 한 국가들 간에 이루어진 문화 교류(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와 외교 관계(조공·책봉)를 탐색
- 현재의 국민국가의 원형이 형성되기 이전의 시기를 다루는 이 단원에서는 현재의 국민국가적 관점을 과거로 소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

○ 3단원 :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 몽골제국의 성립 과정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이후 동아시아 사회의 변화를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를 중심으로 살펴봄
- 몽골제국을 통해 동아시아의 범위를 넘어서는 세계와의 소통을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라는 지역 세계가 다른 지역들과 함께 세계를 구성하는 범주임을 이해시킬 필요. 또 농경민족과 비교되는 북방민족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되 자칫 그들의 군사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미화하거나 전쟁의 참상을 빠트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

○ 4단원 : 국제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 세계에서 갖는 국제전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동아시아 교역망을 중심으로 국제 무역의 흐름을 살펴봄, 이후 각국의 정치적 안정 속에서 ‘각국의 독자적 전통’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서술
- ‘임진왜란’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쟁’으로 표현한 것처럼 일국사(한국사)적 관점에 매몰되지 않고, 시야를 동아시아 전체로 넓혀 동아시아 세계를 역동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음

○ 5단원 : 국민국가의 모색

- 동아시아가 침략과 지배, 그리고 저항의 격동기를 겪으며 재편되는 과정을 국민국가의 모색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개항 전후의 시기를 통해 현대 동아시아 각국간 갈등의 원인 파악
- 일본을 포함한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다루되 그것에 저항하면서 국민국가, 민족주의를 성취해나가는 동아시아인의 의지와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것.

○ 6단원 : 오늘날의 동아시아

- 1945년 이후 전후 처리와 국교 회복, 전쟁 등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냉전체제가 형성되

고 변화하고 해체되는 과정과 탈냉전 시기에 여전히 풀지 못한 갈등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다름

- 제국주의 침략과 이에 대한 저항, 냉전 체제의 전개 과정에서 베트남의 민족 운동과 통일 과정에서 베트남에 주목할 필요. 동아시아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호 갈등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을 탐구하여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함.

IV.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1. 학생들의 동아시아 역사인식 현황⁷⁾

□ 한겨레신문의 설문조사(2005.5)

- 대상 : 서울 신도봉중학교, 도쿄 쇼사이 중학교, 허베이성 초급 중학교
- 내용 : 20문항 100점 만점의 근현대사 공동시험
- 결과 개요
 - 3국학생 각각 45점 안팎의 낮은 평균 점수
 - 자국사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정답률
 - 3국 관계사 등 동아시아 근현대사 : 20~30% 낮은 정답률
- 해석 : 3국 모두 자국사 중심으로 역사교육이 이루어져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종합적 인식이 부족

7) 김한중 외, 「한중일 공동역사교재 개발 연구」, 2007

o 설문 반응 사례

중국 학생은 청일전쟁을 몰라요

문)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세요. (정답 = O)
청일전쟁 = 1894년 조선에서 일어난 농민봉기를 진압한다는 구실로 출병한 청과 일본 군대가 한반도 및 그 주변에서 벌인 전쟁.

★ 각 나라 학생별 정답률 (단위:%)

한국	64.3
중국	40.0
일본	58.3

일본 학생은 일본군 위안부를 몰라요

문) 다음중 잘못된 설명은? (정답 = ③)

① **난징학살** =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이 저지른 중국 민간인 학살사건
 ② **731부대** = 일본 관동군이 중국 하얼빈에 주둔시킨 세균전 부대
 ③ **일본군 위안부** = 군대의 오락위문공연을 담당한 일본 여성 예술가들
 ④ **3·1운동** = 조선에서 일어난 항일민족독립운동

★ 각 나라 학생별 정답률 (단위:%)

한국	78.6
중국	68.0
일본	45.8

한국 학생은 2차 세계대전을 몰라요

문)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설명 가운데 옳은 것은? (정답=③)

① 도쿄대공습은 2차 대전 말기 중국이 일본 본토를 무차별 폭격한 사건이다
 ② 오키나와전은 오키나와 주민들이 일본침략에 저항해 벌인 전투다
 ③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은 항일동맹을 맺어 일본과 전쟁을 치렀다
 ④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오사카 교토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 각 나라 학생별 정답률 (단위:%)

한국	32.0
중국	60.0
일본	62.5

□ 수업 반응 조사(2001)

- o 대상 : 광장중학교 3학년
- o 조사자 : 문주영 교사
- o 내용 : 1945년 원폭 투하를 다루는 수업을 한 후 소감
 - 가족을 잃은 일본 피폭 어머니의 이야기 자료 제시
- o 반응 결과

중립적 답변 (19)	전쟁 때문에 상관없는 사람들이 죽어간다./ 원자폭탄은 무시무시한 무기로써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공격으로 일본에 많은 인명피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이 불쌍하게 느껴진다./ 불쌍하고 안타깝다./ 이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불쌍하다./ 너무 큰 욕심은 화를 부른다./ 전쟁이지만 너무 심했다./ 원자폭탄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살기 위해 인간을 죽이는 도구를 만들어낸다./ 일본인들이 불쌍하다./ 잔인하다./ 차라리 총이나 칼로 죽이는 게 덜 잔인할 것이다./ 인류의 놀라운 발명품이며 부작용도 크다.
부정적	쌈통이다./ 고통스럽게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자국민의 고통을 안다면 다른 국가

답변 (13)	<p>에 대해서 잔인하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나라에 피해가 없을 정도의 좀 더 강력한 폭탄이 터져서 일본이 침몰했으면 좋겠다./ 통쾌하다./ 또 떨어졌으면 좋겠다./ 슬프긴 하지만 잘됐다./ 일본이 짓값을 치른 것 같다./ 일본이 불쌍하긴 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대가이다./ 불쌍하지만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하면 조금은 고소하다./ 일본이 우리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미국이 고맙다./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지만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p>
------------	--

- 해석
 - 상대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적개심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한계

2. 한·(중)·일 공동역사교재의 쟁점⁸⁾

□ 조선 통신사

- 한국 교과서 : 일방적인 선진문물의 전달자로서의 조선의 역할을 강조
- 일본 교과서 : 통신사의 문물 전수는 언급하지 않고, 통신사를 장군 취임시 파견하는 사절로 기술하여 일본 우위의 입장을 견지
- 『조선통신사』
 - 조선 침략에 반대한 일본인들과 함께 전쟁에 동원된 일본 민중의 고통을 서술하여 전쟁이 한일 민중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강조. 그리고 당시 조선군에 투항했던 일본군 병사가 사야카를 비롯해 1만 명에 달했던 사실을 서술
 - 조선통신사 파견에서는 쓰시마섬 번주의 국서위조와 이에 대한 양국의 묵인, 조선 임금과 도쿠가와 쇼군이 주고받은 선물과 히로시마 번과 후쿠야마 번의 접대 내용, 조선통신사들이 학자들과 유학을 논하며 교류하거나 민간과 교류했던 사실을 서술
- ⇒ 전쟁이라는 극단적 충돌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화해와 교류의 문제를 다룰 경우, 승자와 패자, 가해자 혹은 피해자 어느 한 편에 서야 하는 자국사적 시각에서는 서술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함

□ 왜구

- 한국 교과서 : 왜구를 당연히 일본인 해적으로 인식하며 민족항쟁사의 시각에서 서술
- 일본 교과서 : 전기 왜구에 조선인이 많았다고 기술했고, 후기 왜구에는 구성원의 대부분이 중국인이었다고 서술(후소샤), 일본인이 주체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약탈보다는 무역행위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임(다른 7종)
- 『마주보는 한일사』 : ‘고려를 침략한 왜구’와 ‘동아시아와 왜구’라는 항목을 각각 한일이 서술하면서 왜구의 주체와 활동 성격을 둘러싼 논란을 별도로 정리하여 소개하는 방식을 취함
- ⇒ 이처럼 왜구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왜구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음. 한편, 지금까지 연구가 너무 자국사 중심이기 때문에 발생한 인식 차이라는 비판도 있음.

8) 김정인, 「한국사 속의 동아시아」, 2008

□ 일본군 '위안부'

- 한국 교과서 : 강제 동원되어 성 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사실을 적시
- 일본 교과서 :
 - 대부분의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에 관해 서술하지 않고 있음(후소샤, 동경서적)
 - 1997년 판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7개 출판사가 모두 일본군 '위안부'를 기술한데 반해, 2002년 판부터는 8개 출판 중 3개사만이 서술하는 등 점차 배제되는 추이
 - 게다가 2005년도 판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 일본서적신사의 경우라도, 위안부라는 단어와 강제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음
- 『미래를 여는 역사』
 - 관련 실태 및 사례와 함께 이런 비극을 극복하려는 전후 여성운동의 활약까지 모두 7쪽에 걸쳐 상세히 설명
 - 한국과 중국 여성 피해자들은 물론 당시 군 위안소를 설치한 일본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함께 서술,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가 체계적 조직적으로 주도한 전쟁범죄라는 것을 고발
 - ⇒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역사 인식 공유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

□ 기타 : 삼국의 문화 전파, 조공과 책봉, 임진왜란, 청일 전쟁, 원폭 투하 등

3. 극복 방안⁹⁾

□ 연관사

- 개념 : 교류와 왕래를 포함하는 직접적인 상호 관계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상호영향 및 논리적인 연관성까지 포함하여 일국사의 범위를 넘어 파악하기 위한 원리
- 예시
 - 조선의 자주독립이 동아시아 평화를 지킴
 - 당의 고구려 멸망 → 동북아 안정의 균형추 붕괴 → 동북 유목민족의 흥기 → 동북아가 전란에 휩싸임
 - 조선의 자주권 훼손 → 만주침략 → 중국침략 → 동아시아 전체가 전란에 휩싸임
 - 몽골의 침략에 대한 고려인과 베트남인의 저항 → 일본 원정을 지연/저지
 - 7세기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당에서 승리 ← 당과 토번의 전쟁
 - 조선의 멸망 → 신해혁명 촉발 → 조선과 베트남에 공화주의 확산
 - 베트남 전쟁 → 중국의 문화대혁명, 남북한의 병영국가화

□ 비교사

- 개념 : 연관사로 파악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동아시아 차원의 비교를 시도함으로써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차이의 원인을 탐색하는 사고의 실험을 풍부하게 하는 원리

9) 유용태, 「동아시아사의 의미」, 『2009년 공계 동아시아사 교원연수-대전연수교재』, 2009
황지숙, 「상대화 중심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교육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예시

-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화를 다루는 단원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 : 일본의 근대화 성공 비결은 신속한 서구의 문물과 제도의 적극적 도입 → 각국의 사회조건의 차이, 지배 엘리트의 차이, 외압의 차이 등을 비교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 필요 (경종 449)

□ 주변의 시각

- 개념 : 서구 중심에 대한 동아시아의 시각, 중국·일본의 중심에 대한 주변부의 시각, 지배층에 대한 피지배층의 시각, 소수민족, 사회적 약자의 시각을 통해 역사상을 풍부하게 하는 원리

○ 예시

- 조공책봉체제를 중국 중심의 일방적 관계가 아닌 주변국의 정치·경제적 동기에 따른 쌍방향적 관계로 이해
- 일본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일본 국민이 되어야 했던 아이누 민족과 중국이 1951년 군사적으로 점령한 티벳 민족 (손 98 사진)
- 2차세계대전을 1945년 원폭 투하로 가족을 잃은 일본 피폭 어머니의 이야기로 재구성
- 일본군 ‘위안부’를 통해본 태평양전쟁

4. 수업지도안 만들기 실습

-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모형단원’의 4개 단원 중에서 1 단원을 골라 각자 수업 지도안을 작성해보세요.
 - 연관사, 비교사, 주변의 시각 등의 관점을 활용해서 작성할 것
 - 각 단원은 학습내용에 따라 탐구학습·인물학습·비교학습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위해 토론, 발표, 논술, 조사, 사례 연구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것
 - 3시간 분량으로 작성할 것

V. 향후 과제와 역사교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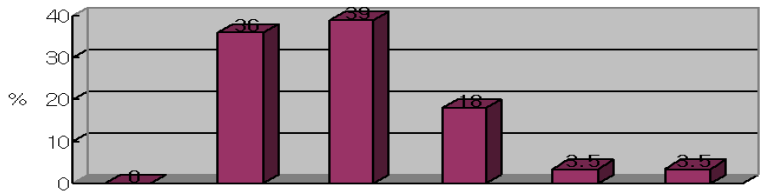
1. 현황 및 과제

□ 현황¹⁰⁾

- <동아시아사>에 대한 높은 관심 : <동아시아사> 선택 여부 설문 조사 결과
 - ① 응답 : 예(76%), 아니오(24%)
 - ② ‘아니오’라고 응답한 이유

10) 황지숙, 「한국 중·고등학교 역사교사들의 동아시아사 교육인식」,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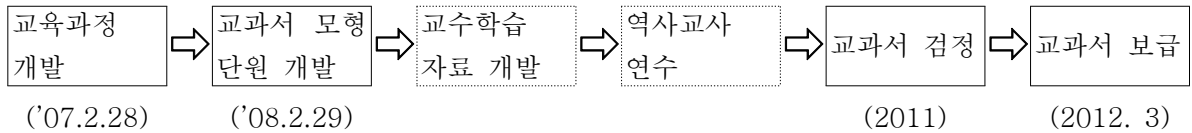
2011학년도 통계 동아시아사 교원 연수(대구)



구분	① 다른과목 중요	② 신설 내용 생소, 부담	③ 다른과목 통해가능	④ 교과서 내용 보고결정	⑤ 필요성 못느낌	⑥ 기타	합계
전국	0	10	11	5	1	1	28
비율(%)	0	36	39	18	3.5	3.5	100

○ 교과서 개발자들은 연구 성과와 자료 부족의 어려움 호소

□ 교과서 개발 및 후속 조치 일정



□ 향후 과제¹¹⁾

- 기초 연구 활성화
 - 동아시아사 개념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 동아시아사 역사용어 사전 편찬
 - 동아시아사 개설서 번역·편찬
- 수업 지원 체제 마련
 -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보급
 - 교사 연수

2. <동아시아사>의 현장 안착을 위한 역사교사의 역할¹²⁾

- 교과서 개발 참여 및 후속연구 결과물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 수업실천을 통한 자료의 개발
-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평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질 높은 교과서 개발 유도
- 수업 진행을 위해 교육과정을 창조적으로 재구성
-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사인식의 공유 및 교과서 협력에 앞장

11) 김정인, 「‘동아시아사’의 도전과 모색」, 『개정 교육과정과 세계사 교육(제50회 전국역사학대회 역사교육부 발표집)』, 2007, pp.56~57; 안병우 외,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2006학년도 동북아역사재단 학술연구 과제 연구결과보고서)』, 2007, pp.54~55.

12) 신선호, 「개정역사교육과정과 역사교사의 역할」, 『2007년 겨울방학 고등학교 국정 국사교과서 교원연수 교재(국사편찬위원회)』, 2008, pp.12~14.

※ <동아시아사> 관련 교사용 참고도서 추천¹³⁾

< 동아시아사 관련 >

우에하라 카즈요시 외, 『동아시아 근현대사』, 옛오늘, 2000
요시노 마코토 지음, 『동아시아 속의 한일 2천년사』, 책과함께, 2005
키시모토 미오 외,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 역사비평사, 2003
전교조 대구지부, 『조선통신사』, 한길사, 2005
한중일 교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출판사, 2005
전국역사교사모임, 『마주보는 한일사』, 사계절, 2006
역사교과서연구회, 『한일교류의 역사』, 해안, 2007
일본역사교육자협의회,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 역사와 일본』, 동아시아, 2005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2007. 1,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인적자원부·서울특별시교육청, 『동아시아사 모형단원 개발 보고서』, 2008. 3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일 동아시아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 2008. 6,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2008. 12,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교재』, 2009. 1, 동북아역사재단
국립제주박물관 편, 『미술로 본 동아시아의 문화교류』, 서경, 2006
유용태, 『환호 속의 경종-동아시아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성찰』, 휴머니스트, 2006
정재정외, 『동아시아사를 만든 10가지 사건』, 창비, 2008

< 각 나라 통사 및 기타 >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2002
아사오 나오히로 외 엮음, 『새로 쓴 일본사』, 창비, 2003
고마즈 히사오 외,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이평래 옮김, 소나무, 2005
김호동, 『황하에서 천산까지』, 사계절, 2002
스기야마 마사야키, 『유목민이 본 세계사』, 학민사, 1999
정수일, 『한국 속의 세계 상, 하』, 창비, 2005
정은주 외 지음, 『비단길에서 만난 세계사』, 창비, 2005
『한국사시민강좌』 42, 특집 ‘역사상 한국인의 해외견문록’, 일조각, 2008
마즈이 야요리, 『여성이 만드는 아시아』, 들린아침, 2005
아시아네트워크 엮음, 『우리가 몰랐던 아시아』, 한겨레출판사, 2003

13) 박중현, 「동아시아사,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손에 잡히는 동아시아사』, 2009
황지숙, 「동아시아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2008동아시아사 하계연수』, 2008

발행인 : 정재정(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발행일 : 2011년 1월 2일

발행부서 : 동북아역사재단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55

전화 02-2012-6143

<http://www.historyfoundation.or.kr>

2011학년도 동계 동아시아사 교원 연수(대구)

비매품